



2020.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34호


# 한국의 불평등 연구 :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한국의 불평등 연구 :

##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 연구진

### 제1부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소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제2부

강우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편집: 국회미래연구원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발간사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곧 사회 심리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회문제로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학술연구 및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큰 시각에서 파악 하였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점차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성별, 기업 규모별, 산업별 불평등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I부에서는 전반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II부에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 한국의 경우 특히 부동산으로 초래된 불평등에 주목하였으며, 자산 불평등이 어떻게 국민의 행복과 연관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손을 댈 수 없는 수준의 계층, 성별, 고용 형태별 격차로 이어 지는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의 수준과 자산 불평등의 수준이 상당하며, 이에 이의 정책적 해소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장기적 시계로 국가의 미래를 고찰하고 우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요즘, 노동시장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를 위해 여러 내외부 연구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노동시장 불평등 집필에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이명진 교수와 안소영 박사가, 자산 불평등 집필에는 고려대학교 정치 외교학과의 강우창 교수가 수고해주셨습니다. 특히 강우창 교수는 자산 불평등 분석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DB를 분석하였으며, 부동산 자산의 실제 가치에서 나타나는 자산불평등의 변동 수준과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가 소유 가구와 전·월세 거주가구의 주관적 행복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본 보고서의 분석적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셨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여해주신 학계의 전문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도 장기전략과제 중 하나인 불평등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해나감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인 소득분배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개선에 국회미래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

총론: 서론 및 기획의도 ..... 1

## 제1부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 5

제1절 연구배경 ..... 7

제2절 연구목적 ..... 9

제2장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불평등 ..... 11

제1절 노동시장 분절과 이중노동시장 ..... 13

1. 노동분절과 노동시장의 이중화 ..... 13

2. 이중노동시장과 불평등 ..... 15

제2절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 17

1.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 ..... 17

2.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불평등 ..... 19

제3장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 ..... 23

제1절 성별과 노동시장 격차 ..... 25

1. 성별과 임금 ..... 25

2. 입직 및 경력이동 ..... 29

# 목 차

제2절 고용형태와 노동시장 격차 .....	33
1. 고용형태와 임금 .....	33
2. 고용형태와 기업복지 .....	38
<b>제4장 기업 규모와 노동시장 분절 .....</b>	<b>41</b>
제1절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과 복지 격차 .....	43
1. 기업 규모와 임금 .....	43
2. 기업 규모와 복지 .....	48
제2절 노동 불평등의 다층성 .....	53
1. 임금불평등의 다층성 .....	53
2. 복지 불평등의 다층성 .....	58
<b>제5장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동에 따른 불평등 .....</b>	<b>65</b>
제1절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변동 .....	67
1.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동 .....	67
2.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	69
제2절 지능정보사회와 노동시장 불평등 .....	74
1. 지식정보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 .....	74
2. 노동시장 불평등의 변화와 정책 .....	79
<b>제6장 결론 .....</b>	<b>85</b>
제1절 요약 .....	87
제2절 토의 .....	90

## 제2부 한국의 자산 불평등 -한국의 자산불평등과 행복격차

제1장 서론 .....	95
제2장 한국의 자산 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 .....	103
제3장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한 한국의 부동산 불평등 분석 ..	111
제4장 부동산 가격상승, 자가 소유, 행복 격차 .....	123
제1절 이론적 배경 .....	127
제2절 자료 및 변수의 측정 .....	131
1. 자료 및 분석대상 .....	131
2. 변수측정 .....	131
제3절 분석결과 .....	138
제4절 추가 분석 1 - 부동산 주기의 효과 .....	143
제5절 추가 분석 2 - 가구주와 가구원 .....	147
제6절 소결 .....	152
제5장 결론 .....	155

## 목 차

결어: 1, 2부 연구의 종합 및 합의 .....	161
참고문헌 .....	165
1. 문헌 자료 - 1부 .....	167
2. 웹사이트 .....	180
3. 문헌 자료 - 2부 .....	181
Abstract .....	189

제1부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표 2-1] 고전적 이중노동시장론과 현대적 이중노동시장론	14
[표 3-1]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현황	26
[표 3-2] 경제활동 참가율	30
[표 3-3] 비정규직 비중(2003-2019)	34
[표 3-4] 성별과 고용형태	35
[표 3-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36
[표 3-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혜택 차이	39
[표 4-1] 사회보험 가입 추이	50
[표 4-2]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50
[표 4-3]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52
[표 4-4] 기업 규모와 시간당 임금 총액	55
[표 4-5] 고용형태에 따른 연령별 시간당 임금 총액	56
[표 4-6] 고용형태에 따른 학력별 시간당 임금 총액	56
[표 4-7] 고용형태에 따른 산업별 시간당 임금 총액	57
[표 4-8] 규모에 따른 고용형태별 월평균 실노동시간	60
[표 4-9] 고용형태별 월평균 노동시간	60
[표 4-10]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61
[표 4-11]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62
[표 4-12] 노조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63
[표 4-13] 기업 규모에 따른 노조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64
[표 5-1]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 비교	72
[표 5-2]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및 노동환경 비교	75
[표 5-3] 지능정보사회에서 노동 시장의 변화	76

## 제2부 한국의 자산 불평등

[표 4-1] 변수 요약 및 기술 통계 .....	137
[표 4-2]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행복 격차에 미치는 영향 .....	138
[표 4-3] 부동산 안정기와 부동산 상승기의 비교 분석 .....	144
[표 4-4] 부동산 가격 상승과 행복 격차 - 가구주 분석 .....	148
[표 4-5] 부동산 가격 상승과 행복 격차 - 가구원 분석 .....	150



## 제1부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그림 3-1] OECD 회원국 성별임금격차 .....	25
[그림 3-2]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	26
[그림 3-3] 경력단절 여성 규모 .....	31
[그림 3-4] 경력단절 사유 .....	31
[그림 3-5] 비정규직 추이(2003-2019) .....	34
[그림 3-6] 비정규직 성별 비중(정규직 대비) .....	35
[그림 3-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전년 동월 대비) .....	36
[그림 4-1] 사업체 규모와 학력별 임금수준 .....	44
[그림 4-2] 직업에 따른 학력별 임금수준 .....	44
[그림 4-3] 사업체 규모별 분의 임금격차(1980-2018) .....	45
[그림 4-4]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 .....	46
[그림 4-5] 최근 5년간 시간당임금 수준 차이 .....	47
[그림 4-6] 사회보험 가입 추이 .....	49
[그림 4-7]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추이 .....	51
[그림 4-8]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추이 .....	54
[그림 4-9] 300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 대비 시간당 임금 차이 .....	55
[그림 4-10]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시간당 임금 총액 차이 .....	57
[그림 4-11] 기업 규모에 따른 성별 임금 차이 .....	58
[그림 4-12] 월평균 실노동시간 추이 .....	59

## 제2부 한국의 자산 불평등

[그림 3-1] 매매 거래 건수 변화, 전국, 2006-2019 .....	113
[그림 3-2] 실거래 매매 평균 거래가격 변화, 전국, 2006-2019 .....	114
[그림 3-3] 실거래 가격 기준 지니 계수 변화, 전국, 2006-2019 .....	115
[그림 3-4] 매매 거래 건수 변화, 시도, 2006-2019 .....	116
[그림 3-5] 실거래 평균 매매 거래 가격 변동, 시도별, 2006-2019 .....	118
[그림 3-6] 실거래 기준 지니 계수 변화, 시도, 2006-2019 .....	121
[그림 4-1] 서울시 권역별 주거용 부동산 매매건수 변화 .....	132
[그림 4-2] 서울시 권역별 주거용 평균 거래가격 변화 .....	134
[그림 4-3] 서울시 권역별 부동산 평균 거래가격 변화율 변화 .....	136
[그림 4-4]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 .....	141
[그림 4-5]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 - 안정기와 상승기 비교 ...	145
[그림 4-6]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 - 가구주 .....	147
[그림 4-7]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 - 가구원 .....	151

## 요약

### 제1부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임금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 노동시장의 분절 이중화의 문제는 산업구조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업과 노동복지의 안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은 대표적으로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과 고용형태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분절이 나타나고 있음. 즉 동일규모의 기업 내에서도 성별, 고용형태에 따라 분절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한국노동시장의 분절은 노동시장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시장분절을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를 중심으로 노동의 불평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노동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는 임금과 기업복지의 측면에서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동일규모의 기업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노동의 불평등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살펴보고자 함

## 2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불평등

### □ 노동시장 분절과 이중노동시장

- 분절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적·구조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분절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분절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 토대로 하는 단일한 시장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사회구조적 제약에 의해 분절되어 있다고 봄
  - 분절노동시장은 큰 측면에서 이중노동시장의 분절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입직, 승진, 임금 등에 대한 노동자의 평가가 관료제적 규칙을 따르는 1차 노동시장과 단기적 고용계약을 토대로 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고 노동자의 평가에 대한 규칙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2차 노동시장으로 살펴볼 수 있음
-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의 분절은 고용, 노동환경 등의 격차에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일지라도 노동자가 속해 있는 시장에 따라 노동자들 간의 격차가 발생함
  - 1차노동시장은 승진, 상대적 고임금, 교육훈련, 기업 복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음

-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확대로 인해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더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으며,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음

## □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의 분절은 1987년 민주화 운동과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형태, 기업 규모, 직종, 업종 등에서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과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음**
  - 노동시장의 분절은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의 분절은 서구 선진국들보다 더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더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는 노동시장의 분절을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
- **한국 노동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절현상은 크게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동일한 기업 규모 내부에서도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라 임금, 기업복지 등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은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의 분절과는 독립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서구 선진국보다 성별에 대한 분절의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노동시장의 분절을 특성을 이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보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환경 등의 측면에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고용형태, 성별 등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기업 규모 내부에서도 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임금, 기업복지 등의 차이가 나타나 다층적으로 노동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직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직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와 고용형태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능성을 높아지고 있음

### 3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

#### □ 성별과 노동시장 격차

-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임금격차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은 2002년부터 OECD 국가에서 성별 임금의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성별임금 격차의 평균이 13.8%이며, 한국은 34.6%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한국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의 임금에 6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치적으로는 2000년대에 비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와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성별임금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해석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음
  - 많은 연구에서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에 대한 요인 중 차별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여성의 결혼,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노동불평등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배치, 승진기회, 훈련, 퇴직 등의 고용차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입직 및 경력이동의 불평등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53.3%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3.5%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불안정한 취업을 경험하게 되며, 이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낮음.

## □ 고용형태와 노동시장 격차

-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분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부의 성별에 따른 격차도 존재하고 있음**

- 2019년 정규직 남성 노동자는 8백만 4만 명이며, 여성은 5백만 3만 8천 명으로 여성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대비 약 65%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은 26%~31%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40~4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업복지의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혜택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2019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급여, 노동조합 가입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사회보험 가입률 중 국민연금은 정규직이 87.5%, 비정규직이 37.9%로 나타나 49.6%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건강보험은 정규직이 91.5%, 비정규직이 48.0%로 나타나 43.5%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고용보험은 정규직이 87.2%, 비정규직이 44.9%로 나타나 42.3%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회보험 이외의 퇴직급여, 상여금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퇴직급여는 정규직이 91.7%, 비정규직이 42.9%로 나타나 48.8%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상여금은 정규직이 86.4%, 비정규직이 38.2%로 48.2%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외에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노동조합 가입, 교육 및 훈련 경험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기업 규모와 노동시장 분절

### □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과 복지 격차

- 기업 규모는 노동력 분절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기업 규모 간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저임금군에 속할수록 임금격차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1987년 이전까지 기업 규모에 따른 저임금층, 중위임금층, 고임금층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1990년 전후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형태에서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0인 미만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 격차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기업 규모에 따른 시간당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기업은 9,774원, 300인 이상 기업은 19,237로 300인 미만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 대비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기업이 18,554원, 300인 이상 기업이 33,033원으로 300인 미만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 대비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임금차이를 보이고 있음. 2019년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4.5%, 300인 미만 정규직 노동자는 57.0%, 300인 미만 비정규직노동자는 42.7%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동일규모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서도 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기업복지는 고용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은 공식부문에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기업복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의 경우도 기업 규모에 따라 복지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한국에서 기업복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기업복지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뿐만 아니라 동일규모 기업 내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업복지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 노동조합 등은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2019년 한국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고용보험 90.3%, 건강보험 90.9%, 국민연금 91.1%, 산재보험 97.7%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300인 이상 기업은 고용보험 96.2%, 건강보험 99.9%, 국민연금 98.9%, 산재보험 99.6%로 나타났으며,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보험 89.3%, 건강보험 89.4%, 국민연금 89.7%, 산재보험 97.4%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2019년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8.8%, 퇴직연금 가입률은 74.0%, 상여금 적용률은 78.9%로 나타났고,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조합 가입률 6.9%, 퇴직연금 가입률 45.0%, 상여금 적용률 48.0%로 나타나 사회보험 가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 노동불평등의 다층성

- **노동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나타나지만 동일규모의 기업 내부에서도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라서 격차가 나타나 다층적인 측면에서 노동불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은 큰 측면에서 2006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9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시간당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5인 미만 기업의 정규직이 14,980원, 비정규직이 13,090원으로 나타났고, 5~29인 기업의 정규직이 20,319원, 비정규직이 16,147원으로 나타났고, 30~299인 기업의 정규직이 22,909원, 비정규직이 15,887원으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이 34,769원, 비정규직이 22,429원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불평등 이외에 기업 규모에 따라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복지의 측면에서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음.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사회보험, 노조가입, 퇴직연금, 상여금 등에서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남**

- 노동자들의 전체 노동시간은 2006년에 비해 2019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실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의 내부의 단시간 노동자와 일일노동자의 노동시간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남. 단시간 노동자와 일일노동자를 제외한 기간제 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통해 정규직의 노동시간과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159.4 시간, 비정규직은 165.2시간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2019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서도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보험은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고용보험 20.4%p, 건강보험 34.0%p, 국민연금 37.0%p, 산재보험 0.5%p로 나타남. 또한 비정규직 내부에서 파견 및 용역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인 미만의 기업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은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30~299인 기업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제외하고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동에 따른 불평등

### □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변동

-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동의 측면에서도 고용구조, 노동자들의 직무변화, 노동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은 문제에 대한 판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 예측되고 있음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자동화된 공간에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 및 생산을 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이 확산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의 감소, 직업구조의 변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됨

### □ 지능정보사회와 노동시장 불평등

- 기술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결합은 노동환경 및 노동조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네트워크형 플랫폼 조직을 통해 공유와 협력적 활동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며, 고용, 직무변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술혁신으로 인한 이윤이 자본가들에게 돌아감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는 반면 기술의 노동력 대체로 인해 고용문제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로

봇과 자동화의 위협에 취약한 직종이 대부분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전문직과 숙련직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 긍정적 측면은 고숙련 인력의 증가와 노동자의숙련 정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정적 측면은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의 잔존과 저숙련 노동자의 소멸에 주목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기술 변화에 기반하여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자의 숙련 정도가 향상되어 작업과정에 대해 노동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업무는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유연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노동자 수준을 전반적인 향상으로 인해 노동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됨

-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 스마트공장 등이 확산됨에 따라 직무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6 결론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노동시장의 분절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노동불평등이 강화되고 있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으로 인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동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노동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격차가 나타나 다층적인 노동불평등의 양

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평등의 다층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노동불평등의 해소 또는 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산업생태계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음. 로봇과 자동화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문직과 숙련직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고용문제가 사회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될 가능성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제2부 한국의 자산 불평등

### 1 연구배경

#### □ 연구목적

- 한국의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산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부동산 실거래가 DB를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의 실제 가치에서 나타나는 자산불평등 수준과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 시군구 단위에서 구축된 부동산 불평등 지수를 서울 서베이 자료와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 변동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가 소유가구와 전월세거주가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음.

#### □ 연구의 구성

- 2장에서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함.
- 3장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하여 2006년 1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의 주택 매매거래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 양상에 대해 살

펴보았음. 자산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국가 전체 수준의 분석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시도 수준의 분석을 가미하여, 한국 부동산 불평등에서 나타난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

- 4장은 서울서베이와 실거래가 자료를 결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5개 자치구가 경험한 평균거래가의 변동이 서울시민들의 행복에 미친 영향을 분석. 서울서베이를 비롯하여 여론조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단일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데 반해 본 연구는 11년에 걸쳐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였음.
-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

## 2 한국의 자산 불평등의 특성

### □ 특성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2012~2019년의 자산불평등 변화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8.2%,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5.7%를 차지함.**
  - 2019년에는 45.5%와 63.4%를 기록. 순 자산 지니계수와 분위배율, 팔마 지수도 비슷한 양상.
- **자산 원천별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자산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자산의 기여도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2010년대 전반기에 다소 하락했으나, 중반 이후 상승하여 2019년에는 2010년대에 서 가장 높은 74%를 기록.
  - 반면,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전체 부동산 자산의 3분에 1에 미치지 못하는 0.2 수준을 기록했으며, 시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가구 순자산 평균은 OECD의 평균 수준이고,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자산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저자산층과 고자산층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간 분위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음.
- 연령별로는 60세 미만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강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세 이상에서는 상관계수 값이 크게 감소했음.

### 3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 □ 분석결과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DB의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매매 건수, 평균 거래 가격, 그리고 실거래가에 기반한 지니 계수 값의 변화를 확인.
- 부동산 불평등의 경우,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2006년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불평등은 계속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실거래가 데이터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
- 부동산 가격 변동 및 부동산 불평등이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자가 소유 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우선, 자가 소유 여부는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자치구의 부동산 평균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 소유 가구와 전월세거주 가구 간의 행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흥미로운 사실은 가격상승에 따른 행복 격차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자가 소유자의 만족도가 상승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월세거주 가구의 만족도가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부동산 가격상승의 효과는 부동산시장 안정기(침체기)와 상승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전반적인 부동산거래가 줄고, 평균가격이 하락했던, 2008년에서 2013년의 경우, 자치구의 평균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 거주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전월세 거주 가구의 행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평균거래가격이 상승하는 2014년부터 2018년의 경우, 거주 자치구의 평균 거래가격이 상승할수록 자가 거주 가구와 전월세 거주 가구의 행복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경우, 자가 거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자가 거주 가구원의 경우, 가구주와 달리 자가 거주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평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론

## 서론 및 기획의도

---



이 보고서는 한국의 불평등 연구-라는 주제 하에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라는 두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노동시장불평등과 크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초점은 한국의 불평등 전반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아도 다르지 않다.

본 보고서는 크게 1부 노동시장 불평등과 2부 자산 불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한국 불평등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은 소득 불평등에 초점 맞추어 있으나, 이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욱 폭넓은 분석이 필요한 노동시장 불평등,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더욱 변동성이 심해진 자산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반부인 1부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현재 심화된 노동시장 분절과 이중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근본적인 변혁이 예상되는 근 미래에, 노동시장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비록 1부는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전반의 연구내용 및 관련 통계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규모 및 성별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세부 속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노동시장 불평등 전반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2부는 자산불평등과 관련,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2부의 가장 큰 기여는 자산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DB를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의 실제 가치에서 나타나는 자산불평등 수준과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가 소유가구와 전월세 거주가구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자산불평등이 실제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2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2부 3장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하여 2006년 1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의 주택 매매거래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 본다. 자산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국가 전체 수준의 분석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본 보고서는 시도 수준의 분석을 가미하여, 한국 부동산 불평등에서 나타난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종합하여, 한국의 불평등 - 노동시장 불평등 및 자산 불평등- 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후반부 분석을 통해 불평등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통찰을 전달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부에서는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중노동시장 구조,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 기업 규모와 노동시장 분절,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동에 따른 불평등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 전반의 특성을 기존 연구 및 데이터를 통해 리뷰한 뒤, 부동산 실거래가에 기반한 한국의 부동산 불평등을 분석하며,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 자가 소유 여부와 행복 격차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보인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자산불평등의 정치경제적 결과가 부정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한다.



# 제1부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 제1장

### 연구배경 및 목적

---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 제 1 절

## 연구배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은 저임금노동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장지연 외, 2019; 정이환 2013; 조성재 외 2004; 황수경, 2003). 이러한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 문제는 노동시장분절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노동시장분절론에서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의 논의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질적인 하위부문 사이에 수직적이고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하위부문 사이에 인력 이동이 제한적이고 노동조건에 차이가 존재한다. 1차 노동시장(primary market)은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 임금과 승진기회 그리고 안정된 고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2차 노동시장(secondary market)은 낮은 수준의 직무 능력, 임금과 승진기회와 불안정한 고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Doeringer and Piore, 1975; Doeringer and Piore, 1971).<sup>1)</sup>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는 산업구조의 효율성과 노동시장의 성과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로 인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역동성과 노동복지의 안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장지연 외, 2019).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은 대표적으로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한국은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OECD, 2019), 성별에 따라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속되어 있는 기업 규모 등에 대

1) 유사한 논리를 산업에 적용한 논리로 이중경제론(Theory of Dual Economy)을 들 수 있다(Hodson and Kaufman, 1982).

한 불평등이 존재하며, 입직이나 승진 등에서도 여전히 차별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고용형태는 성별과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줄어들고는 있으나 정규직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복지혜택에서 배제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성별과 고용형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도 존재한다. 기업 규모 자체로 인한 임금, 복지혜택 등에서도 격차가 나타나지만, 유사한 기업 규모 내에서도 성별, 고용형태 등에 따라서 임금, 복지혜택의 불평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시장 분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에 관한 초기 연구는 기업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나 이후 고용형태, 산업별, 성별 등의 이중노동시장에 대해 논의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분절에 대한 연구들은 노동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분절된 노동시장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다층성(multiple-layer)을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및 서비스업 분화로 인해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동이 노동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현실이다. 이중노동시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노동시장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불평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제2절

## 연구목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를 큰 축으로 할 수 있으며, 성별, 고용형태로 인해 임금, 복지혜택의 격차가 나타나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성별과 고용형태 등으로 인한 임금, 복지혜택 등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변동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에 대해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 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임금 불평등과 복지혜택 불평등을 토대로 성별과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복지혜택, 노동조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며, 나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성별, 고용형태 등 다층적인 측면에서 임금 불평등, 복지혜택 불평등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 4차 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 등을 토대로 노동시장 불평등의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장

##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불평등

---

제1절 노동시장 분절과 이중노동시장

제2절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 제 1절

# 노동시장 분절과 이중노동시장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노동분절과 노동시장의 이중화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큰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파악하는 경쟁노동시장 이론(Competitive Labor Market Theory)과 노동시장을 두 개 이상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보는 분절노동시장 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이 있다(강동욱, 2005; 황건하·이상엽, 2003). 신고전학파의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경쟁노동시장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완전경쟁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절과 차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기술 등이 동일하더라도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에서 노동시장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장지연 외, 2019; 최균, 2002).

경쟁노동시장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학파를 중심으로 분절노동시장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으며, 분절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제 이외에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며, 노동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분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절노동시장이론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은 연속적이고 경쟁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가진 단일한 시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의 공급과 수요도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사회적·제도적 제약에 의해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Cain, 1976).

분절노동시장은 큰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중노동시장론은 고전적 이중노동시장론과 현대적 이중노동시장론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고전적 이중노동시장론은 제도학파를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사회적 구조화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제도학파의 관점에서는 경쟁노동시장은 표준적 시장이고, 내부노동시장은 시장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탈규제와 유연화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론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로 인해 주변부의 탈규제와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면서 현대적 이중노동시장론은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장지연 외, 2019). 이후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산업별, 젠더, 동일한 기업 규모 내부에서의 차별과 배제 등으로 확대되었다.

**[표 2-1] 고전적 이중노동시장론과 현대적 이중노동시장론**

	고전적 이중노동시장론	현대적 이중노동시장론
이론적 관점	제도주의	신자유주의론, 내부자론/외부자론
이중화의 기본 범주	경쟁노동시장/내부노동시장	표준 고용관계/비정규 고용관계
관심대상	기업 내부노동시장	비정규 고용
이중화의 기본 동인	기업의 내부화 전략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적용국가	미국, 영국, 일본	대륙 유럽 국가들

장지연 외, 2019. p.12

이중노동시장의 분절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분절의 경계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없으나 많은 연구자는 이중 노동시장의 작동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1차 노동시장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장기계약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입직, 승진, 임금을 위한 노동자 평가가 관료제적 규칙을 따르고 있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단기적 고용계약을 토대로 하고 있어서 고용안정성이 낮고 계약 및 노동자의 업무 평가를 위한 형식적 규칙 등이 발달해 있지 않다(김영미, 2015).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을 논의하고 있는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에서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토대로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차 노동시장은 ‘노동자의 임금과 직무 분배, 교육훈련 등이 규칙 및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관리단위’를 의미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1차 노동시장은 기업이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양질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이동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때 형성된다(류기락, 2009).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외부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내부승진과 연공제 임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고용안정을 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영미·한준, 2008).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과는 달리 장기 고용, 사업장 내에서의 직무 위계의 존재, 숙련향상과 연관되어 있는 내부 승진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노용진·원인성, 2003; Sorensen, 1983). 즉, 1차 노동시장은 임금, 근로조건, 교육훈련, 고용안정성 등이 관료제적 규칙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1차 노동시장이 고착화되는 원인은 작업장의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협력을 위한 훈련 등을 말하는 숙련의 특수성, 직업교육, 임금체계, 승진방식 등의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축적된 작업장에서의 상호의존적 관습 또는 관행 등이 있다(Doeringer and Piore, 1971), 이에 반해 2차 노동시장은 일차 노동시장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등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우현·황수경, 2016; Kalleberg, 2003).

1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과 승진가능성, 상대적 고임금,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제도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높은 노동몰입과 충성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과 임금의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차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못하는 2차 노동시장과 1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와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다(장혜연, 2010; 김영미·한준, 2008). 분절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보상체계는 각각 다른 조건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 고용형태, 기업 규모,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서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 2 이중노동시장과 불평등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분절은 고용과 노동환경의 격차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McDonald and Solow, 1985).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확대한 중요한 요인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의 확대이며, 1차 노동시장은 이러한 임금불평등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전병유, 2011).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비경쟁집단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력을 가진 노동자일지라도 노동시장이 다르면 노동자들 간 노동조건 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Atkinson, 1983).

1차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에서 차단되어 있는 폐쇄적 노동시장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1차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지표들은 다양하다. 1차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특징

은 직무사다리와 내부승진, 입직구의 제한 등으로 인한 조직적 폐쇄라고 할 수 있다. 즉 1차 노동시장의 핵심지표는 내부에서의 직무이동을 통한 임금상승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직무급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본다면, 넓은 측면에서의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보상과 배치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작업장 질서라고 볼 수 있으며, 1차 노동시장의 지표를 외부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으로 볼 수 있다(김영미·한준, 2008).

이중노동시장은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써 숙련노동자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보호를 받는 반면 미숙련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Wren, 2013; Gingrich and Ansell, 2012; Kalleberg, 2003). 즉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법적 보호를 통해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 보장, 높은 임금, 호의적인 노동조건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시장원리보다는 비(非)시장적 원리가 작용한다. 즉, 1차 노동시장은 특유의 제도적 규칙들을 토대로 운영되며, 이러한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자본과 내부 노동시장 노동자들의 권력 관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역동적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관계,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저임금, 비호의적 노동조건 등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사실상 폐쇄되어 있어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장혜연, 2010).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분절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됨으로써 이중노동시장의 구조가 더 뚜렷해졌으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및 복지혜택 등의 격차는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성별에 대한 격차가 더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건 하에서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 고용형태, 성별,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현상은 노동시장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분절의 경계와 규모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안정성과 높은 임금을 토대로 하는 노동시장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노동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분절적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장지연 외, 2019; 정이환 2013; 조성재 외 2004).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는 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노동시장의 성과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지연 외, 2019).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이중화의 확대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인력 충원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노동자의 조직몰입과 충성심을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권순식, 2004),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되어 내수 시장 침체와 국민경제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기도 한다(조순경, 1993).

또한, 노동시장의 분절은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면서 대기업 주도 경제가 지속화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강화되어 다양한 불평등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균열을 가져오게 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인적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저해하게 되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한국노동시장이 이중적 분절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 산업의 발전과 노동복지의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장지연 외, 2019).

이중노동시장의 뚜렷한 분절은 1987년 민주화 운동과 비정규직 고용이 증대된 1997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형성되었으며(조동훈, 2014; 김영미·한준, 2008), 한국의 산

업구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저비용 구조에서 임금의 고비용 구조로 빠르게 변화되었다(조동훈, 2014).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규칙과 제도들의 유연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고용형태, 기업 규모, 직종 및 업종 등에서 노동시장의 분절과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류기락, 2009). 이와 같이 중심부와 주변부 노동시장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구조는 임금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영미, 2015).

노동시장의 분절은 이중노동시장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업 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라 노동시장이 복합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또한, 기업별로 노동조건이 다르게 나타나 파편화된 노동시장으로서의 성격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노동시장의 분절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은 초기업적 수준에서 통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적 노동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분절은 서구 선진국들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장지연 외, 2019).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와 관련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진보로 인한 자동화는 다양한 직업들의 직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중간 숙련 노동자들의 직무를 대체하면서 중간 숙련 수준의 직업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기술적 진보로 인해 자원의 특정성과 거래의 복잡성이 감소됨에 따라 프로젝트형 고용계약 형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문형(on-demanded)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파견, 재택근무, 파트타임 등의 직무형태도 증가하고 있다(허재준, 2017).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 분절의 기준을 찾으려는 많은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분절의 경계를 논의하고 있다(김영미·한준, 2008).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 반영하는 격차는 대표적으로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직종별, 산업별 등에서 나타나는 노동조건 격차는 노동시장 분절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직무특성, 개인능력 등의 차이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지연 외, 2019).

또한 4차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으며, 4차 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게 될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조건 의 대표적인 격차는 큰 측면에서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4차 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은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은 선진국에 비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는 노동시장을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분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성별과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에 따른 이중노동시장의 구조화는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가 대응해야 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 고용형태 등에 따른 분석과 함께 기업 규모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분절도 고려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불평등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 분절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노동시장 내에서도 성별, 기업 규모, 고용형태, 다양한 복지혜택 등에 따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기업 규모가 중심을 이루었지만 고용형태, 성별, 직종 등으로 연구가 확대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이중노동시장 분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분절 현상은 크게 성별, 기업 규모,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임금, 노동환경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장지연 외, 2019).

성별 불평등은 이중노동시장에서의 복합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은 노동시장 위치에 따라 성별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

다(McCall, 2005).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은 기업 규모나 고용형태 분절과는 독립적인 부분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서구 선진국들보다 성별에 따른 분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지연 외, 2019; 신광영, 2011). 성별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주변부 여성이 경험하는 임금격차, 승진, 입직 등의 다양한 차별과 배제로 인한 불이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들은 기업 규모, 고용형태, 승진 등에서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김영미, 2015).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도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비정규직의 존재는 노동시장 분절의 중요한 측면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 중 하나는 비정규직 증가이다.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기 이전에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청소, 경비 용역 등의 주변적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많은 직종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노용진·원인성, 2003).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 노동환경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놓여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고용불안이라는 불리함을 내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조건 등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는 임금의 격차를 넘어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이라는 불리함을 내포하고 있는 차별적 고용형태이며, 직급승진과 호봉 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비정규고용은 노동시장 분절의 주요한 차원이 되고 있다(장지연 외, 2019).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더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수현, 2016).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혜택 등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기업의 비용감축으로 인한 임금상승률은 외환위기 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임금상승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조동훈, 2014).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적 특성은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서 임금, 노동시간, 시간외수당, 근속년수, 유급휴가, 노조가입 등의 격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유선, 2014).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의 측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와도 관련성이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업구조 및 직무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일자리 감소 및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Furman and Seamans, 2019; Huang and Rust, 2018).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장질서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분절에 대한 논의는 4차 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확장시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노동시장의 구조화는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격차는 대표적으로는 임금차이에 있으나 임금차이 이외에도 승진, 입직 등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에 의한 불평등은 임금 이외에 근로시간, 사회보험, 노동조합 등과 관련된 노동조건 등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기업 규모 내에서도 노동조건의 격차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 노동시장 분절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차 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분절의 구조적인 차원인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를 중심으로 임금, 복지혜택 등과 함께 4차 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3장

##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

---

제1절 성별과 노동시장 격차

제2절 고용형태와 노동시장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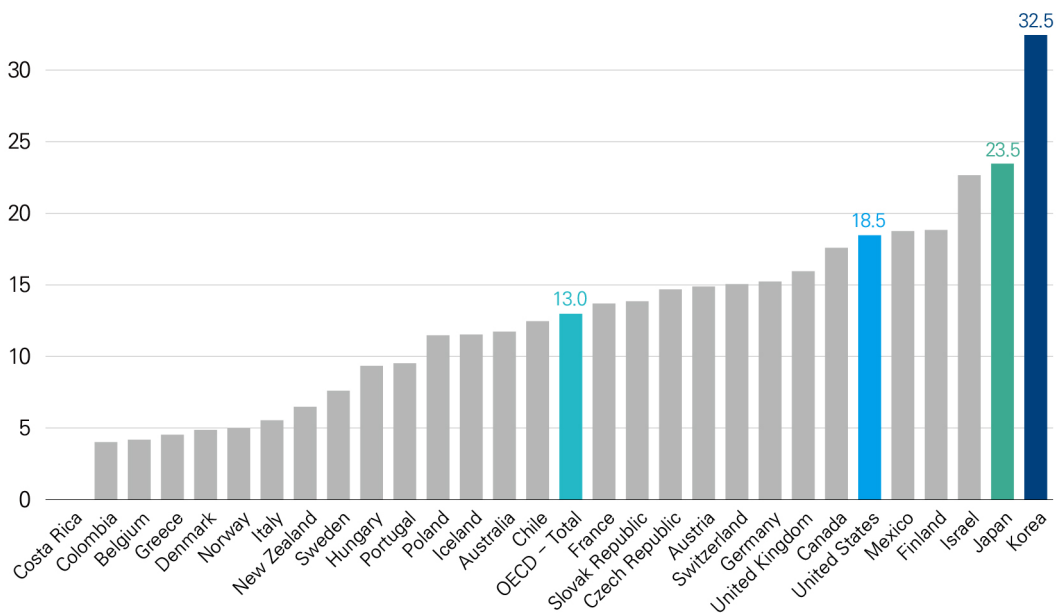
# 제 1절

## 성별과 노동시장 격차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성별과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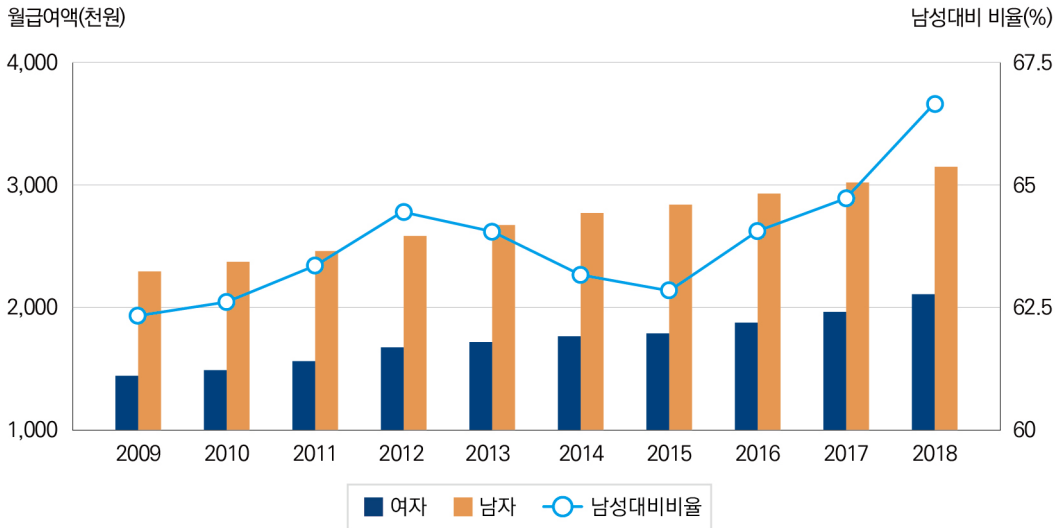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별임금격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성별임금격차에서 한국은 34.6%로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이 13.8%라는 점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높은 1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OECD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OECD,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그림 3-1] OECD 회원국 성별임금격차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6.6%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8년에 62.4%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늘어나는 경제활동 참여와 높아지는 교육수준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각년도

[그림 3-2]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표 3-1]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현황

(단위: 천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여성	월급여액	1,477	1,548	1,654	1,705	1,742	1,781	1,869	1,946	2,087
	남성대비비율	62.6	63.3	64.4	64	63.1	62.8	64	64.7	66.6
남성	월급여액	2,361	2,444	2,569	2,664	2,761	2,837	2,918	3,010	3,13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각년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큰 측면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 업무경력, 성별 직종분리, 전일제, 시간제의 근로형태, 기업 규모, 노동조합 유무, 임금차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ILO, 2013).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Mincer (1974)는 성별임금격차가 인적자본 특성, 인구통계학적 요인, 업무관련 특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 분석된다고 하였다. 또한, Oaxaca(1973)과 Blinder(1973)는 인적자본모형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임금의 차이는 경력(experience)수준, 근속(tenure), 교육수준, 노력, 차별, 연령 등 인적자본 변수의 특성 차이로 설명하였다. 이후 국외에서는 성별임금격차의 규모와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Abowd et al., 1999; Appleton et al., 1999; Barón and Cobb-Clark, D. A., 2010; Bell, 2015; Benito, 2000; Bergmann, 1974; Flabbi et al., 2014; Gibbons and Katz, 1992; Goux and Maurin, 1999; Kunze and Miller, 2017; Mincer and Polachek, 1974).

한국에서도 성별임금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2000년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박세일, 1984; 어수봉, 1991; 황호영·김공수, 1995; 황호영·임은란, 2000). 1985~2004년 기간 중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정진화, 2007)에 의하면 20년간 생산성 차이에 대한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으나 동일한 생산성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줄어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labor market discrimination)이 반영되고 있다. 강주연·김기승(2014)이 1999~2011년 남성집중직과 여성집중직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보상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임다희 외(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 유형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차별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광영(2011)은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에 비해 30%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평균임금의 차이 중에서 50% 이상은 차별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난주(2015)의 연구 역시 차이는 37.8%로 나타났고, 차별은 62.2%로 나타나 성별로 인한 임금격차에서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난주(2017)의 연구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차별의 비중이 63.7%로 나타났으며, 15~29세 그룹에서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에서 시간당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 연령별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광훈(2017)의 연구에서도 청년층의 남녀 임금격차 중 25.5%만 개인과 직업속성의 차이로 설명되고 74.5%는 설명되지 못한 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다. 김은하·김영미(2012)는 2008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성별임금격차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고졸미만, 기혼상태, 대기업, 건설업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현(2012)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0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성별임금격차는 저소득 노동자 그룹에서 가장 낮고 중상위 그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상위층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김은하·백학영(2012)은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으며, 비정규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들은 자신의 생산성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임금보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하는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하기는 하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재만·설원식(2020)은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의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기는 하나,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대전 지역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연구(김형근·임영언·김일태, 2020)에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이 결혼, 교육, 고용계약, 연령, 가구주, 근무기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이 출산 등으로 노동시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 임금의 차이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성별임금격차에서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성별임금격차의 대표적인 원인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다만 최근에 성별임금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2 입직 및 경력이동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은 일자리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임금이나 보상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입직이나 승진기회 등과 같은 배치의 차별 역시 존재한다(Petersen and Morgan, 1995). 즉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은 임금차별(Wage Discrimination)과 고용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로 구성된다(박세일, 1984; 임숙, 1988 재인용). 고용차별에는 남녀가 교육·경력 등에서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도 여성들이 임금수준이 낮은 하위직에 주로 몰리게 되어 발생하는 직종차별(Job Segregation)과 동일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교육, 경력 등에 남녀간의 차이가 없고, 동일 직종에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채용, 배치, 훈련, 승진, 퇴직 등의 고용정책 및 관행상에 나타나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정으로 인한 차별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있다(박세일, 1984; 임숙, 1988 재인용). 또한, 일자리 이동에 있어서도 직무 관련 변수보다는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Mitchell et al., 2001).

특히 여성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 시 사회적 역할과 끈기를 이유로 채용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M자 고용곡선, 유리천장, 높은 성별임금격차와 연결되어 남성과 다른 노동이행 궤적을 갖게 된다(오유진·김교성, 2019).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비정규직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를 갖게 되면 남성보다 일자리 이동이 낮으며, 이처럼 노동시장 내에서의 행태는 남녀가 다르게 나타난다(신광영, 2004; Booth and Francesconi, 1999). Gregory and Elias(1994)는 청년층 여성이 남성보다 고임금 직종으로 진입할 확률이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불평등은 이후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입직 및 경력이동의 불평등은 성별임금격차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성은 경력성공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낮은데, 여성은 경력개발과정에서 남성과 달리 결혼이 직무몰입에 방해가 될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Halford et al., 1997; Melamed, 1995; Wilson, 1998). 특히 남성 고위 관리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기술이나 야망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Smithson and Stokoe, 2005). 이러한 이유로 많은 중간 관리직 여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고위 관리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Liff and Ward, 2001). 여러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관리직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결핍, 구조, 선택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왔다(Hirsh,

1990; Wilson, 1998 재인용). 결핍이론은 여성에게 지적,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야망 또는 리더십 등이 불충분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구조적 설명은 여성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조직적, 가족적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는데, 즉 구조적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여성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 구조적 어려움보다는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비적극적, 비진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다. 또한, 조직문화가 여성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재생산하고 유지함으로써 조직적 기회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Wilso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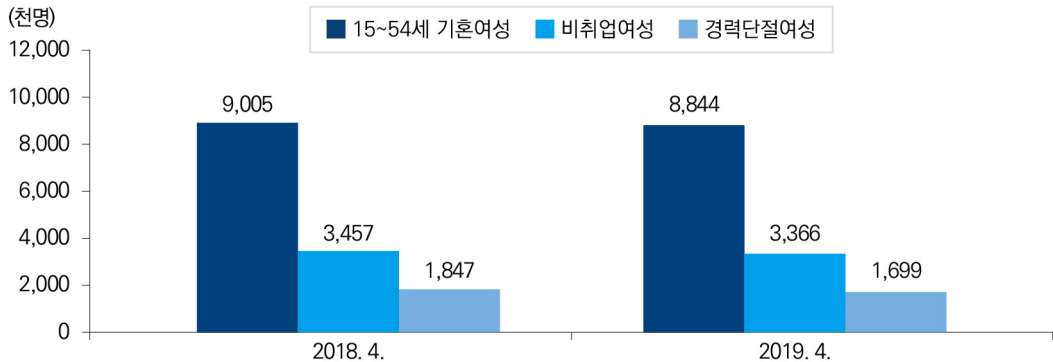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는 한국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격차와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53.5%로 나타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3.5%인 것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OECD 주요국 여성 고용률의 경우 OECD 평균은 2018년 기준으로 65%이지만, 한국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57.2%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낸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결혼, 육아,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 청년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 및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변동이나 기타 취업의 어려움 발생 시 일차적인 취약계층으로 나타나게 되며,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불안정한 취업을 경험하게 된다(김종숙 외, 2007).

[표 3-2]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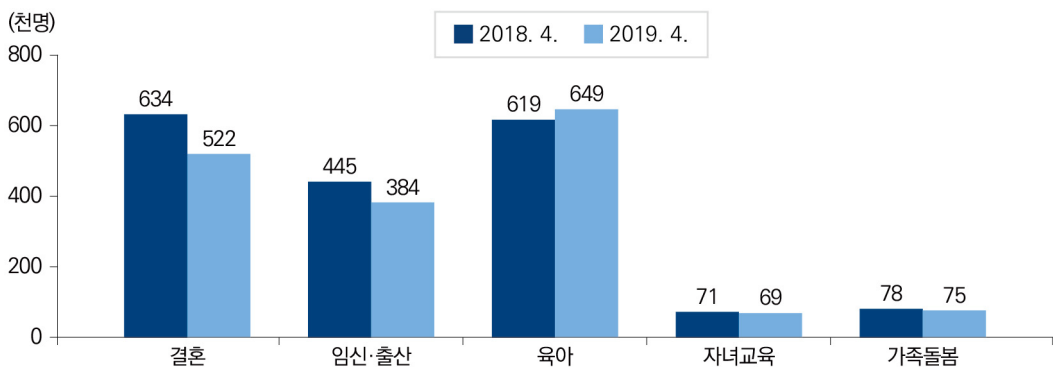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계	남자	여자
2019	63.3	73.5	53.5
2018	63.1	73.7	52.9
2017	63.0	73.9	52.6
2016	62.8	73.9	52.1
2015	62.6	73.8	51.8
2014	62.4	74.0	51.3
2013	61.5	73.2	50.2
2012	61.3	73.3	4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2019.

[그림 3-3] 경력단절 여성 규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2019.

[그림 3-4] 경력단절 사유

이러한 차별은 ① 자기계발, 생산성 향상, 내부 승진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여성의 연령-임금 곡선이 수평적으로 되어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상승 폭이 작고, ② 장기근속의 유인이 없으므로 여성의 높은 이직률과 근태율을 초래하고, ③ 높은 노동 이동률은 근대적 직업관의 정착을 어렵게 하여 결혼퇴직, 육아퇴직 등으로 쉽게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노동관행을 초래하고, ④ 이와 같은 여성인력의 특성은 나아가 사용자의 차별적인 고용관행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여성인력에 대한 훈련·투자 기회를 기피하게 하고 장기근속을 전제로 기술축적이 가능한 직종에 여성배치를 기피하는 차별의 악순환을 낳게 된다(박세일, 1984; 임숙, 1988 재인용).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의 다양한 연구자들은 여성이 경력이동 및 경력성공 등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하여 연구해왔다. 강순희(2014)는 15~29세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정착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2년마다의 이행을 분석하여 여성들은 경력형성 초기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체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현주·김권주(2017)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일자리 개수도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많아서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인한 낮은 직업만족도와 잦은 이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안정성과 취업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동이동마저도 여성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작다(조인숙, 2015).

박진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직장이동 가능성은 73% 정도로 빈번하며, 직장이동을 통해 이전의 직장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은 여성의 15%에 불과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하여 여성 대다수의 직장이동이 더 나은 일자리로의 효율적 선택이 아닌 '막다른 일자리간의 빈번한 직장이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신광영(2004)의 연구는 평균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이동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성별에 따라 일자리 이동에 미치는 변수들이 뚜렷이 달라서 성별 간의 노동시장 속성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고, 근속년수가 길수록 일자리 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들은 연령, 교육수준, 노조가입 여부나 기업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결혼 여부와 직업에 따라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입직, 경력이동 및 경력성공 등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 육아, 임신 및 출산 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을 재생산 및 유지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간의 갈등을 낳고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기피하게 하여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현상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최근 젠더갈등과도 연결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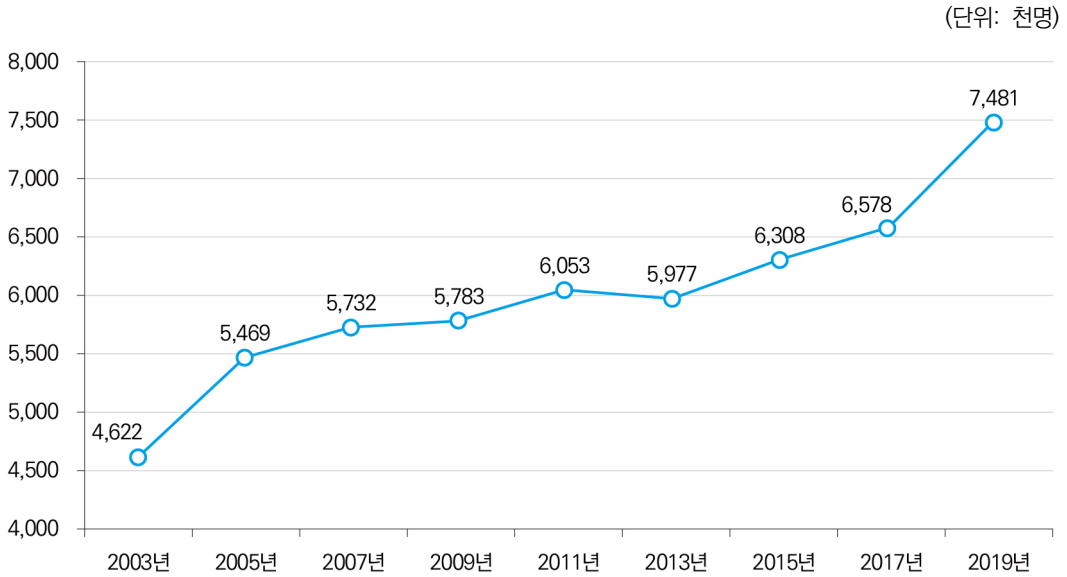
# 고용형태와 노동시장 격차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고용형태와 임금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노동력의 정착성보다는 규모 및 기능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안주엽 외, 2003). 이후 한국은 1987년 전후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분절되었다는 점에서는 학계의 대체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핵심적인 노동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주요한 축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이다(정이환, 2007).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시장 자유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절화는 더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비정규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32-36% 사이에서 ‘추세없는 변동(trendless fluctuation)’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자 수의 증감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수의 증가가 등락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성희, 2020).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03년 462만 3천명에서 2019년 748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임금노동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2003년 32.6%에서 2019년 36.4%로 나타났다([그림 3-5], [표 3-3]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3-5] 비정규직 추이(2003-2019)

[표 3-3] 비정규직 비중(2003-2019)

(단위: 천명, %)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임금노동자	14,195	14,948	16,006	16,609	17,715	18,403	19,474	20,006	20,559
정규직	9,573	9,480	10,274	10,826	11,662	12,426	13,166	13,428	13,078
비정규직	4,622	5,469	5,732	5,783	6,053	5,977	6,308	6,578	7,481
비정규직 비중	32.6	36.6	35.8	34.8	34.2	32.5	32.4	32.9	3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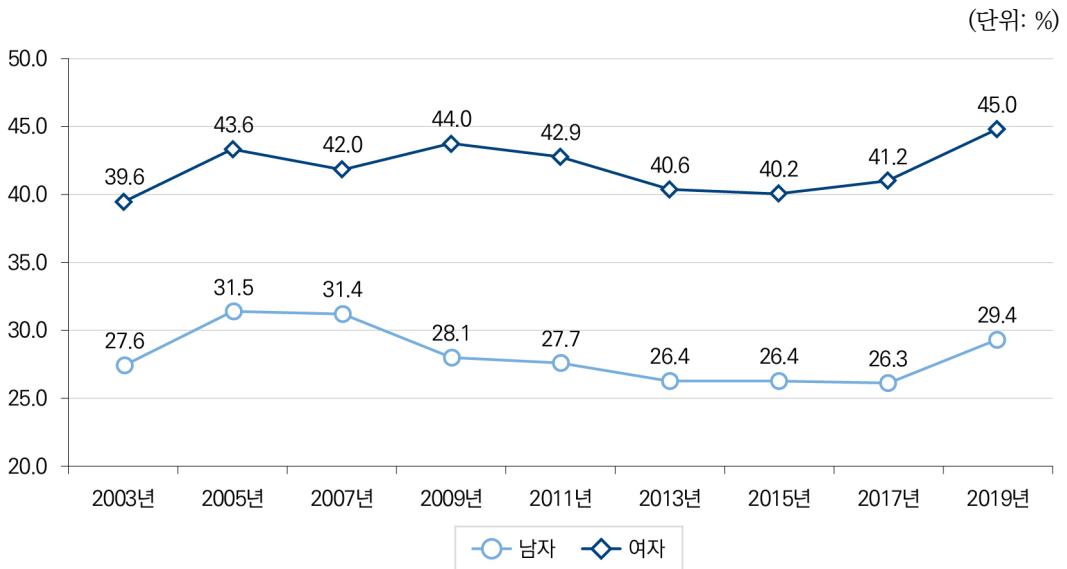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의 성별에 따라서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수준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2004년 이후 40%-45%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26%-31%를 유지하고 있다.

[표 3-4] 성별과 고용형태

(단위: 천명)

	2004		2009		2014		201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5,775	3,436	6,898	3,928	7,944	4,925	8,040	5,038
비정규직	2,739	2,668	2,690	3,092	2,852	3,271	3,356	4,125
비정규직 비중	32.2	43.7	28.1	44.0	26.4	39.9	29.4	4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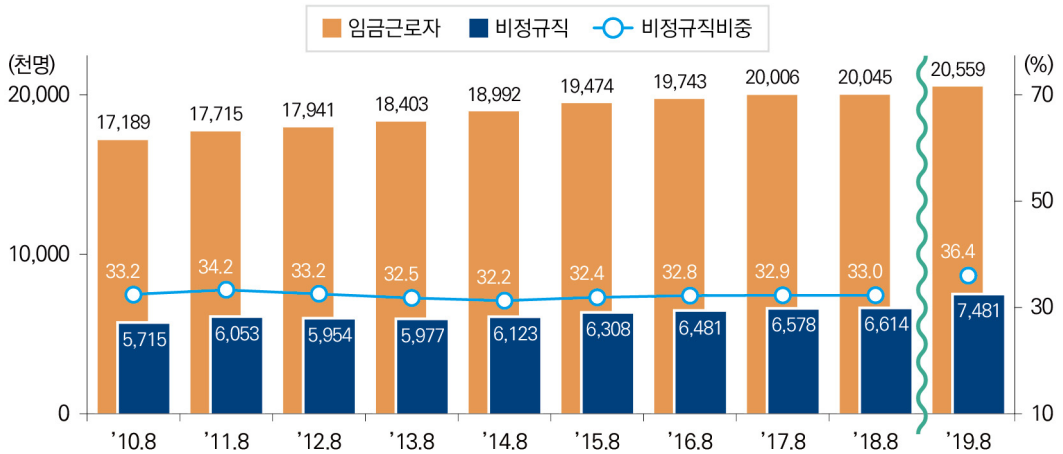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3-6] 비정규직 성별 비중(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연령은 60세 이상, 근로형태는 한시적 근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성별은 여성의 비중이 가장 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정규직 노동자와의 평균 근속기간 차이가 5년 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 9천 원(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할 경우 231만 4천 원)이었으며, 이는 정규직 노동자가 316만 5천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다.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3-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전년 동월 대비)

[표 3-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 전년동월대비)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비전형		
18년 6~8월 평균	255.8	300.9	164.4	181.8	176.2	202.3	86.7	174.7
19년 6~8월 평균	264.3	316.5	172.9	186.0	180.6	207.0	92.7	185.8
증감	8.5	15.6	8.5	4.2	4.4	4.7	6.0	11.1
증감률	3.3	5.2	5.2	2.3	2.5	2.3	6.9	6.4

자료: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더불어 비정규직의 44.8%가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자발적 선택 사유로는 '수입의 필요'의 부분이 75.4%로 가장 높았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경우 정규직은 38.8시간, 비정규직은 30.8시간이었다.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짧다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률이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이 적기 때문에 빈곤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백학영·구인회, 20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크게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연구들이 있다(박기성·김용민, 2007; 김유선, 2009; 문영만·김종호, 2018). 그런데 이 임금격차가 생산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차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만일 노동자 사이에 생산성에 의해 설명되는 임금격차가 다른 요인들에 대한 임금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합리적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산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라는 의미가 된다(김기승·김명환, 2016).

안주엽(2001)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는데, 전체 19%의 임금격차 중에서 3/4는 생산성으로 인한 격차인 반면 1/4은 생산성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결과를 밝혀내었다. 신승배(2009)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51%이며, 이 중에서 생산성에 의한 격차가 52.7%, 차별에 의한 격차는 47.3%라는 분석을 하였다. 권혜자(2005)는 임금격차 중 차별에 의한 격차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기승·김명환(2016)의 경우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중 생산성과 무관한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역시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생산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주장도 많다. 김복순(2006)의 연구에서 생산성에 의한 차이가 91.4%로 나타났고, 차별에 의한 차이는 최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량(2007) 역시 85~90% 정도가 생산성에 기인한 것이고, 차별적 요인은 10~15%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매우 적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다수 있다. 여수봉·윤석천·김주일(2005)은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남재량·이인재·이기재(2005) 역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설명한 박기성·김용민(2007)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이인재(2011)의 연구에서는 임금격차가 6.5~8.4% 정도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존재의 유무나 생산성과 차별 중 어느 것으로 설명되느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백학영·구인회(2010)

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하였을 때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빈곤율이 26~37% 정도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근로시간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단순히 임금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빈곤과 차별 경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평등의 다층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고용형태와 기업복지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한편에서는 노동자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 개인이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최저한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등의 국가복지의 보완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의 근로와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반정호, 2006).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순임금격차는 임금 측면에 더해 부가급여에서도 발생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안주엽 외, 2003; 김유선, 2004). 따라서 노동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고용형태별 복지의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를 포함하여 유급휴가와 상여금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현금소득성·보장성의 성격의 다양한 보험제도가 있다(문선희, 2013). 또한, 다양한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기업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 및 제도와 같이 화폐가 아닌 형태로 제공하는 보상, 활동, 프로그램의 총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험과 근로복지(퇴직급여,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상여금)에 더해 교육·훈련, 노동조합 가입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통계청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률 91.5%, 국민연금 가입률 87.5%, 고용보험 가입률 87.2%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각각 48.0%, 37.9%, 44.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은 모든 지표에서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 수혜율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정규직은 퇴직급여 91.7%, 시간외수당 60.9%, 유급휴일 80.1%, 상여금 86.4%인 반면 비정규직은 각각 42.9%, 25.9%, 33.0%, 38.2%로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훈련 경험 비율과 노동조합 가입비율에서도 두드러진다. 교육·훈련 경험 비율의 경우 정규직은 61%, 비정규직은 41.3%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은 17.6%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은 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25.8%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가능자 중 68.2%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5.2%가 가능했으며, 이 중 노동조합 가입률은 57.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혜택 차이**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87.5	37.9
	건강보험	91.5	48.0
	고용보험	87.2	44.9
근로복지 수혜율	퇴직급여	91.7	42.9
	상여금	86.4	38.2
	시간외수당	60.9	25.9
	유급휴일(휴가)	80.1	33.0
교육·훈련 경험 비율		61.0	41.3
노동조합 가입 비율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25.8	5.2
	가입대상자 중 가입 비율	68.2	57.9

자료: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재구성

강승복(2005)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격차 중 임금, 근로시간, 소득분배보다 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회보험 가입실태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2002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와 행정통계 자료에서는 고용형태가 사회보험 가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황덕순, 2003), 한국노동패널 6차 자료(2003년)와 7차 자료(2004년)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리후생의 항목 중에서 사회보험, 퇴직금, 각종 법정 휴가 등의 전 항목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정호, 2006; 배화숙, 2005).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식사비용 보조항목 이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배화숙, 2005).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김복순(2019)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벗어나 차별받지 않도록 견고한 사회안전망 울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안주엽(2006)은 한국노동패널 7차 자료(2004년)을 통해 능력개발<sup>2)</sup>을 원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능력개발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 능력개발 참가를 자포자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능력개발을 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더 나은 일자리 또는 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현재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였다. 더욱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조합 미가입 비정규 노동자나 무노조 사업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능력개발의 경험이 보다 낮은 비중임을 밝혔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자 비율 및 가입비율이 정규직보다 훨씬 낮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능력개발 면에서도 정규직보다 큰 차이를 경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기업복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알려진 보편성(문선희, 2013)은 이러한 고용형태별 격차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복지가 기본적으로는 임금차등을 완화할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분배의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 내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장지박, 2011). 이는 기업복지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상대적 취약성 및 차별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당 연구에서는 능력개발을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받은 교육 및 훈련'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외 자신의 교양이나 평생학습 차원에서 받은 직장연수나 학원수강, 교양강좌 및 TV, 라디오 청취, 인터넷 통신강좌 등 교육'은 별도로 취급하였다(안주엽, 2006).



# 제4장

## 기업 규모와 노동시장 분절

---

제1절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과 복지 격차

제2절 노동불평등의 다층성



## 제 1절

#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과 복지 격차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기업 규모와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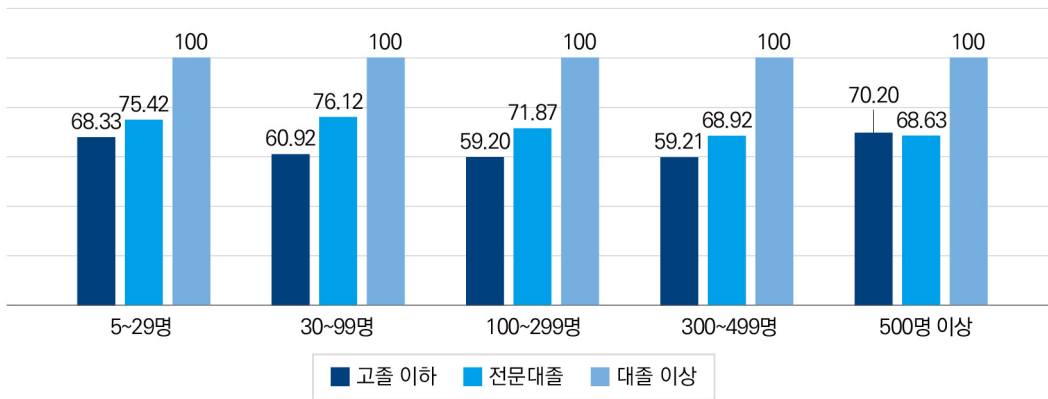
기업 규모는 노동력 분할과 차등적 대우에 대한 노동시장 분절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장지연 외, 2019; 신경수·송일호, 2004). 넓은 측면에서 1차 노동시장을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성을 특성으로 정의할 때 노동시장 분절 경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업 규모이다. 미시임금자료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상이한 임금결정 방식, 대기업 내에 존재하는 연공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낮은 이동률 등을 토대로 한국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영미·한준, 2008).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인적자본, 노동의 특성, 노동의 강도 등을 통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개인의 능력과 인적자본요소의 차이로 설명되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의 측면에서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의 핵심 요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 수준에 따른 것으로서 대기업에서 인적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의 보상적 임금격차이론에서는 개인의 노동의 특성과 강도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의 강도가 더 높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에서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김수현, 2019).

고용노동부가 2020년 6월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의 기업 규모에 따른 학력별 임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고졸이상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졸이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졸 이상 노동자와 고졸 이하 노동자의 격차는 100명-299명 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500명 이상의 기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 따른 학력별 임금

격차에서도 대졸 이상의 노동자와 고졸 이하의 노동자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의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을 했을 때, 대졸 이상 노동자와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직업은 판매종사자로 나타났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그림 4-1], [그림 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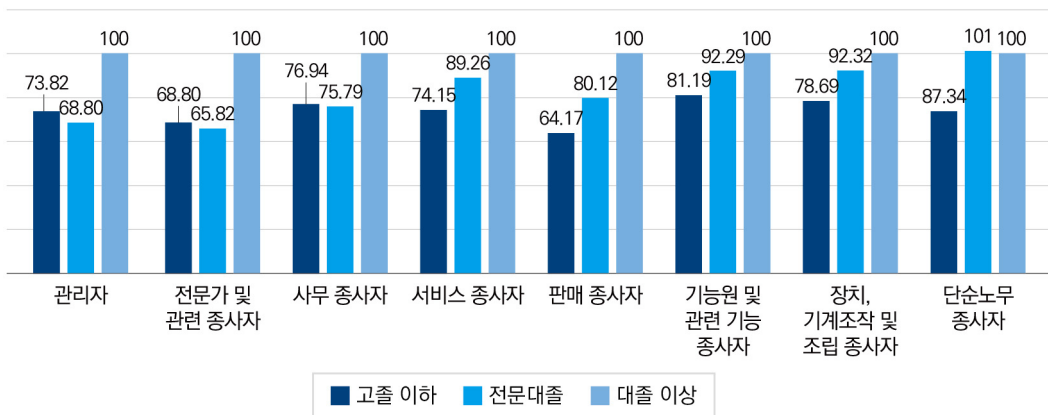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3

[그림 4-1] 사업체 규모와 학력별 임금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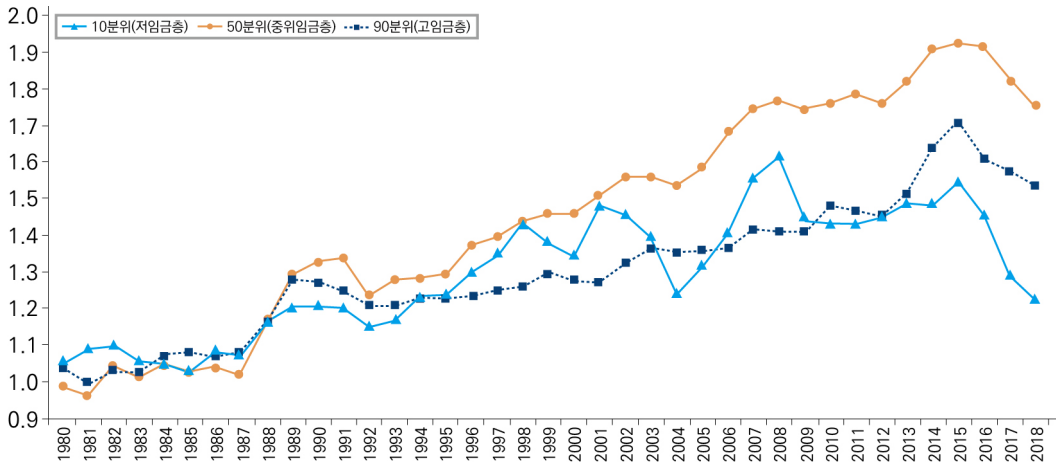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3

[그림 4-2] 직업에 따른 학력별 임금수준

한국에서 기업 규모 간의 임금격차는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 근속년수, 경력 등에 따른 격차보다 차별적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구조적인 효과에 의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군에 속할수록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과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체 간 임금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임금 10분위(저임금층), 중위임금층(중위임금층), 임금 90분위(고위임금층)의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1987년 이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저임금층, 중위임금층, 고임금층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1990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저임금층, 중위임금층, 고임금층 간의 격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 2019).



자료: 김수현, 2019. p.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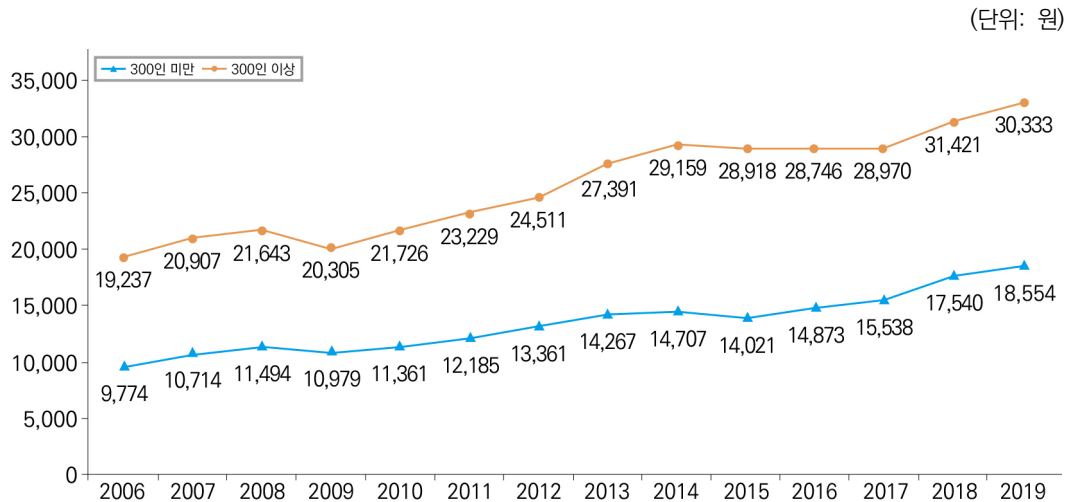
[그림 4-3] 사업체 규모별 분의 임금격차(1980-2018)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영미·한준, 2008; 신경수·송일호, 2004).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구성적 차이와 임금가격의 차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임금격차의 원인이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인적구성상의 차이의 원인은 큰 측면에서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분포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은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경우의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이 저소득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기업 규모에 따라 직업분포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대기업에서 고소득 전문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기업 규모에 따른 학력의 격차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 고학력 노동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근속년수의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근속이 높은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아서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임금결정에 유리한 인적 특성, 동일한 인적 속성일지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단가가 차이가 나게 됨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김영미·한준, 2008).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 총액(월임금 총액/총근로시간)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300이상 규모의 기업과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006년 19,237원에서 2019년 33,033원으로 2006년에 비해 2019년은 약 58% 증가하였으며, 300인 미만 기업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006년 9,774원에서 2019년 18,554원으로 2006년에 비해 2019년은 약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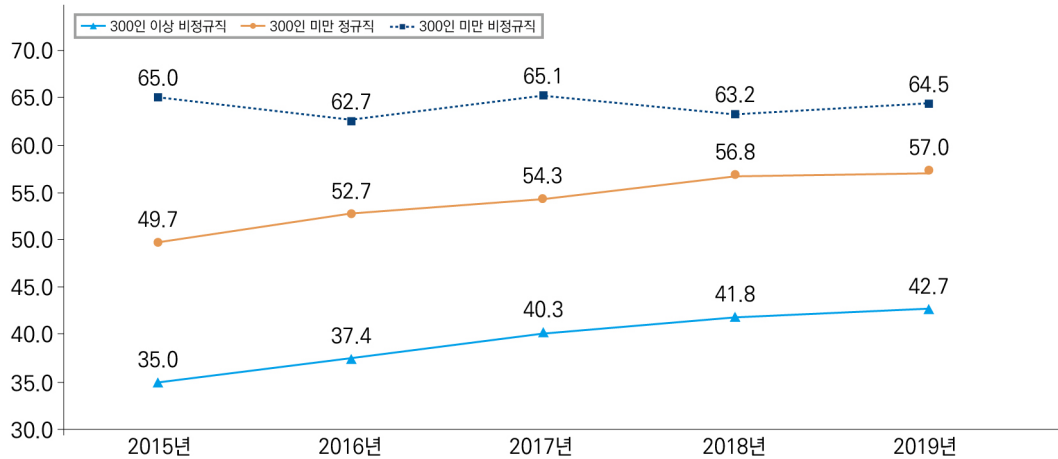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4-4]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하도급거래이다.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교섭력 등으로 인해 기업 규모별 성과격차와 임금격차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혜정·배진한·박창귀, 2017). 또한, 한국에서는 기업 규모에 대한 임금교섭의 조율기능이 약하다. 임금교섭의 시기나 요구하는 임금수준에서 기업간·노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인상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장지연 외, 2019).

기업 규모별 임금 차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을 100으로 보았을 때, 300인 미만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5년에 비해 2019년에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4-5] 최근 5년간 시간당임금 수준 차이

## 2 기업 규모와 복지

기업은 기업복지를 통해 노동자의 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충족시켜 노동자의 이직을 막음으로써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하고자 한다. 기업복지는 노동자의 부가적 임금으로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정한 근로환경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배화숙, 2005).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업복지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를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수준의 격차는 역진적 소득분배를 강화하게 되어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최균, 2002). 기업복지는 고용관계를 토대로 제공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정규직 등의 공식부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기업복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며, 정규직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에 따른 지불능력의 차이로 기업복지 수준의 격차가 나타난다. 기업복지의 실시와 확대는 대기업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된다(조상미·박은주, 2011).

1987년 이후 한국의 기업복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복지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업 규모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업복지 내용의 변화가 뚜렷이 관찰된다(최균, 2002). 그러나 이러한 기업복지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주거에 관한 비용, 보험료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비보조의 비중이 증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생계보조적인 특성이 강한 식사비용 수준에서 보조가 되고, 기타 복지 비용들은 대기업과는 달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화숙,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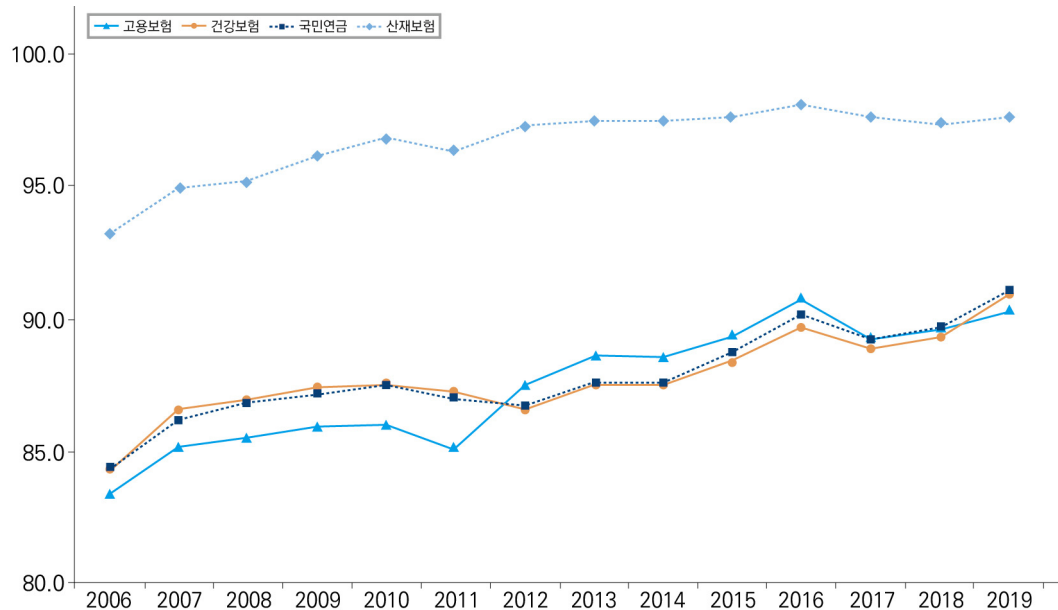
또한, 기업복지의 수준은 기업 규모 이외에도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전후해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규모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기업복지 수준에 있어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기업복지급여 수준의 양극화는 임금차이보다 더 심각한



양태로 나타난다(한동우, 2011).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보호의 한 부분인 기업복지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는 기업복지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반정호, 2006).

사회보험, 노동조합 등의 기업복지는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의 이중노동시장 분절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기여의 형태가 국가마다 다르지만, 기업의 고용한 피용자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면 기업의 기여가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기업의 대표적인 복지프로그램이다(반정호, 2006). 한국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6년부터 2019년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83%에서 91% 수준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은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97.7%로 나타나 사회보험 가입률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용보험이 90.3%로 나타나 사회보험 가입률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4-1] 참조).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4-6] 사회보험 가입 추이

[표 4-1] 사회보험 가입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용 보험	85.2	85.5	85.9	86.0	85.1	87.5	88.6	88.5	89.3	90.7	89.1	89.6	90.3
건강 보험	86.6	86.9	87.4	87.5	87.2	86.6	87.6	87.5	88.4	89.7	88.9	89.4	90.9
국민 연금	86.2	86.8	87.1	87.5	87.0	86.7	87.6	87.6	88.7	90.1	89.1	89.7	91.1
산재 보험	95.0	95.2	96.2	96.8	96.3	97.3	97.5	97.5	97.6	98.1	97.6	97.4	9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률 89.3%, 건강보험 가입률 89.4%, 국민연금 가입률 89.7%, 산재보험 가입률 97.4%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률 96.2%, 건강보험 가입률 99.9%, 국민연금 가입률 98.9%, 산재보험 가입률 99.6%로 나타나 300인 미만의 기업과 300인 이상의 기업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90.3	90.9	91.1	97.7
300인 미만	89.3	89.4	89.7	97.4
300인 이상	96.2	99.9	98.9	99.6

\*고용보험: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 제외

\*건강보험: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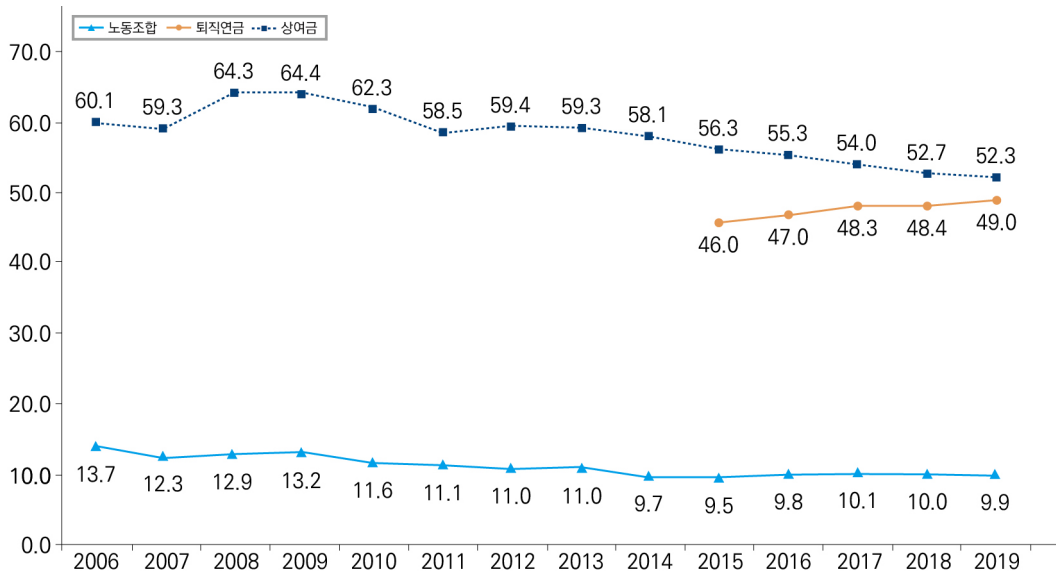
\*국민연금: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 제외

\*산재보험: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 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복지 및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은 1차노동시장 형성의 중요한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Osterman, 1982; Doeringer and Piore, 1971). 기업 규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의 규모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임금 및 노동조건에는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차이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장혜연, 2010).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6년 13.7%에서 2019년은 9.9%로 나타나 3.8%p 감소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5년 46.0%에서 2019년 49.0%로 나타나 3.0%p 증가하였다. 상여금 적용률은 2006년 60.1%에서 2019년 52.3%로 나타나 7.8%p 감소하였다.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4-7]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추이

201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과 부가급부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가입은 300인 미만 기업 6.9%, 300인 이상 기업 28.8%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미만 기업 45.0%, 300인 이상 기업 74.0%로 나타났고, 상여금 적용률은 300인 미만 기업 48.0%, 300인 이상 기업 78.9%로 나타나 퇴직연금 가입률과 상여금 적용률에 있어서 기업 규모의 차이는 약 30%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입규모에 따른 사회보험의 차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과 부가급부 현황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단위: %)

	노동조합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
전체	9.9	49.0	52.3
300인 미만	6.9	45.0	48.0
300인 이상	28.8	74.0	78.9

\*노동조합 가입률 = 가입 근로자수 ÷ 전체 근로자수 × 100

\*퇴직연금 가입률 = 가입 근로자수 ÷ 전체 근로자수 × 100

자료: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업 규모에 따른 불평등의 요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임금불평등과 복지 불평등은 기업 규모에서도 야기되고 있지만 동일규모의 기업 내에서도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라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측면에서 노동 불평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별, 고용형태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다층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 불평등을 유발하는 내부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2절

## 노동 불평등의 다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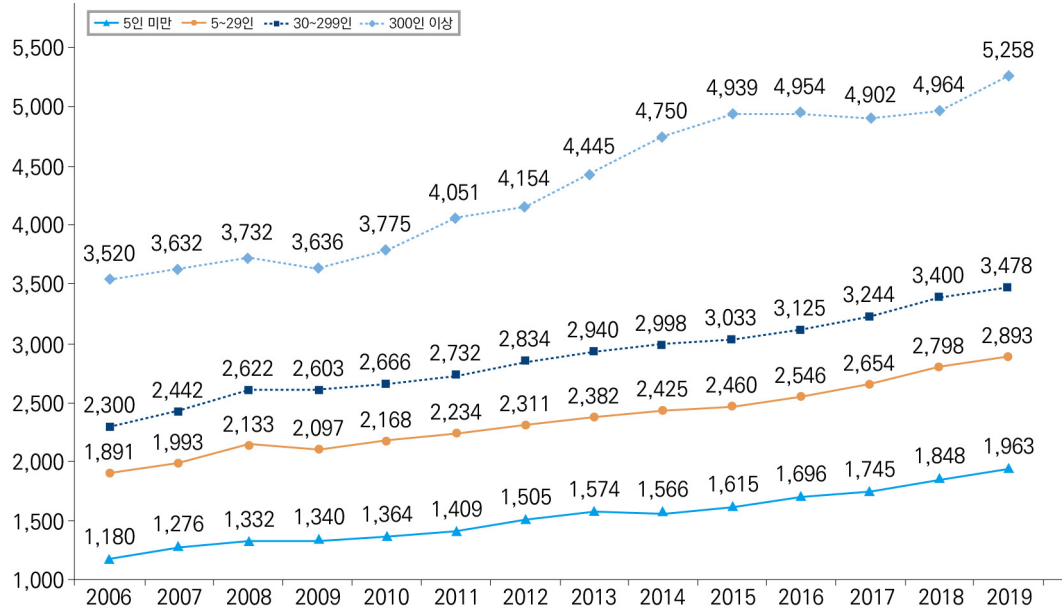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임금불평등의 다층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며, 고용형태와 성별, 기업 규모와 성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형태와 성별 등에 따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임금 불평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 불평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소기업 내부에서의 불평등도 존재한다. 기업 규모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임금 불평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5인 미만 기업, 5-29인 기업, 30-299인 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월 임금 총액은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월 임금 총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300인 미만의 기업과 300인 이상의 기업의 차이뿐만 아니라 5인 미만 기업, 5-29인 기업, 30-299인 기업 간에서도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 규모 내부의 임금 격차는 30-299인 기업과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5인 미만 기업과 5-29인 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5-29인 기업과 30-300인 기업의 격차에 비해 임금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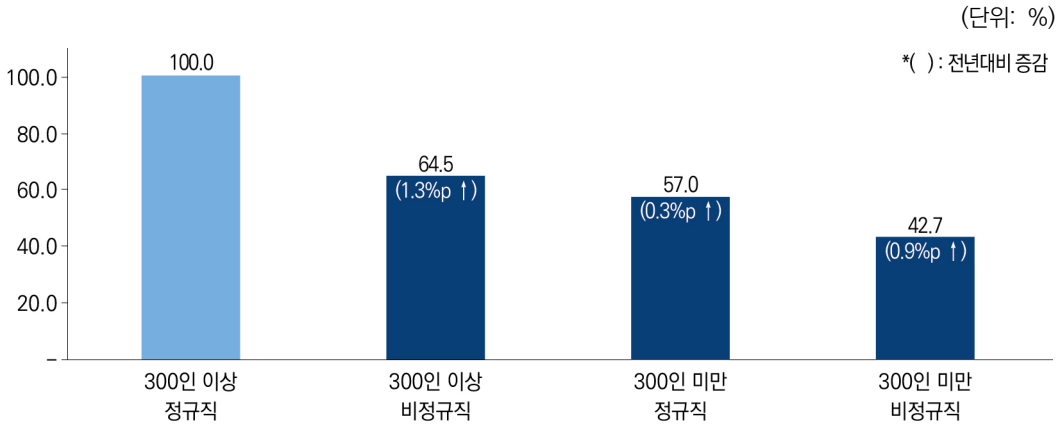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4-8]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추이

2019년 한국의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총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64.5%, 300인 미만 정규직 노동자는 57.0%, 300인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42.7%로 나타났다. 또한, 300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년대비 1.3% 상승한 데 비해 300인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년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시간당 임금 총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총액은 5인 미만 5인 기업 규모가 14,319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300인 이상 기업 규모가 33,03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의 차이는 5인 미만 기업 규모에서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인 이상 기업 규모에서 6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9] 300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 대비 시간당 임금 차이

[표 4-4] 기업 규모와 시간당 임금 총액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573	22,193	15,472 (69.7)
5인 미만	14,319	14,980	13,090 (87.4)
5-29인	19,281	20,319	16,147 (79.5)
30-299인	21,637	22,909	15,887 (69.4)
300인 이상	33,033	34,769	22,429 (64.5)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비율  
 자료: 2020. 고용노동부. p.5

고용형태에 따른 연령별 시간당 임금 총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하며, 40대를 정점으로 하여 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전체 시간당 임금 총액은 23,750원이며, 정규직은 25,057원, 비정규직은 17,430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수준은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50대부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고용형태에 따른 학력별 시간당 임금 총액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 총액은 증가하며, 대학원 졸업을 제외하고 정규직의 학력별 차이는 비정규직의 학력별 차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대학원 졸

업을 제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대학원 졸업은 정규직의 89.2%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5] 고용형태에 따른 연령별 시간당 임금 총액**

(단위: 원,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573		22,193		15,472		(69.7)
19세 이하	10,506	[100.0]	12,461	[100.0]	9,754	[100.0]	(78.3)
20~29세	15,139	[144.1]	16,353	[131.2]	12,342	[126.5]	(75.5)
30~39세	21,451	[204.2]	22,250	[178.6]	16,834	[172.6]	(75.7)
40~49세	23,750	[226.1]	25,057	[201.1]	17,430	[178.7]	(69.6)
50~59세	22,410	[213.3]	24,069	[193.2]	17,213	[176.5]	(71.5)
60세이상	16,760	[159.5]	18,421	[147.8]	14,819	[151.9]	(80.4)

\* [ ]: 19세 이하 대비 수준, ( ):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4

**[표 4-6] 고용형태에 따른 학력별 시간당 임금 총액**

(단위: 원,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573		22,193		15,472		(69.7)
중졸이하	13,670	[54.7]	14,842	[57.2]	12,679	[71.4]	(85.4)
고졸	16,368	[65.5]	17,410	[67.1]	14,390	[81.1]	(82.7)
전문대졸	18,988	[76.0]	19,848	[76.5]	14,465	[81.5]	(72.9)
대졸	24,974	[100.0]	25,950	[100.0]	17,747	[100.0]	(68.4)
대학원졸	38,313	[153.4]	38,992	[150.3]	34,774	[195.9]	(89.2)

\* [ ]: 대졸 대비 수준, ( ):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4

산업별 시간당 임금 총액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금융·보험업이 38,511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36,928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금융·보험업이 24,951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이 24,320원, 건설업이 21,854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건설업이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이 86.7%로 나타났다.



[표 4-7] 고용형태에 따른 산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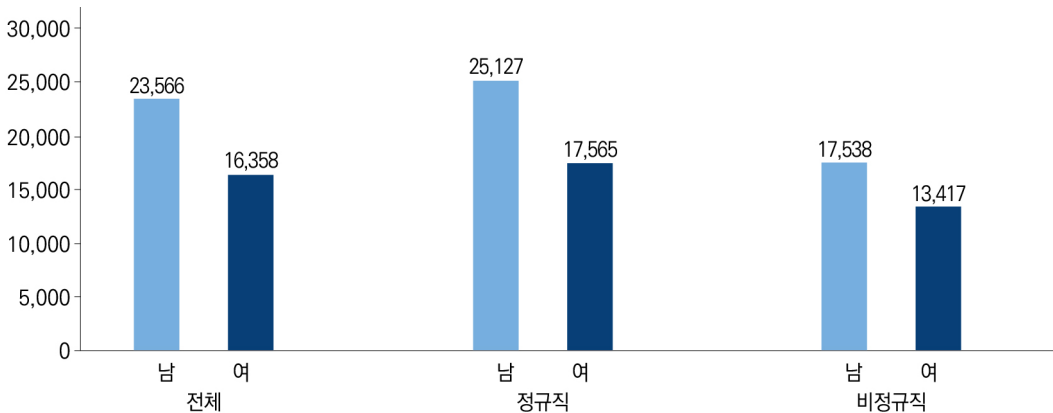
구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하수 폐기물 환경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 점업	출판 영상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 복지	예술 스포츠	협회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19,784	23,365	22,011	35,159	21,507	21,404	18,635	19,867	11,306	27,219	36,699	15,850	28,683	18,532	26,447	17,251	15,354	15,545
정규직	22,405	23,686	22,994	36,928	21,951	20,981	20,038	20,634	12,435	28,655	38,511	20,371	29,514	19,670	28,062	18,266	17,956	16,176
비정규직	14,914	18,005	13,844	17,219	18,105	21,854	12,339	15,815	10,231	14,272	24,951	11,976	18,540	14,585	24,320	13,932	12,553	13,873
	(66.6)	(76.0)	(60.2)	(46.6)	(82.5)	(104.2)	(61.6)	(76.6)	(82.3)	(49.8)	(64.8)	(58.8)	(62.8)	(74.1)	(86.7)	(76.3)	(69.9)	(85.8)

( ) :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5

성별에 따른 임금불평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내부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라도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존재한다. 2019년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살펴보면, 정규직 남성은 25,127원, 여성은 17,565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남성은 17,538원, 여성은 13,417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은 약 70%이며, 비정규직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이 약 76%로 나타나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성별 임금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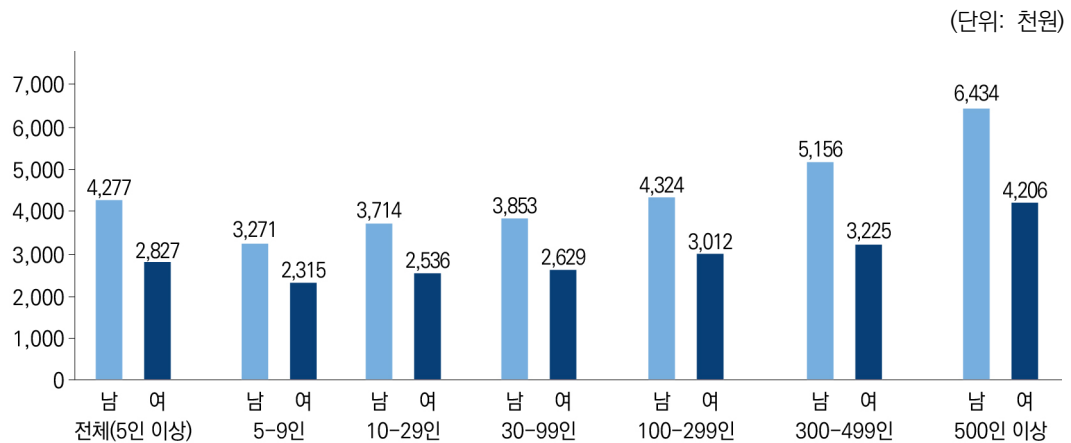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4-10]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시간당 임금 총액 차이

기업 규모에 따른 성별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업 규모에 따른 월 임금 총액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 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성별의 임금차이는 300-499인 이상 기업의 남성이 515만 6천원, 여성 322만 5천 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인 기업의 남성이 327만 1천 원, 여성이 231만 5천 원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5-9인 기업은 약 71%, 10-29인 기업은 약 68%, 30-99인 기업은 약 68%, 100-299인 기업은 약 70%, 300-499인은 약 63%, 500인 이상 기업은 약 65%로 나타나 300-499인 기업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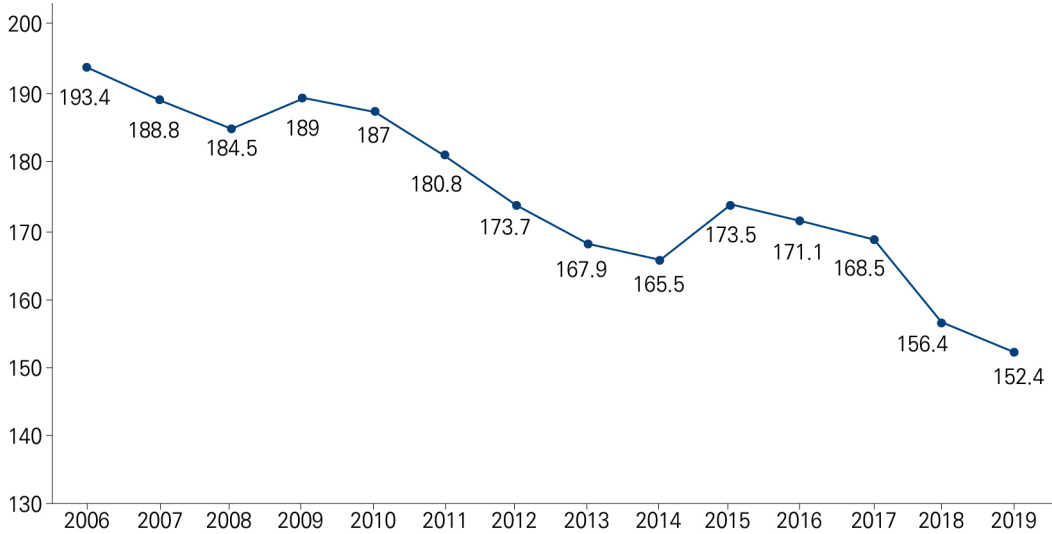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4-11] 기업 규모에 따른 성별 임금 차이

## 2 복지 불평등의 다층성

기업복지는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노동조합 가입여부, 퇴직연금, 상여금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노동시간은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실노동시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193.4 시간에서 2019년 152.4 시간으로 41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시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그림 4-12] 월평균 실노동시간 추이

2019년 기업 규모별 월평균 실노동시간을 살펴보면, 30-299인 기업이 163.0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기업이 136.1 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간은 정규직은 월평균 노동시간이 16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299인 기업의 노동자가 실노동시간 169.0 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기업이 161.6 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실노동시간 140.7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 기업이 88.8 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수준은 300인 이상 기업이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기업이 5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8] 규모에 따른 고용형태별 월평균 실노동시간

(단위: 시간, %)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52.4	165.2	112.1 (67.8)
5인 미만	136.1	161.6	88.8 (54.9)
5~29인	152.0	163.9	116.1 (70.8)
30~299인	163.0	169.0	136.1 (80.5)
300인 이상	162.4	165.9	140.7 (84.8)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12

고용형태별 월평균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의 내부를 살펴보면 단시간 노동자와 일일노동자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전체 노동시간은 2017년에 비해 2019년이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 내부에서 단시간 노동자와 일일노동자를 제외한 기간제 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4 시간으로 정규직 평균의 165.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는 2017년에는 용역노동자가 월평균 노동시간이 182.7시간으로 가장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170.3 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용역노동자가 166.6 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고용형태별 월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전체	168.5	(-2.6)	156.4	(-12.2)	152.4	(-4.0)	
정규직	183.1	(-1.6)	169.7	(-13.4)	165.2	(-4.5)	
비정규직	125.1	(-4.2)	116.3	(-8.8)	112.1	(-4.2)	
비 정 규 직	기간제노동자	182.6	(-1.3)	170.3	(-12.2)	160.6	(-9.7)
	단시간노동자	82.1	(-0.5)	79.2	(-2.9)	76.0	(-3.2)
	일일노동자	93.9	(-3.1)	90.8	(-3.1)	85.0	(-5.8)
	파견노동자	177.6	(3.9)	156.3	(-21.3)	150.9	(-5.4)
	용역노동자	182.7	(-5.5)	167.5	(-15.2)	166.6	(-0.9)

\* ( )는 전년대비 증감, 0.1시간: 6분

\* 근로시간: 소정노동시간 내 실제 노동시간+초과 노동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4

2019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90.3%, 건강보험 90.9%, 국민연금 91.1%, 산재보험 97.7%로 나타나 2018년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고용보험 20.4%p, 건강보험 34.0%p, 국민연금 37.0%p, 산재보험 0.5%p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고용보험 20.4%p, 건강보험 34.0%p, 국민연금 37.0%p, 산재보험 0.5%p로 나타나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국민연금이 37.0%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보험이 0.5%p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내부에서 파견 및 용역 노동자, 기간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5%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p)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체	90.3	(0.7)	90.9	(1.5)	91.1	(1.4)	97.7	(0.3)	
정규직	94.4	(-0.2)	98.2	(0.1)	98.0	(0.1)	97.8	(0.3)	
비정규직	74.0	(3.2)	64.2	(4.7)	61.0	(4.5)	97.3	(0.6)	
비 정 규 직	기간제노동자	85.0	(0.6)	93.4	(-0.2)	85.9	(-0.6)	98.5	(0.6)
	단시간노동자	76.8	(3.6)	75.8	(4.0)	73.7	(3.8)	94.9	(0.5)
	일일노동자	57.0	(3.8)	18.1	(7.2)	17.5	(6.3)	98.4	(0.1)
	파견노동자	97.2	(6.2)	90.7	(-0.3)	92.0	(1.6)	98.8	(4.6)
	용역노동자	95.1	(1.1)	96.4	(4.7)	92.3	(2.9)	98.2	(0.9)

\* 사회보험 가입률: 가입근로자수 ÷ 대상근로자수 × 100

\* 고용보험: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 건강보험: 교육서비스업, 60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 제외

\* 국민연금: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 제외

\* 산재보험: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 제외

\* 전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제외

\* 일일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사회보험에 따라 가입대상 범위(ex: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노동자는 적용 제외)가 달라 차이가 나타남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p.16-17

기업 규모를 토대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은 30인-299인 기업이 9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에서는 30-299인 이하의 기업에서 고용보험 99.0%, 국민연금 99.6%, 산재보험 10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이 10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형태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에서 5인 미만 기업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보험 31.5%, 건강보험 50.2%, 국민연금 55.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은 비정규직이 0.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규모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노동자	전체	90.3	90.9	91.1	97.7
	5인미만	72.7	77.3	77.9	90.9
	5~29인	94.4	91.9	92.1	99.7
	30~299인	97.8	97.3	96.9	99.9
	300인이상	96.2	99.9	98.9	99.6
정규직	전체	94.4	98.2	98.0	97.8
	5인미만	81.9	92.4	92.9	90.7
	5~29인	97.9	99.6	99.3	99.7
	30~299인	99.0	99.9	99.6	100.0
	300인이상	95.9	100.0	99.1	99.6
비정규직	전체	74.0	64.2	61.0	97.3
	5인미만	50.4	42.2	39.6	91.3
	5~29인	81.6	66.5	62.9	99.5
	30~299인	91.1	84.2	79.9	99.3
	300인이상	98.8	98.9	97.6	99.8

\* 전체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제외

자료: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률과 부가급부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9.9%로 나타나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고, 정규직은 12.9%로 나타나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고, 비정규직은 0.7%로 나타나 전년대비 1.2%p 감소하였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9.0%이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노동자는 57.2%, 비정규직 노동자는 23.2%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가입률 차이는 34.0%p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 적용률은 전체는 52.3%로 나타나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노동자가 61.8%로 나타나 전년대비 1.2%p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2.4%로 나타나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이는 39.4%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노조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단위: %, %p)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체		9.9	(-0.1)	49.0	(0.6)	52.3	(-0.4)
정규직		12.9	(0.2)	57.2	(0.2)	61.8	(-1.2)
비정규직		0.7	(-1.2)	23.2	(0.5)	22.4	(0.3)
비 정 규 직	기간제 노동자	1.6	(-3.2)	45.6	(0.0)	43.7	(-0.4)
	단시간 노동자	0.3	(-0.5)	18.3	(0.2)	19.1	(-1.4)
	일일노동자	0.2	(0.1)	1.5	(0.4)	2.4	(-0.2)
	파견노동자	0.5	(-1.9)	39.5	(-6.9)	39.5	(2.5)
	용역노동자	1.7	(-2.6)	38.5	(-0.8)	25.1	(1.3)

\* 비정규직: 특수고용 제외

\* 노동조합 가입률: 가입 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 100

\* 퇴직연금 가입률: 가입 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2020, p.17

기업 규모에 따른 노조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도 비정규직의 30-299인 기업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제외하고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은 300인 이상이 31.2%, 퇴직연금 가입률은 30~299인 기업이 36.6%, 상여금 적용률은 300인 이상이 44.7%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기업 규모에 따른 노조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단위: %)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
전체	전체	9.9	49.0	52.3
	5인미만	0.7	16.2	33.8
	5~29인	4.4	47.1	48.9
	30~299인	15.7	69.3	60.0
	300인이상	28.8	74.0	78.9
정규직	전체	12.9	57.2	61.8
	5인미만	1.1	22.0	45.5
	5~29인	5.7	54.2	57.1
	30~299인	18.9	76.0	66.4
	300인이상	33.2	77.5	85.2
비정규직	전체	0.7	23.2	22.4
	5인미만	0.0	5.5	12.1
	5~29인	0.6	25.7	24.1
	30~299인	1.5	39.4	30.8
	300인이상	2.0	52.7	40.5

자료: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제5장

##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동에 따른 불평등

---

제1절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변동

제2절 지능정보사회와 노동시장 불평등



## 제 1절

#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변동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동<sup>3)</sup>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로봇, 나노 기술(Nano Technology)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파급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1월에 개최되었던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요 포럼 주제로 삼아서 기술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해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능정보 기술이 산업, 사회, 삶 전반에 미치는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에는 제한적인 지적 활동만을 모방하는데 그쳤던 기술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지각, 학습, 추론 능력 등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로 구현하게 되었다(e.g., Baek, Lim, and Yu, 2016).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기술들은 대규모 RandD 투자로 함께 거대기업들에 의해 기술 확산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기존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크다.

기존의 기술은 인간에 의한 기계의 통제를 통해 기계의 조작 및 처리를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었다면, 지능정보기술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전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토대로 하는 정보사회는 컴퓨터, 멀티미디어, 통신 분야가 매체의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정보생산과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통신·방송 융합, 음성·데이터 통합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이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난 디

3) 이 장의 내용은 엄호진·이명진(2020) 중 일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지텔 융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그 경계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AI)에 토대를 둔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시키면서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토대로 자동화 또는 로봇화와 함께 인공지능의 혁신을 가져다 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하여 일자리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더 심화되어 갈 것이고,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였던 분야도 기술의존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의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창조적인 판단이나 감성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세계로봇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 2017)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밀도<sup>4)</sup>는 63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싱가포르(로봇밀도: 488), 독일(로봇밀도: 309), 일본(로봇밀도: 303), 스웨덴(로봇밀도: 223) 등이 한국 다음으로 로봇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로봇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노동자 약 5만 명중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15,000명은 2025까지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결원을 보충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생산 설비의 자동화 혹은 로봇화와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 변하고 있다(중앙일보, 2020).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사회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AI)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고, AI와 관련한 사회 변화를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술의 혁신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고유한 특성'을 가진 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에서 나타나

4) 로봇밀도는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숫자를 의미한다(IFR, 2017).

는 고용구조, 노동자의 직무 변화, 노동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져다줄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존 맥커시(John McCarthy)가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 1956년에 개최된 인공지능 학술회의에서 처음 사용하였지만, 인공지능에 관한 주제는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Bush(1945)는 인간의 지식을 증진시키는 체계를 제안하였으나 인공지능 연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Turing(1950)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부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논의되었는데, 공학과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신 분야, 컴퓨터 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정의하였다(McCarthy, et al., 1955, Charniak and McDermott, 1985; Kurzweil, et al., 1990; Rich and Knight, 1991; Luger and Stubblefield, 1993). 다만, 여러 분야의 다른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모방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것이다(Baek, Lim, and Yu, 2016).

인공지능이 보다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도 세분화되었다. Russell et al.(2003)은 인간적인 사고 시스템, 합리적인 사고 시스템, 인간적인 행동 시스템, 합리적인 행동하는 시스템의 네 가지의 기술분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 분류와는 별개로 철학적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를 하였는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지적 능력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약한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인간의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강한 인공지능은 이를 넘어 어느 정도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의미한다(Baek, Lim, and Yu, 2016). 특히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면서 특정 영역에서 기초적인 작동원리를 내면화하고 정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Kim, 2016).

최근에는 강한 인공지능이 기존에 인간의 높은 수준의 지적·판단 능력을 기반으로 한 법률이나 의료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창작물 또는 발명과 유사하다면 이에 대해 법적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물론 강한 인공지능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혁신을 가져다 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은 인간의 두뇌가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일정한 유형을 발견하고 특정 사물을 정형화하는 인간의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하였다. 이를 통해 컴퓨터 알고리즘이 사물을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음성인식, 영상인식,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오세욱·이소은·최순욱, 2017). 딥러닝 기술은 컴퓨터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토대로 한 기계학습이다. 현재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Caruso, 2018).

ICT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의 각 부문을 자동화 단계를 넘어서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지능화 단계로 변화시키고 있다(Baek, Lim, and Yu, 2016).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능정보사회를 언급하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사회를 넘어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지능형 시스템을 토대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해내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정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소관 부처별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중복적 규제를 방지하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요한 기술적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발생시킨다는 슈페터(Schumpeter)의 주장과 경제발전에 관한 콘트라티에프(Kondratieff)의 장기파동이론을 결합시킨 네오슈페터주의



(Neo Schumpeterian)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토플러와 벨은 기존의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하여 기계 기술이 지적 기술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경제활동과 정치형태, 그리고 생활양식과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제 부문이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기술직, 서비스직, 관리직이 증가한다. 그리고 컴퓨터, 멀티미디어, 통신 분야가 매체의 중심을 이루면서,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이 경제활동의 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술에 대한 의존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비과학적이며 주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원하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인공지능은 보편적인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Kim, 2016).

정보사회가 되면서 기술이 도구이고 가치중립적이라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기술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따르면 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기술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은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의하여 이용되고 해석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술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능정보기술은 사회적 가치와 철학, 사회적 선택을 반영하여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 기술로 진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이 인간의 도구적 기능의 대체를 넘어서 인간과 기술의 역할관계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능정보시대에서는 인간과 기술의 상호관계에 있어 인간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에 대해 인류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은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지능정보사회는 정보사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축적된 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자료 간의 연계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료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능정보사회는 정보사회와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력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또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물론 과업이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의 정도나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기술이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평균적인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정보 독점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격차에 따른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Kim, 2016). 김영식(2019)은 인공지능 및 관련 공학분야에서의 기술 역량의 증가는 새로운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표 5-1]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 비교

	정보사회 (3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양적차원	데이터베이스	자료 연계와 통합 / 빅데이터
질적차원	조력 기능	문제 해결 능력 / 의사 결정 능력

역사상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고 사회 가치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시켰다(Kim, 2016).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이나 지능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예를 들면 2진법에 기반한 디지털화나 이를 활용한 반도체 기술의 발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복잡한 인지와 판단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인간 행위를 뛰어넘는 능력을 의미하는 슈퍼인텔리전트(Super Intelligence)를 지니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Antonov, 2011; Baek, Lim, and Yu, 2016).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기반하는 지능정보시대에 관한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능형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기획, 분석, 의사결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노동 영역을 기술이 대체하게 됨으로써 직업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인공지능은 영화 시나리오, 시, 소설 등을 작성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창작 활



동에 사용되고 있다. 간호사의 단순 업무나 법무사의 사전 조사 업무 등이 인공지능으로 교체된다면, 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기술이 확대되면서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인간 고용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고용시장과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 및 노동의 대체는 우울한 전망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직종이 존재했으나 새로운 직종의 개발과 새로운 직업군의 형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김두환(2018)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하면서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노동세계에서 초래되는 변화에 대해서 일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구에 서 사회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대체되는 노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잉여의 존재와 노동 시간의 축소와 함께 나타나게 될 여가 시간의 증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제2절

# 지능정보사회와 노동시장 불평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지식정보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중 대표적인 것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는 기술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 Piore 와 Sabel(1984)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노동방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혁명은 기존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일자리의 탄생을 견인하였는데, 18세기 1차 산업혁명으로는 농업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공장 일자리가 늘어났고, 생산성이 확대되어 제조업이 부상했으며 이는 부의 증가와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Ahn and Lee, 2016). 19세기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기의 발명과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되는 생산 단계별 분업과 공정의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없던 수요를 만들어 내며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확대하며 없어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Ahn and Lee, 2016). 20세기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 기술이 적용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혁명으로 촉발된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새롭게 부상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었다(Ahn and Lee, 2016).

일자리 문제는 과거 세 차례의 산업혁명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으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많은 부분을 보완·대체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경망 네트워크연구에서 발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인 딥러닝(Deep Learning)의 발달로 인해, 인공 지능의 영역은 확장됐다. 전통적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자동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금융, 법률, 의료, 언론 등의 전문적인 영역까지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Kim, 2016).

그리고 거대 자본과 지능정보기술의 결합은 전문성과 효율성에 의존하는 노동 환경과 조직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의 중요한 환경으로써 개

방형 소통 플랫폼이 특정한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폐쇄적 혁신을 대체할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Brynjolfsson and McAfee, 2014; Caruso, 2018). 개별조직이 중심이 되었던 폐쇄적 혁신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개방적 혁신을 지향하며 공유경제로의 진화와 접목하게 된다. 전통적인 산업경제는 소유와 폐쇄적 조직이 이끌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네트워크형 플랫폼 조직을 토대로 공유와 협력적 활동이 확산 되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며(e.g., Lee, Davari, Singh, and Pandhare, 2018; Ivanov et al., 2016),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김영식(2019)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거시경제의 고용 문제, 경제성장 및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한 이익이 소수의 혁신가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새로운 업무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5-2]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및 노동환경 비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공업화 사회)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시기	18세기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1세기
특징	기계화	대량 생산 자동화	정보화	융합
대표기술	증기기관	전기, 화학에너지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노동 환경	농업 일자리 감소 공업 일자리 증가	생산 단계별 분업 공정의 표준화	생산성 증가고용 증가	개방형 소통 플랫폼

자료: Ahn and Lee (2016) 재구성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활의 편리함이 확대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노동 및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반면 직업구조 및 직무가 변화함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형태가 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Furman and Seamans, 2019; e.g., Caruso, 2018; Huang and Rust, 2018; DeCanio, 2016). [표 5-3]은 지능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노동시장의 요소 중에서 고용형태, 노동과정, 직무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5-3] 지능정보사회에서 노동 시장의 변화

	양적 변화	질적 변화
고용형태	임시직, 파견직	근로와 여가의 경계성 모호
노동 과정	기계(인공지능, 로봇, 네트워크)의 비율 증가	인간과 기계(인공지능, 로봇, 네트워크)의 협업
직무	비숙련, 반숙련 직무의 감소	직무(특화, 창조)의 차별화 증가

지능정보사회의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작업방식은 인간-네트워크, 인간-기계 사이의 역동적 협력 형태를 포함하는 작업방식으로, 네트워크 안에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며 제조 과정에서도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e.g., Longo, Nicoletti, and Padovano, 2017).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진 챗봇(chatbot) 플랫폼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과 고객의 소통은 인공지능형 플랫폼을 토대로 인간과 기계간의 역동적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Luo, Tong, Fang, and Qu, 2019; e.g., Kim and Lee, 2018; Wirtz et al., 2018).

기업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용 감축을 추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Work Automation)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기술은 공장 자동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정교화 되면서 인간의 지적활동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공장 자동화를 넘어 업무 자동화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Manyika et al, 2017)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업무가 이미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7,300만 개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로봇과 자동화는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동력 대체로 인한 고용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특히, 로봇과 자동화의 위협에 취약한 직무와 직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무와 직업은 대부분 저숙련 저임금 직업이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로봇과 자동화는 단순 직종의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전문·숙련 직종의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e.g., Huang and Rust, 2018; Kim and Lee, 2018). 그러나 지능정보사회가 도래됨에 따른

직무의 대체로 인해 일하는 시간과 노동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이전보다 적은 인력으로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게 되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로 인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서 노동수요가 늘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직업의 창출도 가능하다(e.g., Acemoglu and Restrepo, 2019).

모든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보급되는 과정과 인터넷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해킹에 대한 위협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도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과 산업의 업무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직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AI 기술이 인간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와 육체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노동 생산성과 효율성을 많이 높일 것이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지루한 업무도 AI가 대신 처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AI 기술이 발전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뿐만 아니라 지식 집약적인 과업도 변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지식 집약적인 분야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AI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있지는 않다. 대체로 AI 기술은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독일 안스바흐(Ansbach)에 위치해 있는 아디다스(Adidas) 공장의 경우는 아헨(Aachen) 공대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로봇과 3D프린터로 신발을 생산하면서 필요 생산자를 600명에서 10명으로 줄였다. 오프라인 소매·유통 매장에서도 무인형 매장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 무인 슈퍼마켓인 ‘아마존 고’(Amazon Go)가 2016년 12월부터 미국의 시애틀(Seattle)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아마존 고’에서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출입문에 대고 입장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면 인공지능, 센서,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을 통해 자동 인식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된다. 국내에서도 이마트(e-Mart)를 시작으로 하여 무인 주문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맥도널드, 롯데리아 등에서는 소비자가 키오스크(Kiosk)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무인화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수준에서 넘어서, AI 기술이 더욱 전문적인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는 경향은 피하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최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Baek, Lim, and Yu, 2016).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의 대체 문제에 관해서는 비판론과 낙관론이 존재한다. 비판론은 일자리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동화를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물리적 근로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및 인지적 근로가 AI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으로, 고용은 물론 산업혁명 이래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가져준다(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16). 문서정리 및 자료검색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는 손쉽게 AI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사회 여러 부문에서 하위직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사라진다.

Eggers, et al.(2007)은 Governing에서 실시한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나치게 많은 단순하고 복잡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서형준, 2019). 따라서 단순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용을 경감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추가적인 복지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위직의 인력감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들로부터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긍정론은 노동의 대체에 대해 비판하고 AI를 통한 노동의 증강(augmentation)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Davenport, and Kirby(2016)는 AI에 의한 노동 대체에 기반한 비판론을 비판한다. 그들은 AI와의 협력으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노동의 증강 현상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Mehr, Ash, and Fellow(2017)는 AI를 통해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새로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용의 감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 AI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력의 감축이 아니라 인간의 업무에 대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Govbot이 단순한 의사결정과 정보입력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들은 더욱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여 인간과 AI 사이에 증강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Hwang, 2017).

AI가 문학, 음악, 미술 등 보다 창조적인 분야인 예술 분야에 이바지한 사례도 있다. AI가 활용된 예술이 갖는 특성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창의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틀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창조성과는 전혀 방식의 창조성이 나타나는 가변성을 의미한다(최효승·손영미, 2017).

## 2 노동시장 불평등의 변화와 정책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큰 측면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도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시나리오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에 기반을 둔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자의 숙련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 작업 과정에 대한 지적 숙련(intellectual skill) 정도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작업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권리를 갖고 자신을 조직화한다. 업무 내용은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유연성을 지니게 된다. 경영진이 기본적인 방향이나 전략적 목표 등을 제시한다면, 노동자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 고숙련 전문가로 변화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노동자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동자 수준과 자율성 향상이 모든 직무, 작업 과정, 그리고 노동자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일부 직무의 소멸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배제를 수반하게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정적 시나리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직무가 쉽게 대체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불안정한 직업을 양산하게 된다. Frey and Osborne(2013)은 미국의 노동성이 제시한 702개의 대표적인 직업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자동화에 따른 전반적인 직업의 소멸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가 주목하는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작업환경의 등장, 노동의 유연화, 자동화의 증가에 대한

전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긍정적 시나리오가 고속련 인력의 증가와 전반적인 노동자의 숙련 정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부정적 시나리오는 소수의 고속련 인력의 잔존과 저숙련 인력의 소멸에 주목한다. 결국,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재편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전망으로 달라진다.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 하듯이,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고용의 유연화, 노사관계의 분권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견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신자본주의 확산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평가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거대 노동조합과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향을 강조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신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동시장 불평등의 확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80년 이후 세계화와 신자본주의의 확산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노동시장과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는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세계화와 신자본주의의 확산도 한국사회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예를 들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도 어떤 종류의 기업에 속한가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한국사회에서 전체 노조 조직률은 10.7%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높지 않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문 간 질적 차이를 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자. 2017년 현재 300명 이상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57.3%이지만, 100명에서 299명은 14.9%에 불과하다.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질적 차이도 존재한다. 2018년 현재 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17.1%이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약 3.1%에 불과하다(통계청, 2018).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에 미친 부문별 질적 차이와 차별적 영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내 불평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변화가 노동시장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사회의 산업부문의 특



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자동화가 이미 상당 수준 진전된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반면에 자동화 기술이 적용될 여지가 많은 부문은 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다.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의 저항이 큰 부문에서는 그 영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적을 것이다.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정책도 다르다.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는 전반적인 노동자의 지적 숙련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동자에 대한 직무 전환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긍정적 시나리오 하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정책은 근본적인 사회정책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비교적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단순한 정보와 직무만을 수행하였던 노동자는 더 유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불평등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절한 기술과 직무 능력을 갖춘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재배치와 재교육을 통해 직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불평등은 감소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지속하여야 하고, 노동시장 전환 과정을 통해 불평등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반면에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불평등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소수의 노동자만이 남고 더 필요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던 다수의 노동자는 도태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한 불평등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다. 기존의 노동 관련 프로그램이나 개별 노동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앞서 언급한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요인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에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성별 불평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노동시장에 불평등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고학력 여성 인력이 풍부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조직과 직무 유연성은 성별로 더욱 균형이 잡힌 직장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등장 가능성도 크다. 기회와 이득을 얻을 여성 근로자가 제한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대졸 이상 숙련 근로자에 더 많은 기회와 이득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특정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STEM이라고 알려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가 해당한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심지어 대학졸업자가 남성보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게다가 많은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숙련 기회와 직업 경력을 쌓지 못하는 부문에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직무가 사라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성별 불평등의 강화 가능성이 크다(World Economic Forum, 2016).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변화에 따라 더 특화된 성별 불평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년층에 대한 공적 부문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STEM 부문에서 여성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UNDP의 주도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STEM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Cliff, 2018).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차별적 영향은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기술 발달에 따라 기업은 정규직 이외에 재택근무자나 개별 계약자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된다.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더 유연한 일정에 따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일과 여가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으로서도 더 넓은 지역으로부터 유능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근로자의 기술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근로자가 누릴 기회나 유연성은 기술이나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한정될 것이다. 즉,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넣기에는 근로자의 기술이나 숙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근로자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형태 자체만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평가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이 생산과정에 접목되면서 인간, 기계, 제품 및 전체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생산, 물류, 서비스 시스템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공장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의 효과성은 전체의 가치사슬이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협력 체제를 구축할 때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은 스마트 공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이문호, 2019).

기업 규모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관련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근로자 수, 근로자의 고용형태, 임금과 복지 같은 측면에서 큰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기업에서는 노조 같은 저항 기제를 통해 이에 저항하거나 늦출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나 그러한 시도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나 세력이 부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변화 과정에서 개별 행위자나 집단의 역학 관계에 따라 다소 다를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도입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고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 공장이 확대되면 노동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문호, 2019).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노동조합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분배 중심의 양적 교섭을 넘어서 기술의 도입과 기술의 활용 방식에 개입하는 질적 교섭의 확대가 필요하다.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배제적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도입에 따른 갈등요인을 노조의 개입으로 사전에 협의와 조정을 통해 노동참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문호, 2019).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노동참여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전체에서 불평등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에 대한 하나의 정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최저생계비와 달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보편적인 소득을 가리킨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노동자

나 저소득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대안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의 현실적인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역사와 수준이 높은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기본소득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재정 문제와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추가로 기본소득이 노동 불평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은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만큼 극단적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자체가 동질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의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나 세계화의 영향과 그에 따른 불평등 정도가 균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산업부문이나 노동시장의 부문별 특성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영향이 다를 것이다. 노조 조직이나 외부 정치 환경도 기술의 질적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불평등의 정도나 양상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이 보편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다.

# 제6장

## 결론

---

제1절 요약

제2절 토의



## 제1절

## 요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기업 규모, 고용형태, 직종, 업종 등에서 노동시장의 분절이 뚜렷해지고 노동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은 서구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은 서구의 국가들보다 더 뚜렷하게 관찰되는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는 한국의 중심부 노동시장과 주변부 노동시장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을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나아가 성별과 고용형태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 복지혜택 등에 있어서 격차를 보여서 다층으로 분석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노동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불평등 변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인 임금과 기업복지의 측면에서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사회의 변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노동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성별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을 복합성을 보여주는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은 노동시장의 위치에 따라 성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은 여성의 임금 격차, 승진기회, 입직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별 임금 차이를 보이며, 2019년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임금에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노동 불평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직무배치, 승진기회 등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으며, 출산 이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별을 토대로 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기업복지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에서 성별, 직종 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은 40~45%로 나타나 남성 비정규직의 32-31%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및 부가급부를 통해서도 고용형태 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 2019년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국민연금 가입률의 차이 49.6%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여금 적용률의 차이가 39.4%p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업 규모에 따른 시간당 임금총액의 차이는 300인 이상 기업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임금대비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4.5%, 300인 미만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는 57.0%, 3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은 42.7%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형태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복지의 측면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뿐만 아니라 동일규모의 기업 내부의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규모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2019년의 성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노동 시간, 임금, 복지혜택의 격차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30-299인 기업을 제외하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 시간이 길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노동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내부를 살펴보았을 때 단시간 노동자와 일일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제외하고 분석해 보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가입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5인 미만의 기업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조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30-299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 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의 측면 이외에도 4차 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예측된다. 지능정보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기술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인간의 노동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은 직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고용을 감소함으로써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전문직과 숙련직의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강화가 예측된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불평등에 다르게 영향을 준다. 성별로는 숙련 여성 근로자에 더 많은 이익과 기회를 의미하지만, 비숙련 여성 근로자나 비공식부문 여성 근로자는 불이익과 기회 축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고용형태별로도 영향이 다른데, 근로자의 숙련도, 지식, 직무 형태별로 다른 수준의 이익과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사이에 더 다양한 근로자가 존재하게 된다. 한마디로 분화과정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규모에 따른 영향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 따라 그 영향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 범위와 영향도 확대될 것이다.

## 제2절 토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 형태별, 기업 규모별의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적인 부분에서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격차를 보여 다층적으로 노동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의 영향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 불평등의 확대가 예측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 불평등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 강화와 양극화는 더 확대될 것이며,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불평등 완화는 노동시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나 청년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과 기업복지의 격차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 불평등의 양극화가 확대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 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상체계 및 복지체계에 대한 마련과 함께 관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도 보상체계 및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과 퇴출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소비의 촉진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기본소득의 재정 문제와 사회제도 구축에 대한 현실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노동 불평등의 양극화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노동시장의 불평등 다양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의 차원이 점점 복잡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에는 기업 규모에 따른 불평등이 주된 차원이었었다면, 여성 노동 시장참여율과 지속성의 증가로 성별 불평등이 전면에 주목받았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종신고용제 철폐와 각종 형태의 위탁의 증가로 인해 비정규직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가 떠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의 차원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문제처럼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gig economy 종사자 같은 일시적이고 유연한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생산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유연하고 일시적인 것을 넘어선 순간적인 유형의 고용에 기반을 둔 경제 부문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각종 형태의 플랫폼 기반 노동시장의 확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 문제는 복잡화 과정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거시적 계급이 더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사회학 내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Weed와 Grusky(2012)에 따르면, 최근 근에 전문가, 관리자, 근로자 등으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거시적 계급 개념으로 최근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다양한 고용방식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 계급 내에서 다양한 미시적 계급(micro class)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미시적 계급에 따라 삶의 기회, 생활양식,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가치가 달라진다. 바야흐로 포스트 직업(post occupation)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이러한 과정을 보다 촉진할 것이다. 근로자 사이에 더 다양한 방식의 분화가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도 그만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와 관련한 불평등 관련 정책은 어떻게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현재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과 관련한 정책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여전히 이상적으로는 1990년 후반대 이전의 정규직과 종신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과 상관없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이념적 구호를 내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는 비정규직이 급증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60대 이상 노인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제와 기간제 등 한시적 취업자가 급증하였다. 일부 공공부문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화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조선일보, 2019; 서울신문, 2020).

물론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다층적인 노동 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만약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의 효과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된 한국사회와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반을 둔 재구조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증가 추세를 조정하기 어렵다면 한국사회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 내부 불평등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분야는 교육, 노동, 복지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야의 연계가 단선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교육을 받은 인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을 찾게 된다. 만약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연계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 저출산에 따라 기존의 공교육시설이나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행정이나 교육 관련 단체의 행동을 고려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체계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생산과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고, 노조는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막고 기존의 임금과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리그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의 불안정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 사실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은 직장을 잃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조직체계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은 더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복지제도가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낙오된 인력에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인력이나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급증은 복지제도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은 이러한 교육, 노동, 복지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유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퇴출과 재진입의 유연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연공서열제의 원칙을 허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조직에 있는 근로자가 지나치게 이익이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조직 원리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부문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와 태도를 볼 때,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교육과 복지를 통해 이를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최소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공교육 시설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시설과 인력에 대한 재구조화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에서 보상 원리의 재구성이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승자독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최상위에 속한 사람에게만 대부분의 사회보상을 보장하는 경향이 크다. 특정한 기준을 세우고 여기에 포함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와 차별이 너무 크다. 이러한 경향이 결국 기득권이나 텃세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선천적인 능력이든 후천적인 노력이든 심지어는 타고난 운이든 그 원인과 상관없다. 물론 이러한 보상의 극대화는 경쟁을 강화하고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이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보상의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소수의 사회 구성원만이 만족할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경쟁을 통한 결과의 극대화나 효율성의 증가를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혹은 비물질적인 사회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4위나 5위, 심지어는 아래 등수의 성취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한 원리를 여러 부문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제2부 한국의 자산 불평등

## -한국의 자산불평등과 행복격차

### 제1장

서론

---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 KBS가 진행한 신년여론조사에서 코로나 확산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 되기 이전인 2020년 1월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sup>5)</sup> 이러한 인식에 부응하여 정부는 다양한 경제·복지 정책을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모토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과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한다는 국정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sup>6)</sup> 학계에서도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회와 정치권의 관심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필요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산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이우진(2018)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구는 자산소득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소득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로 인해,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 불평등 그 자체도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Piketty(2014)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성재·이우진(2017)은 재정패널 2008년~2014년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추정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점유율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에서 약 30%의 소득을 차지하고, 중위 40%가 약 51%, 하위 50%가 약 19%의 소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 점유율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약 42.5%를 차지하고, 중위 40%가 약 46%, 하위 50%가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불평등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5) “공정과 안전 ... 2020 한국사회 핵심 가치,” 『KBS News』, 2020년 1월 2일. (<http://bit.ly/35W9lBU>); “코로나 블루 심해졌다 61.9% ... 자영업자·주부 더 취약,” 『KBS News』, 2021년 1월 2일. (<http://bit.ly/35SBQAU>)

6) “혁신적 포용국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bit.ly/39liCP4>)

한 사회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작지만, 자산이 없거나 혹은 순 자산이 음인 사람들의 비율은 크기 때문이다.

Piketty and Saez(2014)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상위10%가 국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70년대에 30~35%를 유지했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50%에 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미국에 비해 낮지만, 30%를 밑돌았던 1980년대와 비교할 때, 불평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유럽의 경우도 상위 10%가 60%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인 변화를 살펴 보아도, 1870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위 50%가 소유한 부의 비중이 5%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산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기에 따라서 자산불평등의 구체적인 수준과 변화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서베이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서베이 조사의 경우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혹은 고자산층이나 저자산층이 과소 대표되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 또한 조사 문항에 따라, 응답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혹은 응답자 스스로 소득이나 자산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국세청 개인 소득 자료와 같은 행정데이터와의 통합을 통해 서베이 조사에만 의존하는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자산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나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신광영 등 2020).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 양상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불평등의 사회정치적 결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평등이 재분배 선호(김태심 2020; 박선경·이내영 2018; 백승주·금현섭 2012; 이보윤·김동훈 2015; 이철승·황인혜·임현지 2018, 이현경·권혁용 2016), 정치 참여(강우진 2018; 권혁용·한서빈, 2018; 현승숙·금현섭 2012), 정부 신뢰(김동훈·하상웅 2020), 그리고 개인의 주

관적 행복(김현정 2016; 이양호·지은주·권혁용 2013; 장승진 2011; 조동현·권혁용 2016)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연구들에서 불평등과 각 종속변수의 관계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승주·금현섭(2012)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 분석을 통해 불평등이 높은 자치구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는 반면, 이현경·권혁용(2016)과 같이 불평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계층이 정당 지지나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정치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불평등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현승숙·금현섭(2011)은 불평등이 높은 지역일수록 봉사 단체의 수가 많고,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참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혁용·한서빈(2018)은 국가수준에서 소득불평등이 높은 해일수록 투표에서의 소득 격차 - 중산층에 비교할 때, 저소득층의 투표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의 투표확률은 높은 현상 - 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저소득층의 투표참여를 저하시키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의 사회·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들이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내어 놓는 것은 독립변수로서 불평등을 어떻게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는가와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불평등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김동훈·하상웅(2020)은 객관적 불평등을 독립변수로 놓는가, 혹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놓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객관적 불평등은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불평등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은 정부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불평등 수치의 변화가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박선경·이내영(2018)의 발견이나, 지니계수나 소득 분배율 등과 같은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객관적인 불평등 수준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불평등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황선재·계봉오(2018)의 주장과도 일맥 상통한다.

객관적인 불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괴리되어 있는 현상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Hauser and Norton(2017)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국가의 객관적인 불평등 수준과 조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는 대체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실제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Gimpelson and Tresiman(2018)은 불평등에 대한 오해가 불평등 수준 뿐 아니라, 불평등이 변화하는 정도나 변화의 방향, 그리고 소득이나 부의 분포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객관적 수준의 불평등과 불평등 인식의 괴리에 대한 학자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어떤 학자들은, 불평등 수준이나 분포상의 위치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인 불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다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impelson and Tresiman 2018). 한편 다른 학자들은, 국가 수준의 불평등이 아닌, 지역 수준의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state)나 카운티(county) 수준의 불평등은 정책에 대한 지지 경향(Franko 2016; Johnston and Newman 2016),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Newman et al. 2015),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여부 (Newman and Kane 2017), 상원의원 선거에서의 투표형태 (Newman and Hayes, 2017), 또는 폭력적인 행동 (Philips 2017)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양상은 결국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Newman, Shah and Lauterbach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자산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자산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실거래가 DB를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의 실제 가치에서 나타나는 자산불평등 수준과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1월 이후 부동산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 실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개별 거래에 대해 해당 주택의 유형과, 크기, 주소 및 가격에 대한 원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기 및 지역에 수준에서 지니계수나 평균 가격 같은 집합 지표를 구축하고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시군구 단위에서 구축된 부동

산 불평등 지수를 서울 서베이 자료와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 변동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가 소유가구와 전월세거주가구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3장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하여 2006년 1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의 주택 매매거래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 본다. 자산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국가 전체 수준의 분석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시도 수준의 분석을 가미하여, 한국 부동산 불평등에서 나타난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장은 서울서베이와 실거래가 자료를 결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5개 자치구가 경험한 평균거래가의 변동이 서울시민들의 행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서울서베이를 비롯하여 여론조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단일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데 반해 본 연구는 11년에 걸쳐 축적된 자료를 분석한다. 이는 분석 결과가 조사 시점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줄여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시계열적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 제2장

### 한국의 자산 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

---





현재 한국에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본가구를 선정한 후 부동산과 금융 자산 및 부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자산조사(2006년)나 가계금융복지조사(2010년 이후)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헌영 등(2020)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은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조사 진행의 어려움, 그리고 조사 결과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한 한계를 갖고 있다. 서베이 자료는 추출된 표본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의 크기는 대략 1000~2000정도이며, 고소득 집단이나 최상층 자본가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본의 대표성은 서베이 조사 자료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과 같이 고소득자나 최상층 자산가의 포함여부가 불평등 추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 고소득자나 빈곤층이 표본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두 집단 모두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에 대해 실제 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소득의 경우, 응답자가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산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등락의 자산의 가치가 변하지만, 자산 보유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가구 소득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가구주가 결혼하지 않은 취업 자녀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다. 먼저 김낙년(2016)은 상속세 자료와 유산승수법(estate multiplier method)을 사용하여 개인의 자산분포를 추정한 바 있다. 상속세 자료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자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유산승수법은 이를 활용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부를 추정한다. 사망할 확률이 연령과 성, 계층별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룹별 사망률을 계산한 후, 그룹별 사망자수에 그에 해당하는 사망률의 역수를 곱하면 살아 있는 인구 수를 추정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승수를 사망자가 소유한 자산에 곱하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자산을 추정할 수 있다. 유산승수법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개인의 자산분포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자산이 가장 많은 상위 1%가 전체 자산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7년의 경우 평균 24%, 2010-2013년에는 평균 2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6%와 12.1%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2016)은 또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수준을 영미 국가 및 대륙 유럽 국가와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이 영미 국가와 대륙 유럽 국가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낙년(2019)은 국민대차대조표와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결합하여 자산의 분포를 추정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 자료와의 보정을 통해 소득과 금융 부채를 실태에 가깝게 추정했지만, 자산은 그렇지 못했다. 김낙년(2019)은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산을 추정했다. 첫째, 금융소득과 같이 행정 자료 보정을 통해 신뢰할 만한 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자본화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정했다. 둘째, 자산의 총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서 가져오되, 자산의 분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분포와 다르지 않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추정한 금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해 파악된 금액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누락된 부분은 랜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했다. 셋째, 과세 자료 등을 통해 자산 분포에 대해 좀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자산 추정에 반영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자료는 최상층이 샘플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소득세 자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최상층의 금융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조사자료에서 최상층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보정했다.

보정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한 순 자산은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해 파악된 총 자산의 6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소득의 경우도 표본 조사에서 약 25% 정도 누락되었으며, 금융 부채의 경우도 실재의 62%를 파악하는데 그쳤다. 연금 및 보험의 경우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보험 뿐이었으나, 그것도 전체 보험의 64%만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부동산의 경우 주택은 조사 자료가 실제보다 다소 과소평가된 반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그 반대였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해 파악된 것과 차이가 있지만, 그 분포는 조사 자료가 실태와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구성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주택은 자산 구성에서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주택이 6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계층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최상층의 경우 금융 소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산층의 경우, 금융

자산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산층이 주택 구입과 관련한 부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보면, 양자가 유사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고령자와 같이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이들 뿐 아니라,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없는 이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산 집중도를 살펴 보면, 순 자산의 규모에 따라, 상위 0.1%, 1%, 10%에 속하는 개인 자산 비중이 각각 10%, 24%, 63%로 나타났다. 유산승수법에 따른 결과와 비교할 때, 상위 0.1%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자산은 과소 보고된 반면, 상위 10%와 1%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최상층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자산 집중도는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프랑스나 영구에 비해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자산 집중도는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낮았지만, 최근에는 한국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성균·신희주·김창환(2020)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전반에 걸친 자산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적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불평등은 0.626을 기록한 2012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서서히 감소해서 2015년 0.596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해서 2019년에는 0.604를 기록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것은 상위 집단의 자산 증감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 총액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상위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불평등의 하락하던 시기에는 순자산의 감소하고, 불평등이 증가하던 시기에는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소득 중간층과 하위층의 격차 확대로 인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자산불평등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격차이다. 금융자산의 불평등이 부동산 불평등보다 더 크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Davies and Shorrocks, 2000)도 있지만, 최근에는 저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제도를 포함한 주택시장활성화 정책의 확대로 인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Piketty 2014). 한국의 경우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가구자산항목이 자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성재·이우진(2017)은 협조적 게임이론에서 사용되는 샤플리값(Shapley value)을 사용해서 재정패널 1~7차(2008년~2014년)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평균 샤플리

값 분해를 적용하는 경우와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하는 경우 다소 차이가 있었다.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할 경우, 전체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 노동소득의 기여도가 자산 소득의 기여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할 경우, 자산소득의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산불평등의 원천별 기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분석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하면, 총 자산의 불평등도에 대한 부동산 자산의 기여도가 83.3%를 차지한 반면, 금융자산은 12.2%, 기타자산은 4.4%로 나타나 부동산 자산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할 경우, 총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금융자산의 기여도가 40.1%, 부동산자산 기여도가 28.2%, 기타자산 기여도가 3.2%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기여에 대한 분석에서는,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할 경우, 현 거주주택 자산이 49.5%, 주택 외 부동산이 23.5%,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의 17.7%, 전월세 보증금이 5.7%를 차지한 반면,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적용할 경우에는 주택 외 부동산 39%,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 36.9%, 현 거주주택 자산 0.8%, 전월세 보증금 23.3%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자산불평등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산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특히 부동산자산의 절대 기여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소득은 감소하고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 연령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젊은 층의 경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성균·신희주·김창환(2020) 역시 샤플리값(Shapley) 분해기법을 사용하여 거주주택, 거주 외 부동산 그리고 금융자산 등 자산구성 항목이 전체 자산불평등에 기여한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 전 기간에 걸쳐 부동산자산의 불평등이 금융자산의 불평등보다 전체 자산의 불평등 양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74%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거주주택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비거주용 주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거주주택의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0.35인 반면, 비거주용 부동산의 기여도는 0.41이었다. 2019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비용의 증가로 인해 비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어나, 비거주용 부동산의 자산불평등

기여도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부동산 자산의 기여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조사기간 중 큰 변화 없이 약 0.2수준을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은 자산을 축적하는 주요 원천이 되고, 자산은 소득 발생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자산과 소득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에 관한 다른 나라들의 연구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득과 자산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않거나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경우도 있고(Muller, Buchholz and Blossfeld, 2011),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음의 관계를 갖는 나라들도 있다(신진욱, 2013).

한국에서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정준호·전병유(2020)는 스피어만 상관계수 및 코플라 함수 등을 사용하여 자산과 소득의 양적인 관계를 측정 후, 이를 토대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 순자산 평균은 OECD의 평균 수준이고,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상관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Jantti et al(2015)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미국은 0.61, 독일 0.59, 이탈리아 0.52, 스페인 0.17이다. 한국의 경우,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이 이뤄지기 전인 2017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할 때, 피어슨 상관계수는 0.533, 보정이 이뤄진 이후인 2018년에는 0.521로 나타났다. 코플라 함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한편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은 가구의 자산분포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순자산 1~3분위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 경우, 해당 가구가 자산 저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4~6분위의 경우, 소득과 자산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다. 4,5분위의 경우, 자산 저분위와 유사하게, 소득이 증가할수록, 해당 자산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했지만, 6분위의 경우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순자산의 중간 분위에서는 소득분위별 소득의 한계효과 뚜렷하지 않으며, 자산 형성에 소득 이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7~10분위의 경우, 소득분포에 따른 한계효과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가 최상위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최상위 자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소득과 자산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은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정준호·전병유(2020)의 분석에서 소득은 50대 중반에 피크점에 도달하고, 자산은 60대 초반에 피크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70대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자산으로 일정 부분 보완하는 메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균·신희주·김창환(2020)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40세 미만이나 40~59세 연령층에서 근로소득과 순자산의 상관계수가 0.4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데 비해,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0.2에 불과했다. 즉,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자산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산과 자산소득의 상관 정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상 연령층 내부에서도 자산 상위집단과 자산 하위집단에서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에 차이가 있었다. 자산 상위집단에서는 부동산·금융자산과 자산소득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고, 근로·사업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난 반면, 자산 하위집단의 경우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 제3장

###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한 한국의 부동산 불평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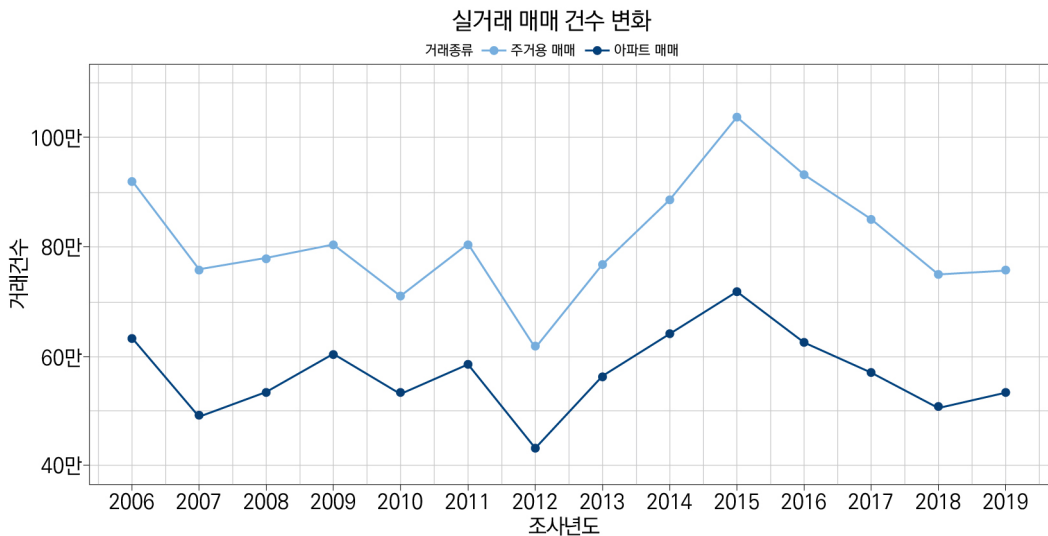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는 2006년 1월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의 개별 거래에 대해 해당 주택의 유형과, 크기, 주소 및 가격에 대한 원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모든 거래에 대한 전수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모집단의 평균 거래가격과 거래가격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2006년 1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의 주택 매매거래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 본다.<sup>7)</sup>

[그림 3-1]은 전국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거래된 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의 매매건수 변화를 나타낸다. 조사 기간 중 매매가 가장 활발했던 해는 2015년이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를 포함한 주택의 전체 거래 건수는 103만7천여 건이고, 이 중 아파트 거래는 약 71만 8천 건이다.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대체로 매매 건수가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체 거래 건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차이가 있는데, 2009년 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07년에는 약 65%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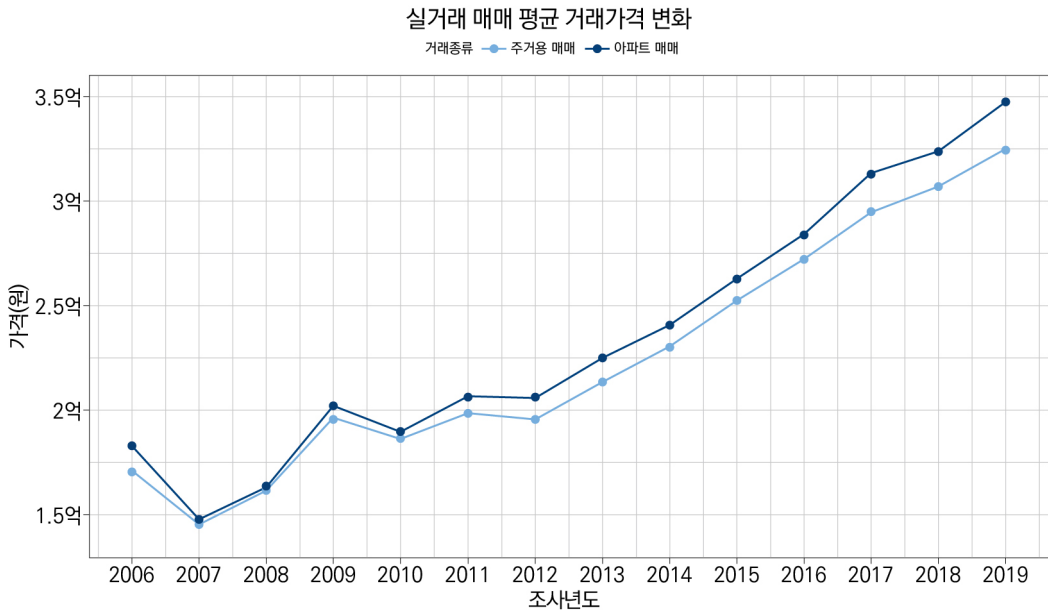


[그림 3-1] 매매 거래 건수 변화, 전국, 2006-2019

7) 2012년부터 임대 거래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임대거래에 대한 자료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매매 거래 중에서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토지, 상업 및 업무용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실거래가 자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한계를 반영한다. 즉 실거래가 자료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주택의 영향은 과소 대표되는 반면,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중간 가격대의 주택은 실제보다 많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실거래 가격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정도는 실제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이후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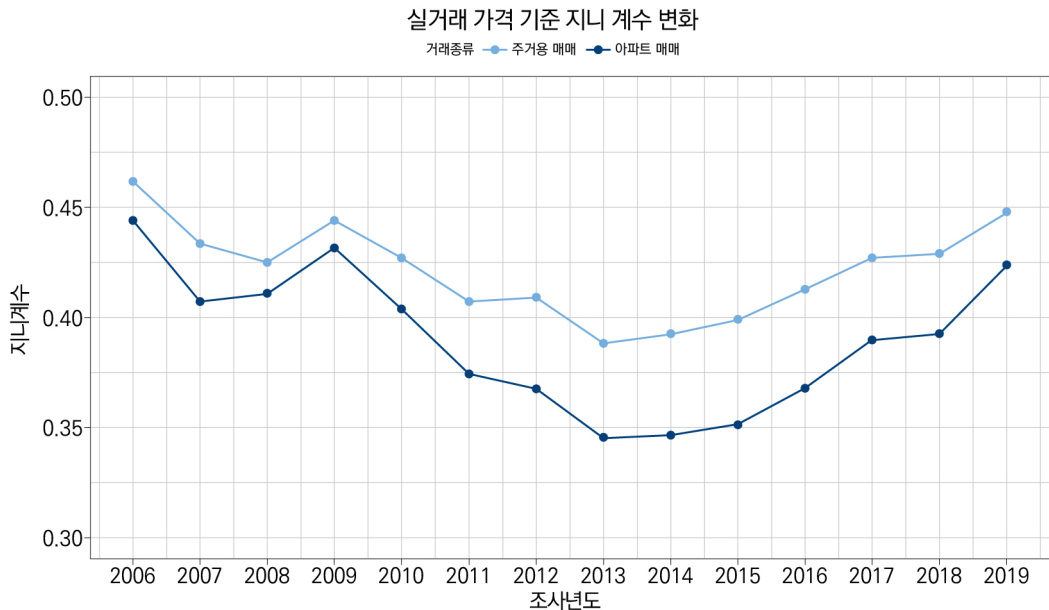
[그림 3-2]는 평균 매매 거래가격 변화를 보여준다. 2007년 평균 매매 거래가격이 2006년에 비해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균 매매 거래가격은 매년 상승해 왔다. 2006년 당시 주거용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억7천만 원, 아파트의 평균 매매거래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각각 3억 3천만 원과 3억 5천만 원으로 각각 2배 가량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실거래 매매 평균 거래가격 변화, 전국, 2006-2019

[그림 3-3]은 매매거래 가격에서 나타나는 지니계수 값을 보여준다. 평균 거래가격이 거의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패턴을 이어간 것과 비교할 때, 매매거래 가격의 불평등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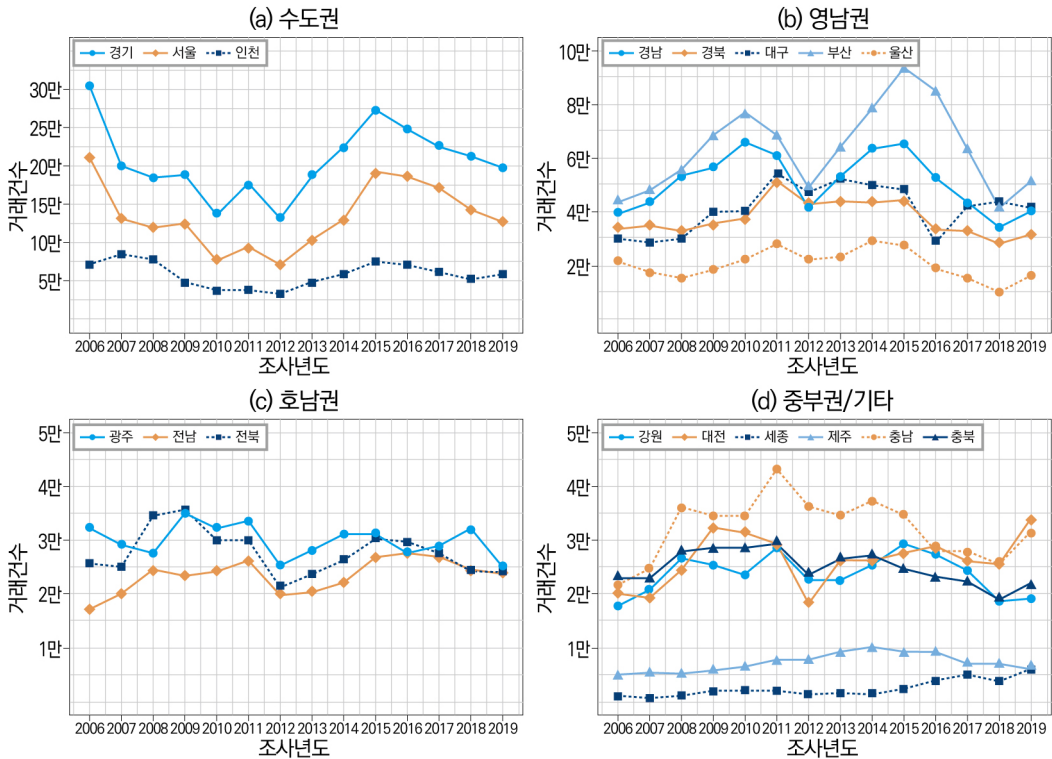
은 평균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조사기간 중 불평등 지니 계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2006년이며, 주거용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할 때, 0.46, 아파트 거래 가격을 대상으로 할 때는 0.45를 기록했다. 이후 2009년을 제외하면, 지니 계수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3년에는 주거용 전체 거래에서 나타나는 지니 계수 값은 0.39,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나타나는 지니 계수 값은 0.35를 기록했다. 이후 지니 계수 값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각각 0.45와 0.42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통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하여 2010대 초반에는 자산불평등이 점차 감소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이성균·신희주·김창환(2020)의 연구 결과와는 대체로 일치한다.<sup>8)</sup>



[그림 3-3] 실거래 가격 기준 지니 계수 변화, 전국, 2006-2019

8) 이성균·신희주·김창환(2020)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순자산에서 나타는 지니계수는 2012년 0.626로 나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0.41)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고가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주택보다는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간 가격대의 주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실거래가 기반의 불평등 지표는 실제 자산불평등을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시도 수준에서 거래 건수, 평균 가격, 지니 계수의 변화를 살펴 본다. 예상할 수 있듯이 각 지표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3-4]는 시도별 거래 건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시도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영남권(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중부권/기타(강원, 대전, 세종, 제주, 충남, 충북)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표시했다. 권역별로 살펴 보면, 수도권의 매매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로 인해 Y축에 같은 범주를 사용할 경우 비수도권에 속한 시도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권역별로 다른 범주를 사용했다.



[그림 3-4] 매매 거래 건수 변화, 시도, 2006-2019

권역별로 살펴 보면, 수도권의 매매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국적으로 매매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경기도이며, 특히 2006년에는 31만 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울이 경기도의 뒤를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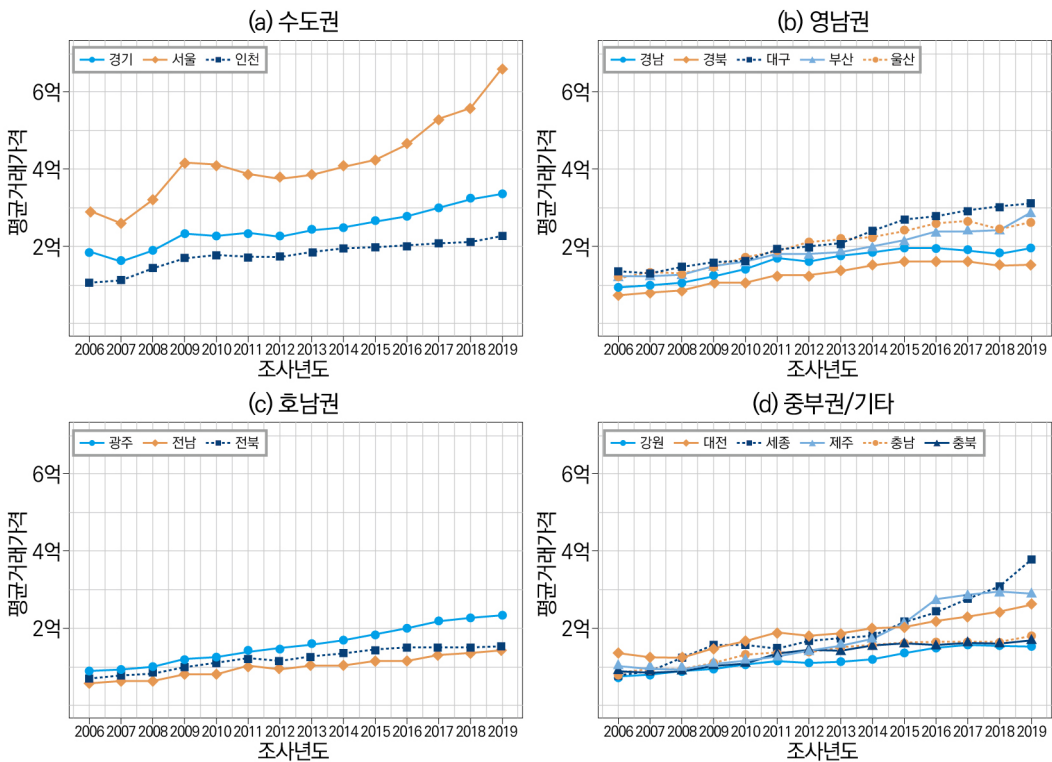
21만 건의 매매 거래를 기록했으며, 인천에서는 약 7만 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2006년 이후 거래량은 대체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최소치인 13만 건과 7만 건까지 줄어 들었다. 이후 2015년까지 매매 건수가 증가하여, 27만 5천여 건과 19만여 건을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사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경기도에서는 25만 건, 서울에서는 12만 5천여 건, 인천에서는 약 5만 5천 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권역의 경우 수도권의 변동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남권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부산이며, 가장 거래 건수가 적은 곳은 울산이다. 부산은 2015년 약 9만 5천 건의 거래가 이뤄져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2018년 울산에서는 약 1만 건의 거래가 이뤄져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2006년 이후 2010년 까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거래가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수도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은 수도권과 유사하다.

호남권에 속한 광주, 전남, 전북의 경우 거래량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와 전북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전남이 가장 적다. 시기에 따른 변화도 크지 않은 편이다. 2012년 거래가 가장 적게 이뤄졌으며, 이후 다소 증가한 후 주춤하고 있다는 점은 수도권과 영남권이 유사하다. 중부권/기타지역은 수도권과 대비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d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이며, 거래량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이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거래량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수도권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변화다.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2013년에도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도별 평균 매매 가격의 변동을 살펴 본다. 2006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살펴 보았을 때,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로 4억2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경기가 2억5천만 원, 대구가 2억천만 원, 울산이 2억 원, 세종이 1억9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약 1억 원이었고, 강원과 전북이 1억2천만 원, 경남이 1억3천만 원을 기록했다.

[그림 3-5]는 연도별 평균 거래 가격의 변화를 보여 준다. 서울의 경우 2006년 2억 9천만 원이었으며, 2009년 약 4억 천만 원까지 상승한 이후, 2015년까지 4억 원대를 유지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6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할 때, 약 2.3배 상승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2006년의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은 1억 8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3억 3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을 기록해서 각각 1.8배와 2.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실거래 평균 매매 거래 가격 변동, 시도별, 2006-2019

영남권의 경우, 2006년 대구 1억 3천만 원, 부산과 울산이 약 1억 2천만 원, 경남이 9천3백만 원, 경북이 7천5백만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전 시기에 걸쳐 대체로 상승했으나, 경남과 경북의 경우 2015년 이후 상승이 정체되어 있다. 2019년에, 대구 3억 천만 원, 부산 2억 9천만 원, 울산 2억 6천만 원을 기록해서, 2006년과 비교할 때, 각각 2.3배, 2.4배, 2.2배 상승했다. 경남은 1억 9천만 원으로 약 2.1배 상승했고, 경북의 경우, 1

억5천만 원을 기록해서 약 2배 상승했다.

호남권에 속한 전남, 전북, 광주는 2006년 평균 거래 가격이 5천7백만 원, 7천만 원, 8천8백만 원을 기록해서, 세 광역시도 모두 1억 원 미만이었다. 2019년에는 전남, 1억 4천만 원, 전북 1억 5천만 원, 광주 2억 3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각각 2.5배, 2.2배, 그리고 2.6배 상승했다. 중부권 및 기타지역의 경우, 2006년 대전이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1억 원, 충북 8천7백만 원, 충남 8천5백만 원, 세종 8천만 원, 강원 7천6백만 원의 순이었다. 이후 세종과 제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해서 2019년 세종의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은 4억 7천만 원, 제주는 2억 9천만원으로 각각 4.7배와 2.9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 2019년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2억 6천만 원, 충남과 충북은 각각 1억 8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으로 2.1배와 1.9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면, 2006년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가장 낮았던 전남과 비교할 때, 서울의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은 약 5배 정도였으나, 2019년의 경우 약 4.7배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평균 매매 거래 가격 변동도 살펴보았는데, 주택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와 비교할 때, 가격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양상은 주택 전체를 살펴 보았을 때와 대체로 유사했다. 서울의 경우, 2006년 평균 3억 5천만 원에서 2019년 8억 2천만 원으로 약 2.3배 상승했으며, 전남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약 2.4배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7천2백만 원(2006년)에서 5억 2천만 원(2019년)으로 5.2배 상승한 세종시였고,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2억 원(2006년)에서 3억 7천만 원(2019년)으로 1.8배 증가한 경기도였다.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면, 2006년 서울과 전남의 평균 매매 거래 가격 비율은 2006년 약 5.9:1에서, 2019년 5.8:1을 기록해서 주택 전체를 고려할 때에 비해 지역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조사 기간 동안 격차가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다음으로 개별 매매 거래 가격을 토대로 계산한 시도별 지니 계수 변화를 살펴본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지니 계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0.424를 기록한 경북이었으며, 가장 낮았던 곳은 0.33을 기록한 광주였다. 서울은 0.382로, 강원(0.381), 전남(0.382), 전북(0.38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6]은 시도별 지니 계수의 연간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서울의 경우 매매 거래 가격 지니 계수는 2006년 0.42를 기록

한 이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0.355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하여, 2019년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인 0.423까지 높아졌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도 2006년의 지니계수가 0.381과 0.404로 조사 시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불평등 정도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3년에 최저치인 0.312를, 인천의 경우에는 2009년에 최저치인 0.31을 기록했다. 서울과 비교할 때, 인천과 경기도 모두 최근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가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2006년과 비교할 때, 2019년의 불평등 계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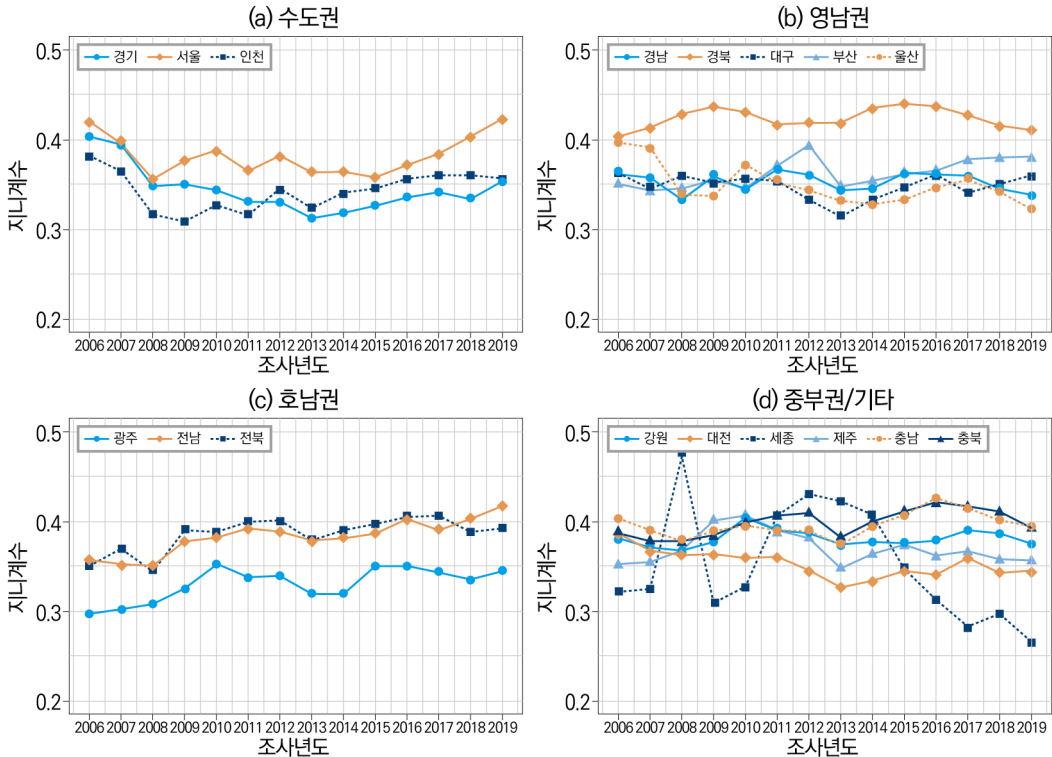
영남권의 경우도, 2006년과 비교할 때, 불평등 지수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 힘들다. 경북의 경우 2006년 0.403을 기록했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0.44를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0.411을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지니계수는 2006년 0.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대체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가장 낮은 0.323을 기록했다. 부산의 경우 2006년 영남권에서 가장 낮은 0.351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하여, 2019년에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0.381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 2006년에는 0.365를 기록했으며, 2013년 최저치인 0.314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2006년과 유사한 0.361을 기록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과 전북이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니 계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호남권에 속한 시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니 계수 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6년 전남이 0.356, 전북이 0.351을 기록했으며, 이후 지니 계수는 대체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전남이 0.417, 전북이 0.392까지 증가했다. 광주 역시 2006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0.296을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0.345까지 증가했다.

중부권에서도, 충남과 충북이 대전에 비해 높은 지니 계수 값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충남의 지니 계수는 0.402, 충북의 지니 계수는 0.387이었으나, 대전의 경우, 충북보다 다소 낮은 0.385였다. 그러나 이후 충남과 충북의 지니 계수가 대체로 0.4 전후를 유지한 데 비해, 대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0.326까지 떨어졌다. 이후 대전의 지니 계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을 기준을 보면, 충남과 충북이 각각 0.394와 0.391을 기록한 데 반해, 대전의 지니 계수는 0.344로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지니 계수가 조사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변



화했는데, 이는 세종시의 매매 거래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지니 계수는 2006년 0.322를 기록했고, 2008년 0.472로 급등하는 등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0.266을 기록했다.



[그림 3-6] 실거래 기준 지니 계수 변화, 시도, 2006-2019



# 제4장

## 부동산 가격상승, 자가 소유, 행복 격차

---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자료 및 변수의 측정

제3절 분석결과

제4절 추가 분석 1 - 부동산 주기의 효과

제5절 추가 분석 2 - 가구주와 가구원

제6절 소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가구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Lu, Guo and Gan(2020)에 따르면, 가구의 전체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74%, 호주 58%이며,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60%에서 80%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원이며, 이는 금융자산은 23.6%, 실물자산 76.4%로 구성되어 있다. 실물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거주주택이 42.5%,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이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계의 경제 상황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특히 자가소유 여부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Guven and Sorensen(2012), Rossi and Weber(1996) 등이 미국에서 자가 소유 여부와 주관적 만족도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Zumbro(2014)가 독일, Brounen et al.(2012)이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하며 주택정책에서 큰 변화를 겪었던 중국에서 주택과 행복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Cheng et al, 2020; Hu and Ye 2020; Zhang et al. 2020).

한국의 경우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자가 소유와 삶의 만족도에 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정재훈(2012)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 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자가 거주자의 생활 만족도가 임차 거주자의 생활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주거유형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상이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에서는 상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 거주자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sup>9)</sup> 전병주·최은영(2015)은 노인의 주거 형태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분석에서,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자가 거주자가 전월세 거주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보고했다. 또한 분석대상을 45세 이상의 중년층으로 확대한 이현기(2019)의 연구에서도, 자가 거주자는 임차 거주자에 비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

9) 이 밖에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예: 강은택·정효미 2015). 주거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이지만, 본 연구가 보다 일반적인 주관적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확대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아질 경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가 거주에 따른 행복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난 3월 2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내놓은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이유로는 응답자의 40%가 집값 상승 혹은 집값이 비싸다는 점을 꼽았으며, 정책효과 없음(7%), 풍선효과(6%), 서민 피해(6%)가 뒤를 이었다.<sup>10)</sup>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에 대한 평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월 23일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5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들 중 34%는 부정평가의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sup>11)</sup>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시장 가격이 갖는 사회경제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실제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자가 소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자가 소유의 혜택을 물질적인 혜택과 비물질적인 혜택으로 나눈다. 물질적인 혜택은 집이 자산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집이 자산으로서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상대적 우위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행복도는 감소시켜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자가 집을 보유한 전국의 가구 비율이 60%에 달하고, 50%가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집값 상승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집값의 상승은 자가 소유 혹은 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행복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 변동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10) “2·4 대책에도 ...” 부동산정책 잘못한다, 74%로 최고치, 『연합뉴스』, 2021년 3월 5일. (<https://bit.ly/3u9R1Pj>)

11)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최저치 경신...국민의힘 최고치, 민주당 최저치 희비 엇갈려,” 『경향신문』, 2021년 3월 26일. (<https://bit.ly/31CXtBW>).

## 제 1절 이론적 배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자가 소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투자 혜택, 거주를 통해 있는 혜택, 추가적인 사회적 혜택,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가 소유는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다(Goodman and Mayer 2018; La Grange and Pretorius 2000). 주택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상승한다. 자가 보유자는 미래에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현재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Chen, Hardin and Hu, 2018). 자가 소유자는 매월 일정금액의 모기지 원금을 상환하는데, 실질가격 측면에서 보면,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하는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리노베이션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가격을 높일 수 있으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Herbert and Belsky 2008).

한국에서도 부동산 소유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산을 증식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sup>12)</sup> 부자들은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주요 원천으로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과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투자를 꼽았으며,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전체 부자의 45%가 부동산투자가 현재 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답했으며, 금융투자를 꼽은 응답자가 28%, 상속/증여라고 답한 응답자가 24%로 나타났다. 또한 부자들은 부를 늘릴 수 있는 동력으로 부채의 활용을 꼽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총자산 50억 미만 부자의 경우, 임대보증

12)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2020년 현재 부동산자산 57%와, 금융자산 39%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자산이 30억 미만인 경우, 부동산 비중의 중위값은 42.2%이지만, 총자산이 30~50억 미만은 경우 63.6%, 총자산 50억원이상인 경우 61.4%에 달한다.



금 평균은 3.4억원, 금융부채는 평균 2.6억원이었으며, 50억 이상 부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금융부채의 두 배에 달했다.

한편, 자가 소유는 미래에 발생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입을 손해를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도 있다. Riley, Ru, and Feng(2013)은 미국에서 임차거주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를 활용하여 집을 구매한 저소득층이 지불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자가 보유의 비용은 모기지 상환비용, 관리비, 세금, 보험비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지불하는 비용으로는 자가 거주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유사한 주택에 부과되는 이용료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 집값, 집을 구입한 시점, 그리고 보유 기간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가 보유자는 임차인에 비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 소유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도 기여한다. 자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 뿐 아니라, 자신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데도 관심을 갖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지역의 특성, 특히 지역 학교의 수준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Haurin and Brasington 1996; Downes and Zabel 2002; Clapp, Nanda and Ross 2008). 자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자가 거주자들은 임차 거주자보다 지역의 사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Fischel(2001)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가 보유자들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 공공 서비스, 세금 등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 선거나 연방 선거와 비교할 때, 지역 선거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관심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진다. 자가 거주자들은 지역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집값을 지키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지역단체에 가입하게 된다(McCabe 2013).

셋째, 자가 거주자는 임차인에 비해 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집은 물리적인 거주 공간인 동시에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가족들과의 공동 생활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공간이다. 따라서 주거 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Gorman- Murray, 2014). 주택의 물리적 상태는 주거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물이 새거나, 채광이 좋지 않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공간이 충분치 않은 곳에 살면서, 주거환경에 만족하기란 쉽지 않다(Coates et al., 2013;



James, 2007; Rohe & Stegman, 1994). 같은 맥락에서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기여한다(Clark and Kearns 2012; Saegert, Klitzman, Freudenberg, Cooperman-Mroczek, and Nassar 2003). 자가 소유자는 임차인에 비해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한다(Galster, 1987).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자가 거주자는 임차인에 비해 이사 빈도가 낮다(Dietz & Haurin, 2003; DiPasquale & Glaeser, 1998; Herbert & Belsky, 2008; Newman & Holupka, 2013; Rohe & Stewart, 1996). 한 곳에 오래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집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Kleinhans and Elsinga(2010)에 따르면, 조사 기간동안 자가 소유자는 임차인에 비해 집을 고치고 수리하는데,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임차인과 달리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집을 고칠 수 있다는 점도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Dietz & Haurin, 2003; Gruis, Elsinga, Wolters, & Priemus, 2005). 또한, 자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높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임차인에 비해 높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Elsinga & Hoekstra, 2005a, Herbert and Belsky 2008). 그러나 주거 적응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자가 거주자가 자신의 상황에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자가 거주자와 임차인의 행복 격차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Zheng, Yuan, Zhang 2020).

넷째, 자가 소유는 사회적 규범이자, 지위재로서 상대적 효용을 제공한다. Foye et al.(2018)에 따르면,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집이 주는 따뜻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비자가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더 험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된다. 또한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시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가 소유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 소유는 사회적 규범에 충실한 것으로 여기지는 반면, 비자가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규범으로부터의 이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효용의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재화할수록 임차인들은 정상적이지 못함으로 인

해 겪게 되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자가 소유자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이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부유함을 의미한다. 일찍이 Veblen(1899)과 Duesenberry(1949)은 인간이 누리는 효용은 절대적인 소비 뿐 아니라 상대적 소비에도 영향을 받게됨을 지적한 바 있다. 상대적인 부유함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비해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임차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길 때, 자가 소유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다.

## 제2절 자료 및 변수의 측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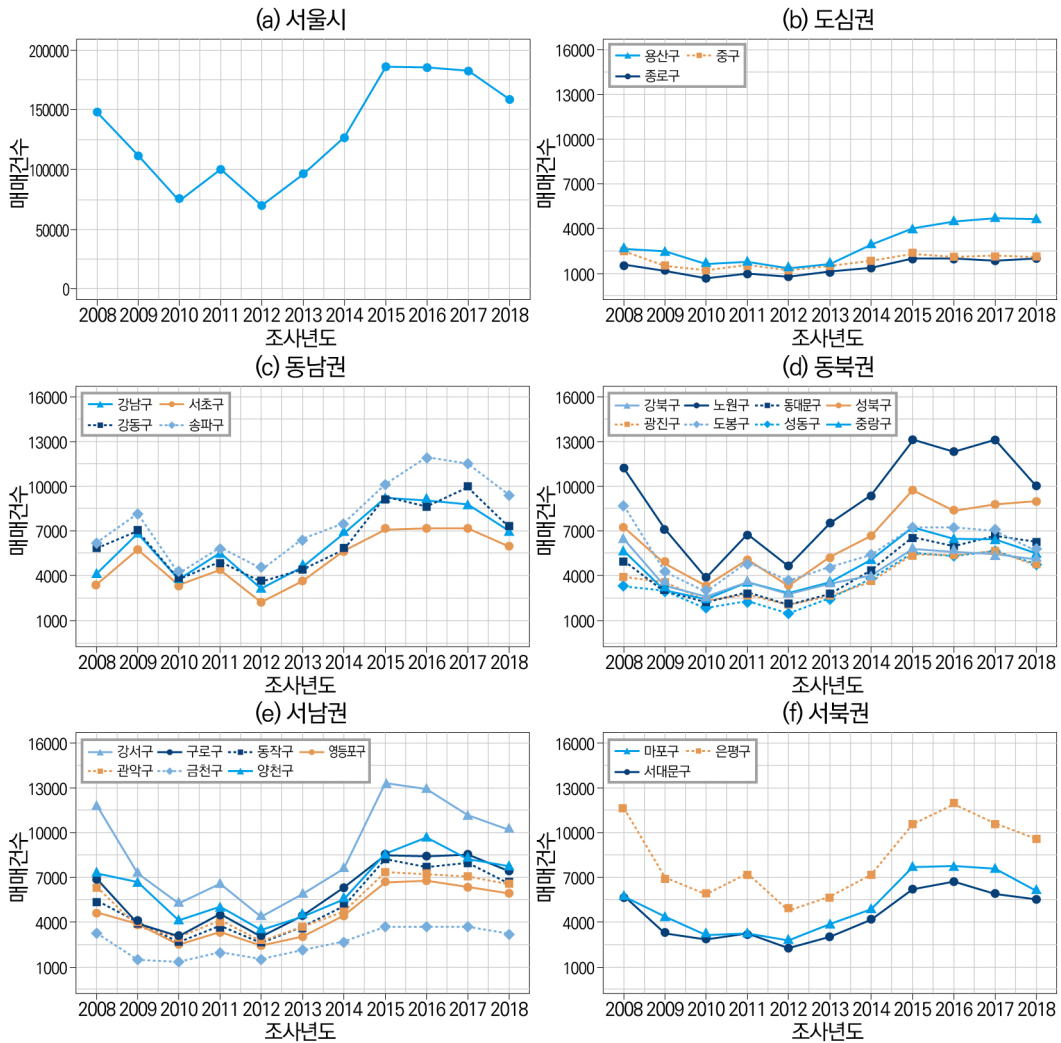
### 1 자료 및 분석대상

경험적 분석을 위해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이하, 서울서베이) 자료를 사용한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 이후 매년,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서베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되며, 가구 방문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거주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구성원이다. 표본은 주민등록 DB와 과세대장 DB를 토대로 층화집락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추출한다. 본 연구에는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11년 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자료를 활용했다. 표본에서 포함된 가구 수는 20,000가구로 매년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가구원 수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2017년 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총 가구원 수는 42,687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가구의 경우  $\pm 0.69\%$ , 가구원의 경우  $\pm 0.47\%$ 이다.

### 2 변수측정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독립변수는 자치구별 부동산가격 변화율과 자가 거주 여부이다. 각 자치구별로 부동산 가격의 연간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추출한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했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용으로 분류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의 매매 기록을 토대로 각 자치구별 연 평균 거래가격과 그 연간 변화율을 계산했다. 서울서베이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서베이가 실시된 전달부터 그 이전 1년을 조사연도로 간주했다.<sup>13)</sup>

서울시 부동산 가격 변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각 조사연도별 매매건수, 연 평균 거래가격, 연 평균 거래가격 변화율 등 세 가지 지표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 했는가를 살펴본다.



[그림 4-1] 서울시 권역별 주거용 부동산 매매건수 변화

13) 2018년 서울세베이는 2018년 9월 실시되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실거래가 기록을 활용하여 2018년 연 평균거래 가격을 구한 후,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연 평균 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그 변화율을 산출했다. 세베이가 다른 시기에 실시된 경우에는 그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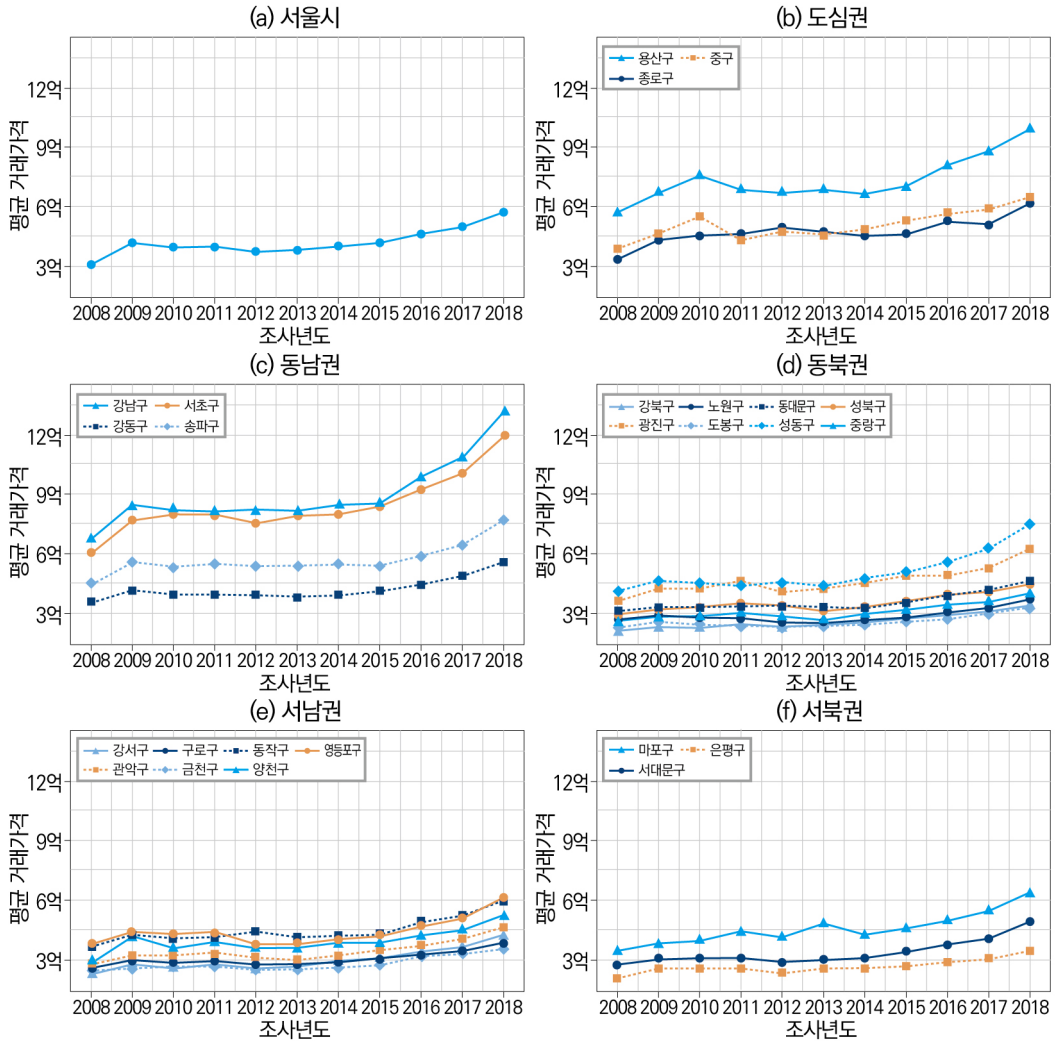
[그림 4-1]은 전체 주거용 부동산 매매건수를 나타낸다. 그림a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림b~그림f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매매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림 a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전체 주거용 매매거래 건수는 약 15만 건 정도였으나, 이후 2009년, 약 11만 건, 2010년, 약 7만5천 건 정도로 감소한 후, 2012년에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반등하여, 2015년 이후에는 15만 건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에 속한 중구에서, 매매거래 건수가 가장 적었으며, 동북권의 노원구, 서남권의 강서구, 서북권의 은평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a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는 패턴이 모든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은 서울시 주택의 평균 거래가격 변화를 살펴 보고 있다. 그림a에서, 서울시 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은 2008년의 경우 약 3억원 정도이며, 2009년 다소 상승한 이후, 정체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 2018년에는 약 6억원에 달한다.

평균 거래 가격은 권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과 동남권의 평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2008년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남구로 약 6억8천만원이었으며, 서초구가, 약 6억1천만원, 용산구가 약 5억7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낮았던 3개구는 도봉구(약 2억3천만원), 강북구(약 2억1천만원), 은평구(약 2억원)였다.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낮았던 은평구에 비해 강남구가 약 3.4배 정도 높았다. 구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모든 자치구에서 2010년대 중반 즈음까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에도, 강남구(약 13억 2천만원), 서초구(약 12억원), 용산구(약 9억 9천만원)의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은평구(약 3억 5천만원), 강북구(약 3억 4천만원), 도봉구(약 3억 2천만원)의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봉구에 비해 강남구의 평균 거래가격이 약 4.1배 높게 나타나서, 2008년과 비교할 때, 자치구간의 격차가 다소 증가했다. 자치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서초구로 97% 상승했으며, 강남구(94%)와 양천구(89%)가 뒤를 이었다. 상승폭이 가장 작았던 곳

은 노원구로 41%였으며, 도봉구(44%)와 금천구(46%)에서도 상승폭이 작았다. 노원구의 경우,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도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서울시 권역별 주거용 평균 거래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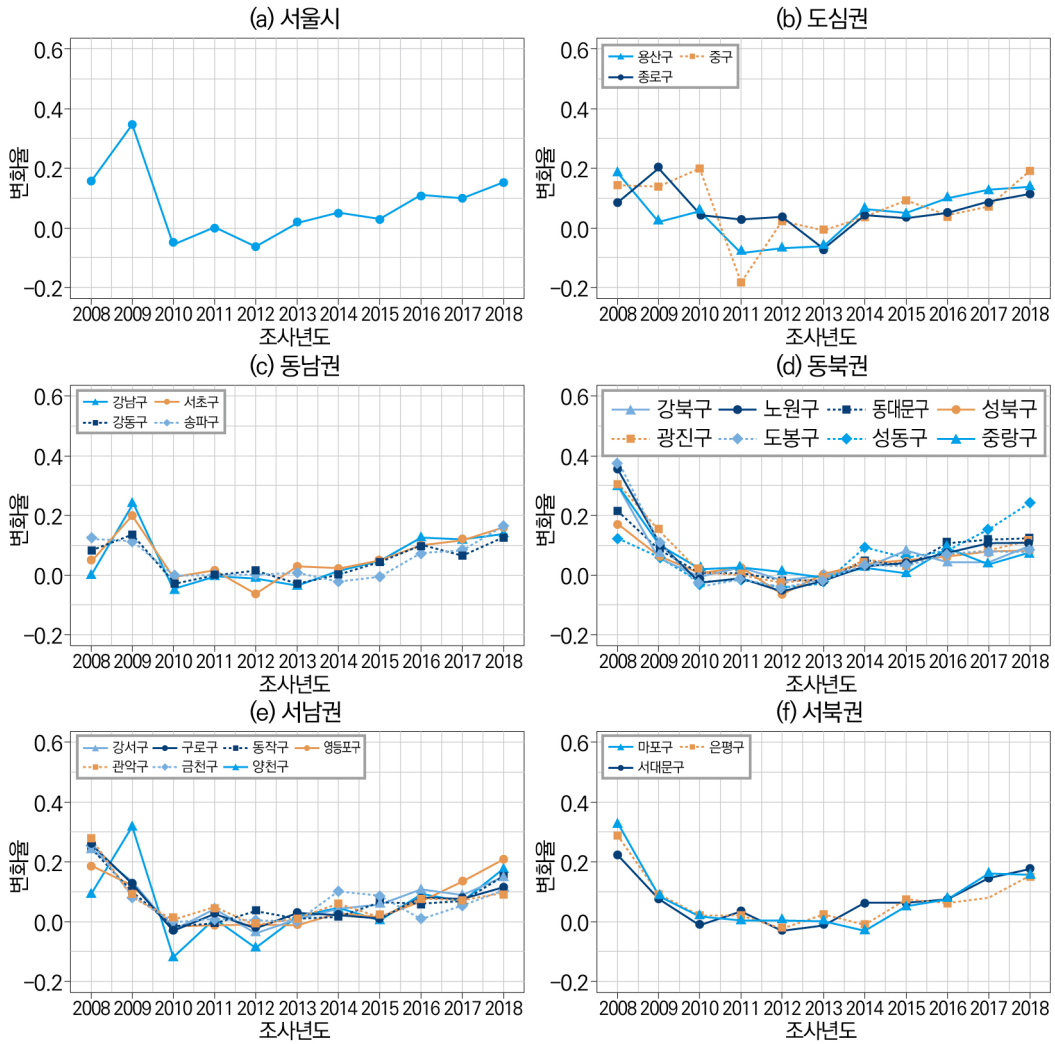
[그림 4-2]는 평균 거래가격의 연간 변화율을 나타낸다.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전년도 평균 거래가격에 비해 평균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음의 값을 가질 경우, 평균 거래가격이 하강함을 의미한다. 그림a에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상승했지만, 2010년부터 2012년에 하강한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대체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상승폭이 더 커진 곳은 강남구(0.4%에서 24%), 서초구(5%에서 20%), 강동구(8%에서 13%), 양천구(9%에서 32%), 종로구(9%에서 20%) 등 5개구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구에서 변화율이 0에 가까웠으며, 이후 상승폭이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다. 2018년 변화율이 가장 큰 곳은 24% 상승한 성동구였으며, 영등포구(21%)와 중구(19%)가 뒤를 이었다. 반면 변화율이 가장 작은 곳은, 중랑구(8%), 도봉구(8%), 성북구(9%)였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2008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안정기)와 활성화기(상승기)를 겪었음을 시사한다. 추후 분석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인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려 한다.

자가소유 여부는 주거 점유형태에 관한 문항을 사용했다. 자가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 및 기타 등)에는 0으로 간주했다. [표 4-1]의 기술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약 57%가 자가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사용한다. 응답자는 1) 자신의 건강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4) 가정생활,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등 5개 영역에 대해 행복점수를 선택했고, 5개 영역의 평균점수를 삶의 만족도 지표로 활용했다.<sup>14)</sup>

14) 응답자의 행복점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행복점수가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도가 7.06,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행복도가 6.98, 사회생활에 대한 행복도가 6.89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6.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 = 0.84로 나타나 응답의 내적일관성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후 각 요인의 회전 각도를 90도를 유지한



[그림 4-3] 서울시 권역별 부동산 평균 거래가격 변화를 변화

주요 독립변수 이외에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했다. 가구소득은 “귀택의 지난 1년 동안 세금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

상태에서 회전시키는 varimax 회전을 사용했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체 분산 중 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응답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건강 0.73, 재정 0.7, 친지, 친구와의 관계 0.84, 가정생활 0.82, 사회생활 0.84로 나타났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이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5개 응답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했다.



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사용했다. 조사연도에 따라 상이한 급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자들 크게 네 집단(25% 이하, 25%-50%, 50%-75%, 75% 이상)으로 구분했다. 고용상태는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 주부, 무직 등으로 답한 응답자를 0으로 하고, 구체적인 직업을 선택한 응답자를 1로 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했다. 이 밖에 각 응답자의 인구적 특성을 나타내는 성별(0:여성, 1:남성), 기혼상태(0:미혼, 사별 등, 1:기혼), 교육수준(0:고등학교 졸업 이하, 1:대학재학 이상), 연령집단(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변수를 포함시켰다. 자치구 수준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적, 인구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재정자립도와 주민수(로그)를, 그리고 자치구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매매건수(로그)를 포함시켰다.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보했다.

[표 4-1] 변수 요약 및 기술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수
연 평균 거래가격	43,195.15	18,796.00	20,366.84	132,192.90	275
가격 변화율	0.07	0.095	-0.19	0.51	275
거래건수	403,597.80	129,670.90	125,249	685,279	275
거래건수(로그)	12.845	0.383	11.738	13.438	275
재정자립도	5,233.14	2,721.09	721	13,339	275
주민 수	8.413	0.579	6.581	9.498	275
주민 수(로그)	42.771	16.466	17.5	86	275
불평등지수	-0.003	0.079	-0.26	0.424	275
행복도	6.829	1.159	0	10	508,149
자가소유	0.573	0.495	0	1	508,149
가계소득	2.483	1.11	1	4	506,773
남성	0.483	0.5	0	1	508,149
기혼	0.67	0.47	0	1	508,149
교육수준	0.58	0.494	0	1	507,641
연령집단	3.836	1.514	1	6	508,149
취업	0.601	0.49	0	1	508,149
주관적 계층의식	3	0.805	1	6	507,9202

주: 개인 수준 변수는 서울서베이(2008년~2018년)에서 자치구 수준 변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와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활용했음.

## 제3절 분석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주요 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가 서베이 응답자가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내재(nested)되어 있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특성인 집값이 응답자의 개인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무작위효과(random effects)를 모두 추정하는 선형복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을 사용했다. 특히 논문의 초점이 개인수준의 특성인 자가 소유 여부의 효과가 자치구 수준의 부동산 평균 거래가격 변화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교차수준상호작용(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을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했다(Gelman and Hill, 2007). 개인 수준 변수의 특성이 동일한 자치구 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답자 수준의 통제 변수는 자치구별 평균에 따라 중심화(group-mean centering) 했고, 자치구 수준 통제 변수의 경우 전체 평균에 따라 중심화 했다.<sup>15)</sup> 또한 서베이가 복수의 조사연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모형에는 조사시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했다.

[표 4-2]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행복 격차에 미치는 영향

	(1)	(2)	(3)	(4)
자가소유	0.064***	0.035**	0.088***	0.074***
	(0.003)	(0.015)	(0.003)	(0.011)
X 가격 변화율		0.386***		0.208***
		(0.034)		(0.032)
가격 변화율	-0.194***	-0.429***	-0.127***	-0.253***
	(0.028)	(0.035)	(0.029)	(0.035)
거래건수(로그)			0.114***	0.114***
			(0.014)	(0.014)

15) Hofmann and Gavin(1998)에 따르면, 응답자 수준 변수를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할 경우 자치구 간의 상호작용과 자치구와 응답자 수준의 상호작용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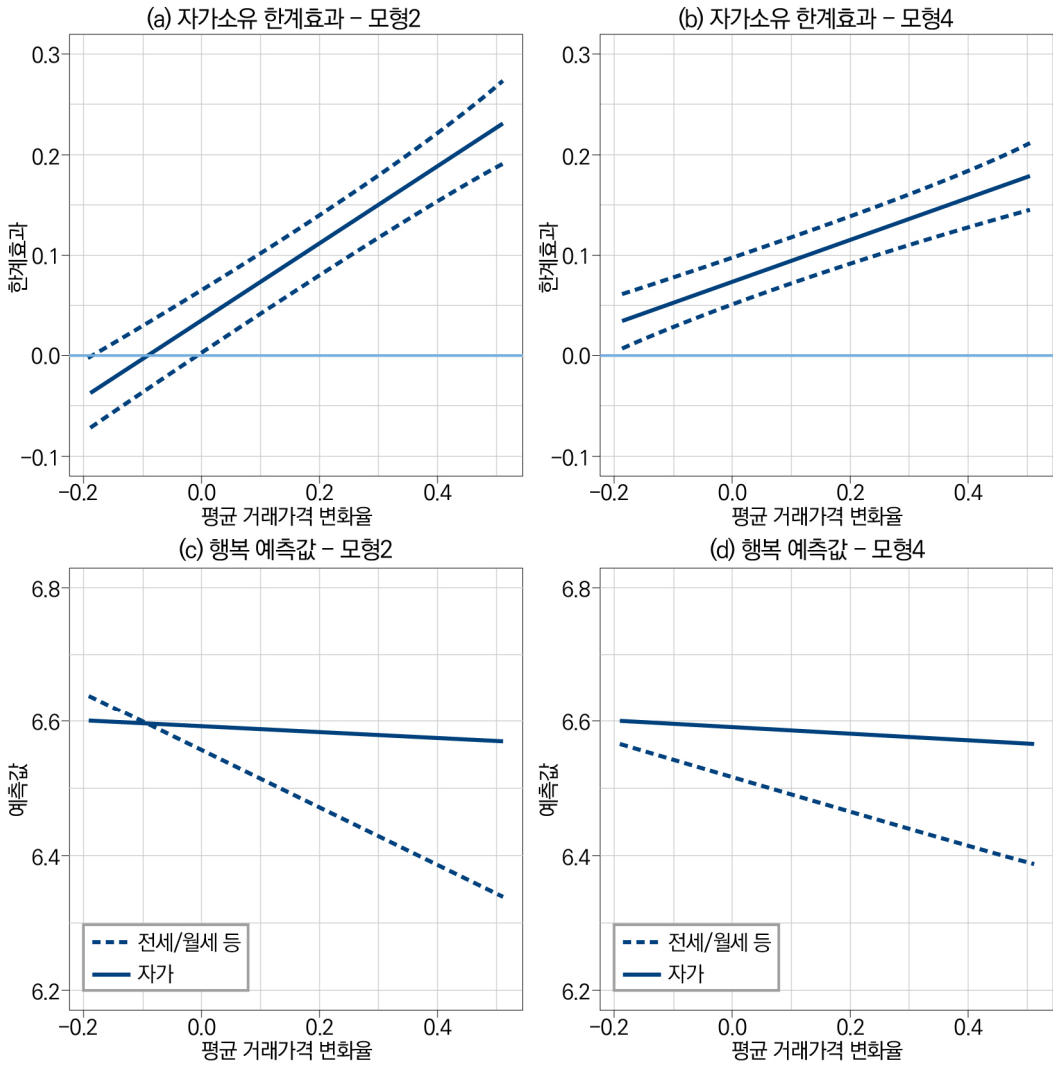
	(1)	(2)	(3)	(4)
재정자립도			0.010*** (0.001)	0.010*** (0.001)
주민 수(로그)			0.057 (0.049)	0.073 (0.045)
불평등 변화율			-0.140*** (0.028)	-0.135*** (0.028)
가계소득			0.115*** (0.001)	0.115*** (0.001)
남성			0.014*** (0.003)	0.014*** (0.003)
기혼			0.260*** (0.004)	0.258*** (0.004)
교육수준			0.128*** (0.004)	0.127*** (0.004)
연령집단			-0.190*** (0.001)	-0.190*** (0.001)
취업			0.123*** (0.003)	0.123*** (0.003)
주관적계층의식			0.228*** (0.002)	0.228*** (0.002)
상수항	6.539*** (0.027)	6.556*** (0.031)	6.471*** (0.025)	6.480*** (0.028)
Observations	508,149	508,149	506,064	506,064
Log Likelihood	-788,431.10	-788,154.60	-749,967.30	-749,811.50

주: 종속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임.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무작위효과(random effects)를 모두 추정하는 선형복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을 사용했으며, 자치구 무작위효과와 연도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p<0.01, \*\* p<0.05, \* p<0.1

모형1과 모형2는 독립변수와 연도별 더비변수만 포함하고 있으며, 모형3과 모형4는 자치구 및 개인 수준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모형1에서 자가 소유 변수는 양의 계수 ( $b = 0.064$ ,  $se = 0.003$ ,  $p < 0.01$ )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가 소유 응답자들이 전/월세를 포함한 비자가 소유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삶의 행복도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변수는 음의 계수( $b = -0.194$ ,  $se = 0.027$ ,  $p < 0.01$ )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행복도가 감소한다. 개인 수준 및 자치구 수준 통제 변수를 포함한 모형3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값 상승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집을 소유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형2와 모형4는 두 주요 독립변수의 효과가 다른 변수의 값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다. 모형2에서 자가 소유 변수의 계수는 0.035이며, 자가 소유와 부동산 가격 변화율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부동산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 자가 소유자가 비자가 소유자에 대해 0.035만큼 행복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자가 소유와 부동산 가격 변화율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0.386임으로, 이는 변화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행복 격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4의 결과도 추정 계수값에는 차이가 있지만, 계수의 부호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모형2의 유사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표에 나타난 점추정치만으로는 변화율의 증감에 따른 행복 격차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4-4]은 부동산 가격 변화율에 따라 발생하는 자가 소유의 한계 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4-4]의 a와 b는 자치구의 평균 거래가격(X축)의 증가율에 따라 자가 소유 여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Y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림의 실선은 자가 소유 변수의 한계효과를 나타내고, 점선은 95%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신뢰수준은, 모형2와 모형4의 추정계수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1000개의 계수조합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X축의 각 값에 상응하는 1000개의 한계효과 계수를 계산한 후, 상위 2.5%와 하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속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변화를 표시했다. 위쪽 점선과 아래쪽 점선 사이의 구간에 Y값이 0인 지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X(변화율)값에 대한 한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4]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

그림a에 따르면, 평균 거래가격 변화율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즉 자치구의 평균 거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할 경우, 자가 소유 여부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평균 거래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거주자 간의 행복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b는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거주자의 다른 특징들을 통제할 경우, 부동산 평균거래가격이 하락할 때도,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간의 행복격

차가 나타나지만, 기울기의 차이를 감안할 때, 가격상승에 따른 행복격차의 정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계효과에 대한 분석은 거래가격의 상승 혹은 하강에 따라 행복격차가 커지는 지 혹은 작아지는 지의 여부만을 알려줄 뿐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c와 그림d는 부동산 거래가격의 변화율에 따라 종속 변수인 행복도의 예측값(predicted values)이 자가 소유자와 전월세거주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누어 살펴 본다. 그림c에 따르면, 자가 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증감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거래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는 그림d의 경우도, 결과는 대체로 유사하다. 즉 한계효과 분석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행복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자가 소유자가 더 행복해져서가 아니라, 비자가소유자가 더 불행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 소유자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전월세거주자의 경우, 자가 보유 마련 가능성 악화를 포함하여, 경제적 상황에 대해 비관하게 됨에 따라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가 커진다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 제4절

### 추가 분석 1 - 부동산 주기의 효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2008년에서 2018년의 기간 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와 상승기를 거쳤다. 이를 감안하여, 표에서는 2008년에서 2012년을 부동산안정기, 2013년에서 2018년을 상승기로 구분한 후 [표 4-2]의 모형4를 다시 추정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하락할 경우, 살고 있는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가 거주자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과열과 투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이는 응답자의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클수록 행복도가 더욱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표 4-3]에서 모형1과 모형2는 2008년에서 2012년, 모형3과 모형4는 2013년에서 2018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에서 자가 소유의 계수는( $b=0.111$ ,  $se=0.005$ ,  $p<0.01$ )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가격변화율 또한 양의 값( $b=0.148$ ,  $se=0.038$ ,  $p<0.01$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삶의 행복도가 높다. 이는 [표 4-2]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모형3에서, 자가 소유는 여전히 양의 값( $b=0.061$ ,  $se=0.004$ ,  $p<0.01$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가 거주와 비자가 거주자의 행복격차는 0.061로, 부동산 안정기의 격차인 0.111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가격변화율은 음의 계수값( $b=-0.641$ ,  $se=0.057$ ,  $p<0.01$ )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4-2]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행복감소는 부동산 상승기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모형2에서, 자가 소유와 가격변화율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값( $b=0.262$ ,  $se=0.038$ ,  $p<0.01$ )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높은 곳일수록, 자가 소유자와 비자가 거주자 간의 행복격차가 더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형4의 경우, 상호작용항은 양의 값을 갖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여부와 무관하게, 자가 소유로 인한 행복격차가 유지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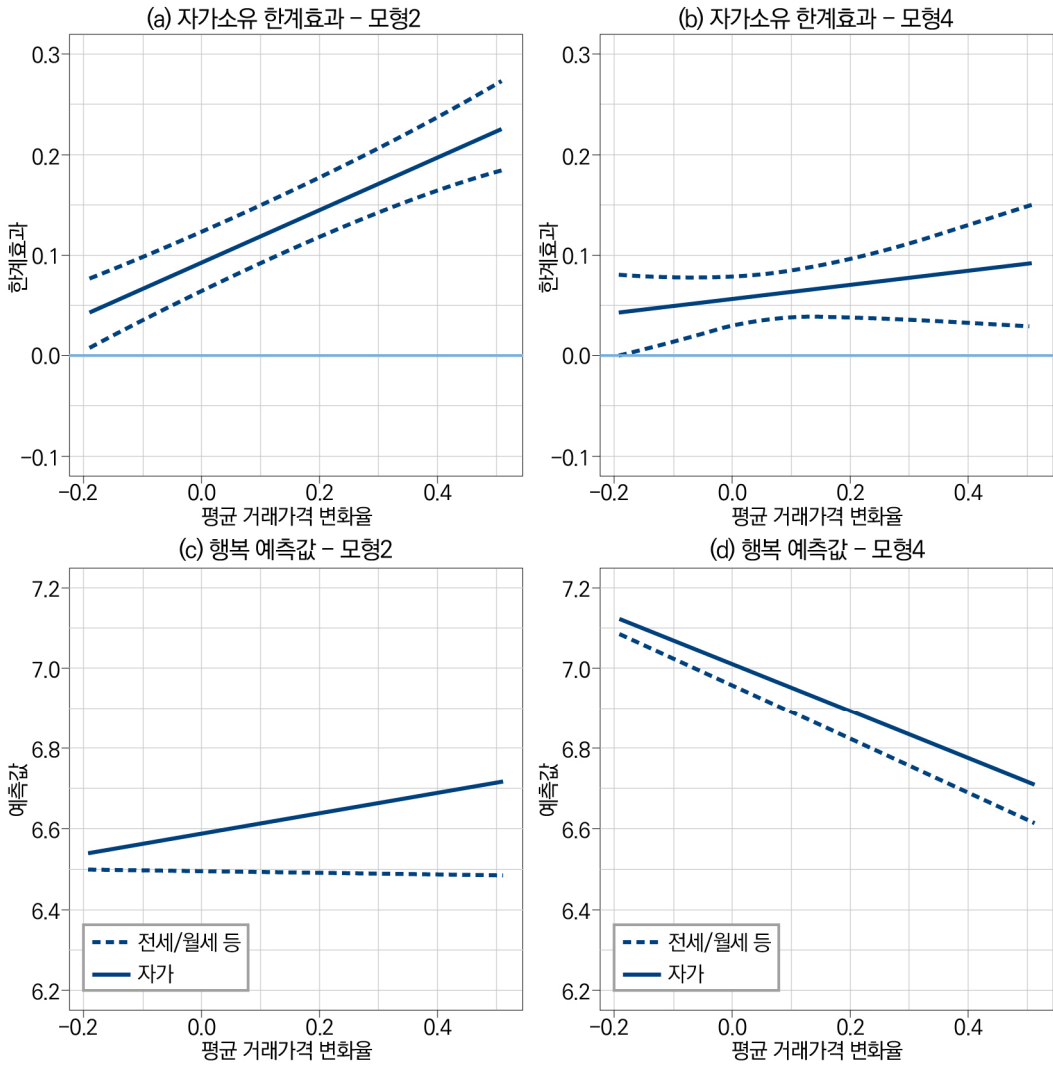
[표 4-3] 부동산 안정기와 부동산 상승기의 비교 분석

	부동산 안정기		부동산 상승기	
	(1)	(2)	(3)	(4)
자가소유	0.111*** (0.005)	0.095*** (0.015)	0.061*** (0.004)	0.055*** (0.013)
X 가격 변화율		0.262*** (0.038)		0.069 (0.066)
가격 변화율	0.148*** (0.039)	-0.014 (0.045)	-0.641*** (0.057)	-0.667*** (0.069)
거래건수(로그)	-0.068*** (0.021)	-0.067*** (0.021)	0.434*** (0.029)	0.427*** (0.029)
재정자립도	0.177** (0.076)	0.194*** (0.071)	-0.138** (0.063)	-0.139** (0.060)
주민 수(로그)	0.128*** (0.002)	0.128*** (0.002)	0.098*** (0.002)	0.098*** (0.002)
불평등 변화율	-0.003 (0.005)	-0.003 (0.005)	0.025*** (0.004)	0.025*** (0.004)
가계소득	0.298*** (0.006)	0.295*** (0.006)	0.228*** (0.005)	0.228*** (0.005)
남성	0.139*** (0.005)	0.138*** (0.005)	0.110*** (0.005)	0.110*** (0.005)
기혼	-0.207*** (0.002)	-0.207*** (0.002)	-0.177*** (0.002)	-0.177*** (0.002)
교육수준	0.144*** (0.005)	0.144*** (0.005)	0.111*** (0.005)	0.111*** (0.005)
연령집단	0.008*** (0.001)	0.008*** (0.001)	0.004*** (0.001)	0.004*** (0.001)
취업	-0.456*** (0.038)	-0.446*** (0.038)	0.182*** (0.048)	0.181*** (0.048)
상수항	0.278*** (0.003)	0.277*** (0.003)	0.179*** (0.003)	0.179*** (0.003)
Constant	6.417*** (0.031)	6.427*** (0.034)	6.943*** (0.025)	6.943*** (0.027)
Observations	235,060	235,060	271,004	271,004
Log Likelihood	-355,564.40	-355,443.00	-392,380.60	-392,311.802

주: 종속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임. 모형1과 모형2는 부동산 안정기인 2008년~2012년을, 모형3과 모형4는 부동산 상승기인 2013~2018년을 대상으로 함.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무작위효과(random effects)를 모두 추정하는 선형복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을 사용했으며, 자치구 무작위효과와 연도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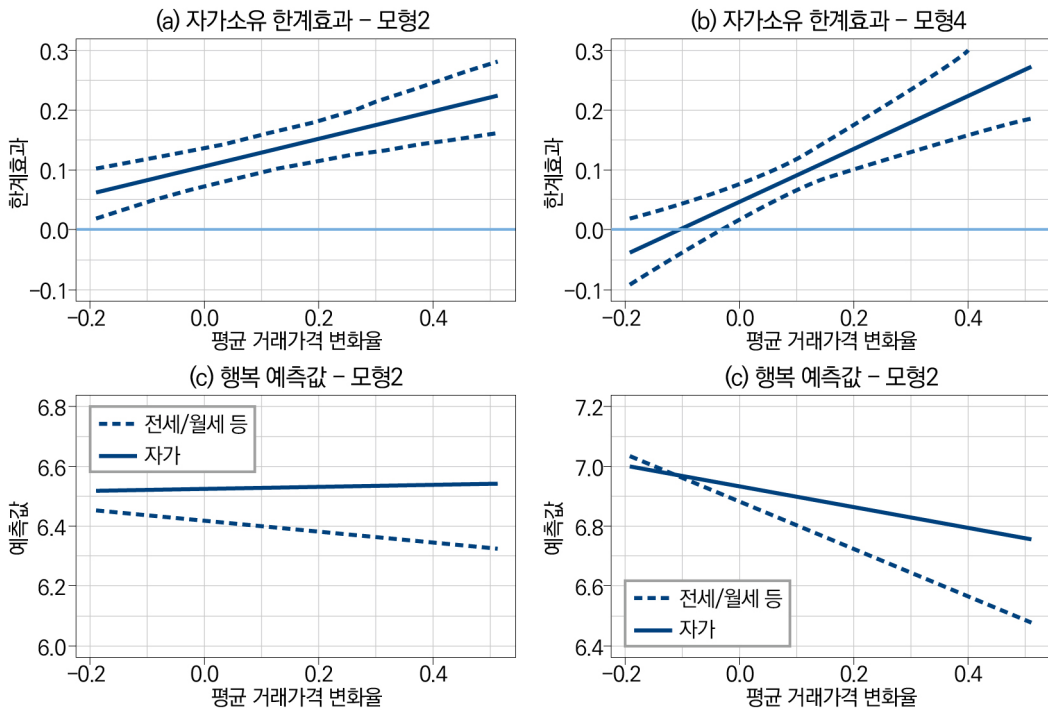
[그림 4-5]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 - 안정기와 상승기 비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행복격차의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림 4-5]을 그렸다. 그림a와 그림b는 한계효과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림c와 그림d는 행복 예측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부동산 안정기에는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클수록, 자가 소유자와 비자가소유자간의 행복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c에 나타난 예측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자의 행복은 높아지는 반면, 비자가소유자의 행복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행복격차의 확대는 자가 소유자의 행복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자가 소유자가 비자가소유자에 비해 행복하기는 하지만,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d에 나타난 예측값의 변화를 살펴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자가 소유자와 비자가소유자 모두 행복도가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자가 소유자의 행복도가 비자가 소유자보다 높지만, 그 격차는 부동산 가격상승여부와 상관없이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론 부분에서 제시한 예측이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자가 거주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상승기에 행복도가 감소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 제5절 추가 분석 2 - 가구주와 가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다음으로 가구주와 가구원 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자가거주자 가운데서도 실제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서베이가 집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주택의 의미가 대체로 가구주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를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표 4-4]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모형1과 모형2는 부동산 안정기, 모형3과 모형4는 부동산 상승기를 분석하고 있다.



[그림 4-6]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 - 가구주

[표 4-4] 부동산 가격 상승과 행복 격차 - 가구주 분석

	(1)	(2)	(3)	(4)
	부동산 안정기		부동산 상승기	
자가소유	0.123*** (0.016)	0.107*** (0.016)	0.079*** (0.013)	0.047*** (0.015)
X 가격 변화율		0.231*** (0.058)		0.438*** (0.100)
가격 변화율	-0.05 (0.060)	-0.179*** (0.069)	-0.554*** (0.087)	-0.782*** (0.101)
상수항	6.322*** (0.038)	6.330*** (0.038)	6.857*** (0.031)	6.873*** (0.031)
Observations	98,967	98,967	120,000	120,000
Log Likelihood	-150,741.20	-150,733.30	-175,945.20	-175,935.60

주: 종속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임. 가구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무작위효과(random effects)를 모두 추정하는 선형복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을 사용했으며, 자치구 무작위효과와 연도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p<0.01, \*\* p<0.05, \* p<0.1

모형1에서 자가 소유의 계수는 양의 값( $b=0.123$ ,  $se=0.016$   $p<0.01$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가구주과 자가 소유를 하지 않은 가구주에 비해 높은 행복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격변화율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갖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 따르면, 부동산 상승기에도 자가 소유는 여전히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 안정기와 비교할 때, 그 효과는 약 64%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격 변화율의 계수는 음의 값( $b=-0.054$ ,  $se = 0.087$ ,  $p<0.01$ )을 갖고 있으므로, 부동산 안정기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큰 자치구에 거주할 수록, 전반적으로 행복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자가 소유변수와 자가 소유변수와 가격 상승률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양의 값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행복격차가 더 벌어짐을 알 수 있다. 모형4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그림 4-6]는 모형2와 모형4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기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a에서,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록 자가 소유의 한계

효과가 증가하며, 자가 거주 가구주와 비자가 거주 가구주 간의 행복격차가 증가한다. 그림c에서 자가 거주 가구주의 행복도는 자치구의 거래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반면, 비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의 행복도는 자치구의 거래가격이 상승할 때 감소하고 있다. 각각의 증가폭과 감소폭을 고려할 때, 행복격차의 확대의 주된 원인은 비자가거주 가구주가 행복도가 감소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에 해당하는 그림b의 경우, 자치구의 거래가격이 상승할수록, 자가 거주 가구주와 비자가 거주 가구주의 행복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효과의 변화는 그림a와 유사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상이하다. 그림d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상승기에,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와 비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모두 행복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비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행복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와의 행복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상승기에 자치구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행복도의 감소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자가 거주 여부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방어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5]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1에서 자가 소유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 $b=0.096$ ,  $se=0.014$ ,  $p<0.01$ )을 갖고 있다. 가구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원들 역시,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3에서도 자가 소유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 $b=0.048$ ,  $se=0.012$ ,  $p<0.01$ )을 갖고 있으나, 그 크기는 모형1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즉, 부동산 상승기에는 가구원들 간에 자가 소유로 인해 누리는 행복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격 변화율의 경우, 가구주의 경우와 달리 가구원들은 부동산 안정기에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자치구에 살고 있을 경우 대체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동산 상승기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상승폭이 큰 자치구에 살수록 행복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부동산 가격 상승과 행복 격차 - 가구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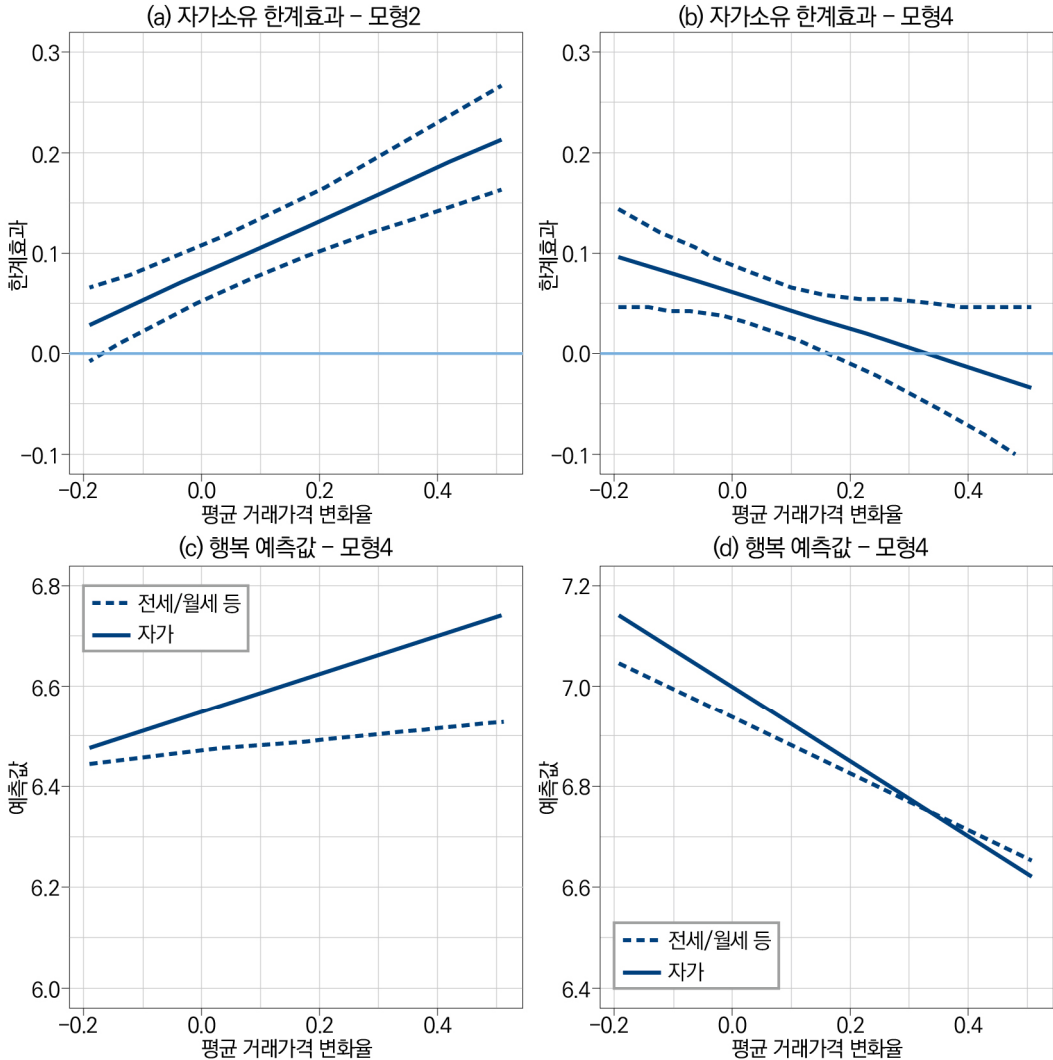
	(1)	(2)	(3)	(4)
	부동산 안정기		부동산 상승기	
자가소유	0.096***	0.079***	0.048***	0.061***
	(0.014)	(0.014)	(0.012)	(0.013)
X 가격 변화율		0.261***		-0.185**
		(0.050)		(0.089)
가격 변화율	0.285***	0.117*	-0.674***	-0.561***
	(0.050)	(0.060)	(0.076)	(0.093)
상수항	6.402***	6.412***	6.946***	6.938***
	(0.033)	(0.033)	(0.026)	(0.026)
Observations	136,093	136,093	151,004	151,004
Log Likelihood	-204,070.40	-204,056.70	-215,683.70	-215,681.50

주: 종속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임. 가구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무작위효과(random effects)를 모두 추정하는 선형복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을 사용했으며, 자치구 무작위효과와 연도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p<0.01, \*\* p<0.05, \* p<0.1

[그림 4-7]은 모형2와 모형4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기를 반영하는 그림a에서 가구원들 사이에서 자가 소유에 따른 행복격차는 자치구의 거래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림c에 따르면, 자가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가구원들의 행복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지만, 자가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원들의 행복이 비자가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원들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림b에 따르면 부동산 하강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가구원들 간의 행복격차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6]의 d에 나타난 가구주들에 대한 분석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그림d에 따르면, 부동산 상승기에는 자가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상승률이 클수록 행복도가 감소하며, 감소의 폭이 자가 거주 가구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가구주들에 대한 분석에서 자가 거주 여부가 부동산 상승기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살펴 본 바 있다. 그림d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자가 거주로 인한 방어 효과가 가구원들에게서는 나타나고 있

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료의 특성상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자가 거주 가구주와 가구원의 차이가 자가의 소유여부라는 점에서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가구주와 가구원의 행복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림 4-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 - 가구원

## 제6절

### 소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장에서는 서울서베이와 실거래가 자료를 결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5개 자치구가 경험한 평균거래가의 변동이 서울시민들의 행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서울시의 전체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매매건수는 약 15만 건 정도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약 7만 5천 건 정도를 기록했다. 이후 2013년~2015년에 걸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반등하여 2015년 이후에는 매년 15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도심권에 속한 중구에서 매매가 가장 적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북권의 노원구, 서남권의 강서구, 서북권의 은평구에서 매매 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을 살펴 보면, 2008년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약 3억원 정도였다. 2012년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서, 2018년에는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까지 상승했다. 권역별로 살펴 보면, 도심권과 동남권의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고,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평균 거래 가격이 가장 높았던 곳은 약 6억 8천만으로 기록한 강남구였으며, 가장 낮았던 구는 평균 거래가 약 2억원에 이뤄졌던 은평구였다. 2018년에도 강남구의 평균 거래 가격이 13억 2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평균 거래 가격이 강남구의 4분1 수준인 3억 2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래 가격의 연간 변화율을 살펴 보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다가, 2013년 이후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2015년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양상은 자치구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다소 편차가 있다. 2018년의 경우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자치구는 성동구로 전년에 비해 약 24% 상승했으며, 영등포구(21%)와 중구(19%)가 뒤를 이었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중랑구(9%), 도봉구(8%), 성북구(9%) 등이다.



이러한 분석은 본 연구가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의 시기를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부동산 안정기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 상승기로 나뉘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에서 2018년까지의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가 거주자는 비자가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평균 거래 가격 상승률이 클수록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행복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행복 격차의 증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가 소유자가 비자가 소유자에 비해 더욱 행복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자가 소유자에 비해 덜 불행해졌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가 소유자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분석 시기를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2008년~2012년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2013~2018년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거주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행복의 감소는 부동산 상승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안정기의 경우, 거주 자치구의 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자가 거주자의 행복도는 상승하는 반면, 비자가 거주자의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상승기에는 자가 거주자와 비자가 거주자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격 상승의 효과가 집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와 자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 내에서 집의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가구주에 대한 분석 결과, 자가 거주 가구주는 비자가 거주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안정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자가 거주 가구주의 행복은 증가하고, 비자가 거주 가구주의 행복은 감소하여 행복 격차가 발생한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자가 거주 가구주와 비자가 거주 가구주 모두 행복의 감소를 경험하지만, 그 폭은 자가 거주 가구주에서 더 작게 나타났다. 자가 거주가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편, 가구원의 경우,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 격차는 부동산 안정기에만 나타나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동

산 안정기에는 거주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자가 거주 가구원과 비자가 거주 가구원 모두 행복도가 증가했으며, 그 폭이 자가 거주 가구원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행복 격차의 원인이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자가 거주 가구원과 비자가 거주 가구원의 행복이 모두 감소했으며, 자가 거주 가구원이 경험하는 감소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 격차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 가구원의 경우, 자가 거주 가구주와 달리, 자가 거주 여부가 부동산 상승기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충격에 대한 방어기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셈이다.

# 제5장

## 결론

---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소득 및 자본의 분배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로 서베이 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서베이 조사는 표본을 추출하여 만들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고자산층이나 저자산층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표본의 대표성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또한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거래되지 않은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가구 소득의 경우, 가구주가 동거하는 취업 자녀의 소득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서베이 자료에 기반을 둔 불평등 지표는 주로 국가 수준에서 구축된다. 샘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도 단위, 혹은 시군구 단위로 나눌 경우, 각 단위가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 수준에서 불평등 지표를 구축할 수 없다. 이는 불평등의 사회·정치적 결과에 대한 엄밀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된다. 객관적 불평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연도별로 관심대상이 되는 종속변수의 국가 수준에서의 평균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불평등의 분산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누락변수로 인한 편향(Omitted Variable Bias)의 문제를 겪게 된다. 게다가 불평등의 사회·정치적 결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은 국가수준의 불평등 수준이나 변화, 그리고 국가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의 분포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인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국가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했다. 2장에서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추정하는 최근 연구들을 소개하고, 자산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2012~2019년의 자산불평등 변화를 살펴본 이성균·신희주·김창환(2020)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8.2%,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5.7%를 차지했다. 이후 조금씩 감소해서 2017년에는 각각 44.3%와 62.2%를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해서, 2019년에는 45.5%와 63.4%를 기록했다. 순 자산 지니계수와 분위배율, 팔마지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김낙년(2019)은 국민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을 활용하여 서베이 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

다. 그에 따르면,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에 의거한 순 자산은 9,022조원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전체 순 자산의 69.4%인 9,022조원만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종류, 부채, 소득구간별로, 파악률의 양상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집중도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상위 10%, 1%, 0.1%에 속하는 개인의 자산 비중이 각각 61.1%, 17.3%, 그리고 4.1%인데, 이를 보완한 자료에서는 각각 62.9%, 23.9%, 10%로 나타났다. 이는 서베이 조사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자산 원천별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 본 연구들에 따르면, 자산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재·이우진 2016; 장영은·이강용·정준호 2017). 부동산 자산의 기여도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2010년대 전반기에 다소 하락했으나, 중반 이후 상승하여, 2019년에는 2010년대에서 가장 높은 74%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전체 부동산 자산의 3분에 1에 미치지 못하는 0.2 수준을 기록했으며, 시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균·신희주·김창환 2020).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가구 순자산 평균은 OECD의 평균 수준이고,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자산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저자산층과 고자산층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간 분위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세 미만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강한 상관성(상관계수 0.4)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세 이상에서는 상관계수 값이 크게 감소했다. 은퇴 후의 소득 감소를 자산을 통해 보완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산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부동산 불평등임을 감안하여, 3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DB의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매매 건수, 평균 거래 가격, 그리고 실거래가에 기반한 지니 계수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 보았다. 실거래 매매 건수로 살펴 보면, 전국적인 수준에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주택 거래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거래량이 증가하다,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매매 평균 거래가격의 경우, 본 연

구에 포함된 첫해인 2006년에 비해 2007년과 2008년에는 하락한 후 2012년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부동산 불평등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2006년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불평등은 계속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데이터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부동산 불평등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형복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을 활용하여 서울 서베이 자료를 분석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동 및 부동산 불평등이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자가 소유 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 소유 여부는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자치구의 부동산 평균거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 소유 가구와 전월세거주 가구 간의 행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격상승에 따른 행복 격차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자가 소유자의 만족도가 상승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월세거주 가구의 만족도가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 가격상승의 효과는 부동산시장 안정기(침체기)와 상승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부동산거래가 줄고, 평균가격이 하락했던, 2008년에서 2013년의 경우, 자치구의 평균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 거주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전월세 거주 가구의 행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평균거래가격이 상승하는 2014년부터 2018년의 경우, 거주 자치구의 평균 거래가격이 상승할수록 자가 거주 가구와 전월세 거주 가구의 행복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경우, 자가 거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가 거주 가구원의 경우, 가구주와 달리 자가 거주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평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DB를 활용하여 부동산 불평등을 측정함으로써, 지역 수준의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서베이 자료에 근거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국가 수준의 분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3장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 양상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 수준의 불평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불평등의 심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경험적 근거는 충분치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가 소유 및 거주 여부에 따른 행복격차를 야기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행복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부동산 안정기와 부동산 상승기에 다르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경우, 거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가 거주자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행복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경우, 거주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민들의 행복도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그 부정적인 충격이 비자가 거주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복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와 개인의 심리적 웰빙(well-being)을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웰빙(well-being)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결어

## 1, 2부 연구의 종합 및 함의

---



1부와 2부의 연구내용은 종합적으로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과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노동시장의 분절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노동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대규모 수요 충격이 예상되는 바, 이는 노동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정부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동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1부의 핵심 발견 사항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노동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라도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 다층적인 노동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는 노동시장 불평등의 다층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노동불평등의 완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부에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을 추정하는 최근 연구들을 소개하고, 자산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자산 소득 상위 10%와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과 2019년 조사 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산 원천별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 본 연구들에 따르면, 자산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자산의 기여도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2010년대 전반기에 다소 하락했으나, 중반 이후 상승하여, 2019년에는 2010년대에서 가장 높은 74%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전체 부동산 자산의 3분에 1에 미치지 못하는 0.2 수준을 기록했으며, 시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성균 외(2020)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분석결과는 서베이 조사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실제 자산불평등을 추계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면, 한국의 가구 순자산 평균은 OECD의 평균 수준이고,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자산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저자산층과 고자산층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간 분위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부동산 불평등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2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DB의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매매 건수, 평균 거래 가격, 그리고 실거래가에 기반한 지니 계수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불평등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2006년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불평등은 계속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거래가 데이터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동 및 부동산 불평등이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자가 소유 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 소유 여부는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자치구의 부동산 평균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 소유 가구와 전월세거주 가구 간의 행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격상승에 따른 행복 격차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자가 소유자의 만족도가 상승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월세거주 가구의 만족도가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가격상승의 효과는 부동산시장 안정기(침체기)와 상승기를 막론하고 특히 전월세 가구의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자산 불평등이 시민들의 실질적 행복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또한 자산 불평등의 증가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the haves)과 그렇지 못한 사람(the have nots) 모두의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자산 가격의 증감 정도가 다르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 양상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수준의 불평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결과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와 개인의 심리적 웰빙(well-being)을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웰빙(well-being)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참고문헌

---

1. 문헌 자료 - 1부
2. 웹사이트
3. 문헌 자료 - 2부



##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문헌 자료 - 1부

#### 국내 문헌

- 강동욱(2005),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성 연구」, 사회복지정책, 21, pp.111-128.
- 강순희(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87(2), pp. 317-347.
- 강승복(2005),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노동리뷰, 9, pp. 56-62.
- 강주연·김기승(2014), 「여성 근로자 분포와 직무에 따른 직종별 남녀 임금격차 분석」, 노동경제논집, 37(4), pp. 141-222.
- 고용노동부(2020),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20),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유인과 공헌 균형이론의 적용」, 인사관리 연구, 28(3), pp. 79-109.
- 조순경(1993), 「파견근로제의 도입배경과 문제점」, <무권리, 이중착취·용역노동의 실태와 대응> 공동토론회 자료집.
- 권혜자(2005),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36차 노동포럼.
- 김기승·김명환(201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해분석을 통한 기업 규모별 임금체계 비교」, 산업관계연구, 26(2), pp. 141-161.
- 김난주(2015), 「남녀 동일 임금 어떻게 이를 것인가」, 「2015 동일임금의 날 Equal Pay, Fair Pay!」, 동일임금의 날 정책워크숍(2015. 5. 23.), 행동하는 여성연대.

- \_\_\_\_\_ (2017).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9(2), pp. 69-124.
- 김두환(2018), 「로봇시대의 불평등: 일의 미래, 사회의 미래」, 사회사상과 문화, 21(4), pp. 173-209.
- 김복순(2006),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노동리뷰, 3, pp. 64-74.
- \_\_\_\_\_ (2019), 「최근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 노동리뷰, 1, pp. 107-131.
- 김성희(2020), “한국의 양극분해형 노동체제와 대안의 모색,” pp. 9-39, 이용득, 2020, 「한국형 노동회의소도입방안」, 더불어민주당,
- 김수현(2019),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평균 및 분위별 임금격차 추이」, 산업노동 연구, 25(3), pp. 291-327.
- \_\_\_\_\_ (2016),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김영미(2015),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복합성: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의 차이」, 경제와 사회, 106, pp. 205-237.
- 김영미·한준(2008),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본 한국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1982-2004」, 한국사회학, 42(7), pp. 111-145.
- 김영식(2019), 「AI 와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최근 문헌 개관과 정책 함의」, 한국경제포럼, 12(3), pp. 1-34.
-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_\_\_\_\_ (2009).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 요인: 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 산업관계연구, 19(2), pp. 1-25.
- \_\_\_\_\_ (2014),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42, pp. 1-15.
- 김은하·김영미(2012), 「한국의 다차원적 성별 임금격차 연구」, 2012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은하·백학영(2012), 「성별 저임금근로의 위험과 임금격차」, 노동정책연구, 12(2), pp. 75-104.
- 김형근·임영언·김일태(2020),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4(2), pp. 139-160.
- 김혜정·배진한·박창귀(2017),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노동경제논집, 40(1), pp. 1-36.
- 김훈(201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고용법제 국제비교 연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 남재량(2007),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30(2), pp. 1-31.
- 남재량·이인재·이기재(2005),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서울: 노동부.
- 노용진·원인성(2003),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 노동정책연구, 3(2), pp. 47-67.
- 류기락(2009), 「일자리 이동과 내부노동시장: 한국노동패널(1988-2005)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4), pp. 37-76.
- 문선희(2013), 「기업복지제도가 기혼 직장여성의 가정생활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제도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8(1), pp. 119-141.
- 문영만·김종호(2018),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및 직무만족도 분석」, 지역사회연구, 26(1), pp. 69-87.
- 박기성·김용민(2007),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비교: 2003년과 2005년」, 노동정책연구, 7(3), pp. 35-61.
- 박진희(2007), 「여성 직장이동의 특징」, 여성경제연구, 4(2), pp. 25-44.
- 박세일(1984),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남녀별 임금격차」, 박원구·박세일, 한국의 임금구조, 한국개발연구원, pp. 181-226.
- 반정호(2006), 「고용형태별 복리후생 수준의 차이」, 노동리뷰, 15, pp. 28-38.

- 배화숙(2005),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 연구: 한국노동패널(KLIPS) 6차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1, pp. 217-237.
- 백학영·구인회(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pp. 87-117.
- 서형준(2019),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탐색적 논의」, 정보화 정책, 26(3), pp. 3-35.
- 신광영(2004), 「계급, 성과 일자리 이동」, 한국사회학, 38(1), pp. 25-50.
- \_\_\_\_\_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pp. 97-127.
- 신경수·송일호(2004),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와 성별 임금격차분석」, 창업정보학회지, 7(2), pp. 81-100.
- 신승배(2009), 「한국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임금차별 영향 변동추이」, 제10회 노동패널 학술대회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2001), 「한국노동패널 특집: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24(1):, pp. 67-96.
- \_\_\_\_\_ (2006), 「정규-비정규근로자간 능력개발 기회의 격차」, 노동리뷰, 2, pp. 21-32.
- 안주엽·김동배·이시균(2003),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
- 안태현(2012), 「임금분포에 따른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응용경제연구, 14(1), pp. 127-149.
-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윤석천·김주일(2005),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서울: 노동부.
- 엄효진·이명진(2020),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1(3), pp. 1-20.
- 오세욱·이소은·최순욱(2017), 「기계와 인간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가?: 기계학습을 통해 본 쟁점과 대안」, 정보사회와 미디어, 18(3), pp. 63-96.

- 오유진·김교성(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 연구, 19(3), pp. 1-35.
- 이문호(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을 무엇인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노동N이슈, 32, pp. 1-8.
- 이인재(201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을 이용한 추정」, 노동경제논집, 34(3), pp. 119-139.
- 임다희·조일형·권기현(2014), 「대졸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금 및 직무 만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6(3), pp. 529-554.
- 임숙(1988),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력 차별에 관한 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운택(2018), 「경제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 독일 산업 4.0을 중심으로」, 집문당.
- 장지박(2011), 「기업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지연·정이환·전병유·이승렬·조성재·강성태(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노동연구원.
- 장혜연(2010), 「한국과 일본의 기업별 노조체제의 특수성: 내부 노동시장과의 정합성 및 비정규 노동 문제와의 함의」, 동아연구, 58, pp. 183-227.
- 전병유(2011),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비정규직: 효율성의 위기와 통합의 위기」, 시민과 세계 20, pp. 146-152.
- 정이환(2007), 「기업 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경제와사회, 73, pp. 332-355.
- \_\_\_\_\_ (2013),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1982-2007: 직종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7(5), pp. 209-240.
- 정재만·설원식(2020), 「한국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18(2), pp. 19-26.
- 정진화(2007),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 노동경제논집, 30(2), pp. 33-60.

- 정현주·김권주(2017), 「고학력여성 지역내 취창업 영향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pp. 1-179.
- 조동훈(2014), 「한국노동시장 임금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pp. 1-24.
- 조상미·박은주(2011), 「기업복지제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pp. 197-226.
- 조성재·이병훈·홍장표·임상훈·김용현(2004),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 조우현·황수경(2016), 「새로운 노동경제학」, 법문사.
- 조인숙(2015), 「대졸자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에 있어서 남녀차이」, 여성경제연구, 12(1), pp. 123-162,
- 최균(2002), 「한국노동시장 구조의 분절과 기업복지 급여의 불평등: 이중노동시장론과 효율임금이론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3, pp. 172-206.
- 최효승·손영미(2017), 「인공지능과 예술창작 활동의 융복합 사례분석 및 특성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8, pp. 289-299.
-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동우(2011), 「노동시장 및 기업복지의 양극화 실태와 과제」, 복지동향, 15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pp. 21-26.
- 황건하·이상엽(2003),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 황광훈(2017), 「청년 취업자의 성별 임금격차 분석」, 2017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 노동경제학회 자료집, 노동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17. 2. 9).
- 황덕순(2003),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노동정책연구, 3(3), pp. 87-109.
- 황수경(2003),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3(3), pp. 49-86.

- 황호영·김공수(1995),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8(2), pp. 177-191.
- 황호영·임은란(2000),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비교연구-'91년과 '97년의 두 시점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3(1), pp. 409-420.
- 허재준(2017).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노동리뷰, 3, pp. 62-71.

## 해외 문헌

- Abowd, J. M., Kramarz, F. and Margolis, D.N.(1999), “High wage workers and high wage firms”, *Econometrica*, 67(2), pp. 251-333.
- Acemoglu, D., and Restrepo, P.(2019), “Automation and new tasks: how technology displaces and reinstates labo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2), pp. 3-30.
- Ahn, S. H., and Lee, M. H.(2016),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mpact: How it changes jobs”,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pp. 2344-2363.
- Antonov, A. A.(2011),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to human super-intelligence [J]”, *Artificial Intelligence*, 2(6), pp. 1-6.
- Appleton, S., Hoddinott, J. and Krishnan, P.(1999), “The gender wage gap in three African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7(2), pp. 289-312.
- Atkinson, A. B.(1983), *The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Clarendon Press.
- Baek, S. I., Lim, G. G., and Yu, D. S.(2016), “Exploring Social Impact of AI”, *Informatization Policy*, 23(4), pp. 3-23.
- Barón, J. D., and Cobb-Clark, D. A.(2010), “Occupational segregation and the gender wage gap in private-and public-sector employment: a distributional analysis”, *Economic Record*, 86(273), pp. 227-246.

- Bell, L. A.(2005), Women-led firms and the gender gap in top executive jobs, IZA discussion paper 1689, IZA, Bonn
- Benito , A.(2000),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in Great Britain”,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 pp. 727-746.
- Bergmann, B. R.(1974), “Occupational segregation, wages and profits when employers discriminate by race or sex”, Eastern Economic Journal, 1(2), pp. 103-110.
- Blinder, A. S.(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pp. 436-455.
- Booth, Allison L. and Marco Francesconi.(1999), “Job Tenure and Job Mobility in Britain”,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53(1), pp. 43-71.
- Brynjolfsson, E., and McAfee, A.(2014),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 Bush, V.(1945), “As we may think”, The Atlantic Monthly, 176(1), pp. 101-108.
- Cain, G. G.(1976), “The Challenge of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o Orthodox Theory: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4), pp. 1215-1257.
- Caruso, L.(2018), “Digital innovation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pochal social changes?”, Ai & Society, 33(3), pp. 379-392.
- Charniak, E., and McDermott, D.(1985),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g, MA: ADDISON.
- Cliff, Valerie.(2018),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could Smash Gender Inequality or Deepen It”, <https://www.weforum.org/agenda/2018/03>.
- Davenport, T. H., and Kirby, J.(2016), “Just how smart are smart machine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57(3), pp. 21-25.

- DeCanio, S. J.(2016), “Robots and humans-complements or substitutes?”, *Journal of Macroeconomics*, 49, pp. 280-291.
- Doeringer, P. B., and Piore, M. J.(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djustment*, New York: DC Heath and Company.
- \_\_\_\_\_ (1975). “Unemployment and the Dual Labor Market.” *The Public Interest* 38, pp. 67.
- Eggers, W. D.(2007), *Government 2.0: Using technology to improve education, cut red tape, reduce gridlock, and enhance democracy*, Rowman & Littlefield.
- Frey, Carl Benedikt and Michael A. Osborne,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4, pp. 254-280.
- Furman, J., and Seamans, R.(2019), “AI and the Economy”,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9(1), pp. 161-191.
- Gibbons, R. and Katz, L. F.(1992), “Does unmeasured ability explain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9(3), pp. 515-535.
- Gingrich, Jane and Ben Ansell,(2012), “Preference in Context: Micro Preference, Macro Context and the demand for Social Poli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12), pp. 1624-1654.
- Goux, D. and Maurin, E.(1999), “Persistence of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 reexamination using matched worker-fir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3), pp. 492-533.
- Gregory, M. and P. Elias.(1994), “The earnings transitions of the low paid in Britain, 1976-1991: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15, pp. 170-88.

- Halford, S., Savage, M. and Witz, A.(1997), *Gender, Careers and Organisations*. London: Macmillan.
- Hirsh, W.(1990), *Women into Management: Jumping the Hurdles... or Knocking Them Down*. Coutts Occasional Papers, Coutts Careers Consultants Ltd, London.
- Hodson, Randy and Robert Kaufman.(1982), "Economic dualism: a critical review", *ASR* 47: pp. 729-739.
- Huang, M. H., and Rust, R. T.(2018), "Artificial intelligence in service", *Journal of Serviced Research* 21(2), pp. 155-172.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IFR) (2017), *World Robot Statistics*.
- Ivanov, D., Dolgui, A., Sokolov, B., Werner, F., and Ivanova, M.(2016), "A dynamic model and an algorithm for short-term supply chain scheduling in the smart factory industry 4.0",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54(2), pp. 386-402.
- Kalleberg, Arne L.(2003), "Flexible Firms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Effect of Workplace Restructuring in Jobs and Workers", *Work and Occupations* 30(2), pp. 154-175.
- Kim, Y. (2016), "Study on establishing data driven policy", *Intelligence Study Series*, Daegu: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im, Y. M.(2016), "The Paradigm Shif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Law and Policy", *Informatization Policy*, 23(4), pp. 24-37.
- Kunze, A., and Miller, A. R.(2017), "Women helping women? Evidence from private sector data on workplace hierarch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5), pp. 769-775.
- Kurzweil, R., Robert, R. and Schneider, M.L.(1990), *The Age of Intelligent Machines*, Cambridge: MIT Press.



- Lee, J., Davari, H., Singh, J. and Pandhare, V.(2018), “Industrial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dustry 4.0-based manufacturing systems”, *Manufacturing letters*, 18, pp. 20-23.
- Lee, J. and Kim, Y.(2014), “Industry 4.0 and manufacturing creative economy strategy.” *IT & Future Strategy*, 2, Daegu: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Liff, S. and Ward, K.(2001), “Distorted Views through the Glass Ceiling: The Construction of Women’s Understandings of Their Promotion and Senior Management Positions”,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8(1), pp. 19-35.
- Longo, F. L. Nicoletti, and A. Padovano, 2017 “Smart operators in industry 4.0: A human-centered approach to enhance operators’ capabilities and competencies within the new smart factory context.”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 113, pp. 144-159.
- Luger, George F. and William A. Stubblefield.(1993), *Artificial intelligence (2nd ed.):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complex problem-solving*.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 Inc.
- Luo, X., Tong, S., Fang, Z., and Qu, Z.(2019), “Frontiers: Machines vs. humans: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disclosure on customer purchases”, *Marketing Science*, 38(6), pp. 937-947.
- Macis, M., Flabbi, L., Moro, A., and Schivardi, F.(2014), “Do Female Executives Make a Difference? The Impact of Female Leadership on Gender Gaps and Firm Performance”, *Cornell University, ILR School*, pp. 1-40.
- MacKenzie, D., and Wajcman, J.(1999),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Open university press.
- Manyika, J., Lund, Susan., Chui, M., Bughin, J., Woetzel, J., Batra, P., Ko, R., and Sanghvi, S.(2017), *Jobs lost, jobs gained: Workforce transitions in a time of automation*, McKinsey Global Institute.

- Martin Oelz, Shauna Olney, and Manuela Tomei.(2013), Equal pay an introductory guide, ILO.
- McCall, L.(2005), “The Complexity of Intersectionality”, Signs, 30(3), pp. 1772-1800.
- McCarthy, J., Minsky, M. L., Rochester, N. and Shannon, C.E.(1955), A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Dartmouth College. AI Magazine.
- McDonald, I. M., and Solow, R. M.(1985), “Wages and Employment in a Segmented Labor Marke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0(4), pp. 1115-1141.
- Mehr, H., Ash, H., and Fellow, D.(2017),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itizen services and government”, Ash Cent. Democr. Gov. Innov. Harvard Kennedy Sch., no. August, pp. 1-12.
- Melamed, T.(1995), “Career success: The moderation effect of gend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7, pp. 35-60.
- Mincer, J. A.(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ncer, J., and Polachek, S.(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S76-S108.
- Mitchell, T. R., Holtom, B. C., Lee, T. W., Sablinski, C. J., and Erez, M.(2001), “Why people stay: Using job embeddedness to predict voluntary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6), pp. 1102-1121.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2016),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Oaxaca, R.(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pp. 693-709.

- OECD(2019), 2019 Employment outlook.
- Petersen, T., and Morgan, L. A.(1995), “Separate and unequal: Occupation-establishment sex segregation and the gender wage gap”,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2), pp. 329-365.
- Osterman, P.(1982), “Employment Structures Within Firm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0(3), pp. 349-361.
- Piore, Michael J. and Charles F. Sable.(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y for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강석재·이호창 역, 「생산 혁신과 노동의 변화 - 포스트 포드주의 논쟁」, 새길, 1993).
- Rich, E. and Knight, K.(1991), *Artificial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 Russell, S.(1986), “The social construction of artefacts: a response to Pinch and Bijker”, *Social studies of science*, 16(2), pp. 331-346.
- Russell, S. J., Norvig, P., Canny, J. F., Malik, J. M. and Edwards, D.D.(2003),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 Smith, C.(2006), *The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 Smithson, J. and Stokoe, E.(2005), “Discourses of Work-Life Balance: Negotiating ‘Genderblind’ Terms in Organisation”, *Gender, Work and Organisation*, 12(2), pp. 147-168.
- Sorensen, A. B.(1983), “Sociological Research on the Labor Market: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 *Work and Occupations* 10, pp. 261-287.
- Turing, I. B. A.(1950),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AM Turing”, *Mind*, 59(236), pp. 433-464.
- Weed, Kim and David B. Grusky(2012). “The Three Worlds of Inequ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6, pp. 1723-1785,

Wilson, E. M.(1998), “Gendered Career Paths”, *Personnel Review*, 27(5), pp. 396-411.

Wirtz, J., Patterson, P. G., Kunz, W. H., Gruber, T., Lu, V. N., Paluch, S., and Martins, A(2018), “Brave new world: service robots in the frontline”,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9(5), pp. 907-931.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Wren, Anne., ed.(2013), “The Political Economy the Service Tran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 웹사이트

중앙일보, “현대차 1만5000명 퇴직해도...추가고용 계획 전혀 없는 까닭.” 2020/1/23.  
<https://news.joins.com/article/23688854>

조선일보 “비정규직 늘린 ‘세금 일자리’...“노동시장 양극화 심해져” 2019/10/2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1309.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1309.html)

서울신문.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가장 큰 원인... 직무능력으로 임금 받아야” 2020/6/3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1309.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1309.html)

### 3 문헌 자료 - 2부

#### 국내 문헌

- 강은택·정효미. 2015. “노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13(1): 109-21.
- 강우진. 2018. “불평등과 투표참여 - 동아시아 민주주의 4개국 비교연구.” 평화연구 26(1): 245-78.
- 권혁용·한서빈. 2018.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정부학연구 24(2): 61-84.
- 김낙년. 2016.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3-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40(3): 393-429.
- \_\_\_\_\_. 2019.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경제사학 43(3): 437-82.
- \_\_\_\_\_. 2020.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7(1): 39-61.
- 김동훈·하상용. 2020. “소득 불평등 인식과 정부신뢰: 주관적 계층 상승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28(1): 49-85.
-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1): 129-67.
- 김현정. 2016. “소득불평등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계층상승 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559-86.
- 박선경·이내영. 2018.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현대정치연구 11(3): 5-32.
- 신광영·계봉오·신희주·이도훈·이성균·최을·최성수·황선재. 2020. “자산 불평등 자료 분석.”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3: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97-137.
- 백승주·금현섭. 2012. “소득불평등과 복지정책선호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411-40.

- 신진욱. 2013.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41-70.
- 이보윤·김동훈. 2015.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31(2): 149-76.
- 이성균·신희주·김창환. 2020. “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 연구 성과와 과제.” 경제와 사회 127: 60-94.
- 이성재·이우진. 2017. “샤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57-109.
- 이양호·지은주·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2): 20.
-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2): 29-59.
- 이철승·황인혜·임현지.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 자산 불평등, 보험욕구, 복지 선호도, 2007 - 2016.” 한국정치학회보 52(5): 1-30.
- 이현경·권혁용. 2016. “한국의 불평등과 정치선호의 계층화.” 한국정치학회보 50(5): 89-108.
- 이현기. 2019. “주거환경 관련 특징과 중년이후 삶의 만족도 중단 관계 - 주거형태와 주택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1(2): 195-221.
-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한국정당학회보 10: 43-66.
- 장영은·이강용·정준호. 2017. “거주주택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15(3): 19-33.
- 전병주·최은영. 2015.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 주거 점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7.
- 정재훈. 2012. “주거환경이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1(6): 121-28.
- 정준호·전병유. 2020. “소득과 자산의 연계 불평등 현황 분석.” 2020. “자산 불평등 자료 분석.”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3: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조동현·권혁용. 2016. “무엇이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소득불평등, 기회불평등, 그리고 행복의 균열구조.” OUGHTOPIA 31(1): 5-39.
- 현승숙·금현섭. 2011.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에 따른 주민참여.” 한국행정학보 45(2): 159-86.
- 황선재·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 인구학 41(4): 65-88.

## 해외 문헌

- Brounen, Dirk, Ruben Cox, and Peter Neuteboom. 2012. “Safe and Satisfied? External Effects of Homeownership in Rotterdam.” *Urban Studies* 49(12): 2669-91.
- Chen, Jie, William Hardin, and Mingzhi Hu. 2020. “Housing, Wealth, Income and Consumption: China and Homeownership Heterogeneity.” *Real Estate Economics* 48(2): 373-405.
- Cheng, Zhiming, Kushneel Prakash, Russell Smyth, and Haining Wang. 2020. “Housing Wealth and Happiness in Urban China.” *Cities* 96: 102470.
- Clapp, John M., Anupam Nanda, and Stephen L. Ross. 2008. “Which School Attributes Matter? The Influence of School District Performance and Demographic Composition on Property Valu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3(2): 451-66.
- Clark, Julie, and Ade Kearns. 2012. “Housing Improvements, Perceived Housing Quality and Psychosocial Benefits From the Home.” *Housing Studies* 27(7): 915-39.
- Coates, Dermot, Paul Anand, and Michelle Norris. 2013. “Housing, Happiness and Capabilities: A Summary of the International Evidence and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ics* 21(3): 181-214.

- Davies, James, Rodrigo Lluberas, and Anthony F Shorrocks. 2017. Global Wealth Report 2017.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Zurich.
- Dietz, Robert D., and Donald R. Haurin. 2003. "The Social and Private Micro-Level Consequences of Homeownership." *Journal of Urban Economics* 54(3): 401-50.
- DiPasquale, Denise, and Edward L Glaeser. 1999. "Incentives and Social Capital: Are Homeowners Better Citizen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5(2): 354-84.
- Downes, Thomas A., and Jeffrey E. Zabel. 2002. "The Impact of School Characteristics on House Prices: Chicago 1987-1991."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1): 1-25.
- Duesenberry, J. 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lsinga, Marja, and Joris Hoekstra. 2005. "Homeownership and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0(4): 401-24.
- Fischel, William A. 2001. *The Homevoter Hypothesis*. Harvard University Press.
- Foye, Chris, David Clapham, and Tommaso Gabrieli. 2018. "Home-Ownership as a Social Norm and Positional Goo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Panel Data." *Urban Studies* 55(6): 1290-1312.
- Franko, William W. 2017. "Understanding Public Perceptions of Growing Economic Inequality."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17(3): 319-48.
- Galster, George C. 1987. *Homeowners and Neighborhood Reinvestment*. Duke University Press.
- Gelman, Andrew, and Jennifer Hill. 2007. *Data Analysis Using Regression and Multilevel/Hierarchical Mod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mpelson, Vladimir, and Daniel Treisman. 2018. "Misperceiving Inequality." *Economics & Politics* 30(1): 27-54.
- Goodman, Laurie S., and Christopher Mayer. 2018. "Homeownership and the American Drea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2(1): 31-58.
- Gorman-Murray, Andrew, Andrew Gorman-Murray, and Peter Hopkins. 2014. "Materiality, Masculinity the Home: Men and Interior Design." In *Masculinities and Place*, London: Routledge. 209-26.
- Gruis, Vincent, Marja Elsinga, Arjen Wolters, and Hugo Priemus. 2005. "Tenant Empowerment Through Innovative Tenures: An Analysis of Woonbron-Maasoever's Client's Choice Programme." *Housing Studies* 20(1): 127-47.
- Guyen, Cahit, and Bent E. Sørensen. 2012. "Subjective Well-Being: Keeping Up with the Perception of the Jones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9(3): 439-69.
- Haurin, Donald R., and David Brasington. 1996. "School Quality and Real House Prices: Inter- and Intrametropolitan Effects."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5(4): 351-68.
- Hauser, Oliver P., and Michael I Norton. 2017. "(Mis)Perceptions of Inequal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21-25.
- Herbert, Christopher E., and Eric S. Belsky. 2008. "The Homeownership Experience of Low-Income and Minority Households: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Cityscape* 10(2): 5-59.
- Hofmann, David A., and Mark B. Gavin. 1998. "Centering Decisions in Hierarchical Linear Models: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24(5): 623-41.
- Hu, Mingzhi, and Wenping Ye. 2020. "Home Owner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A Perspective from Ownership Heterogene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3): 1059-79.

- James III, Russell N. 2007. "Multifamily Housing Characteristics and Tenant Satisfaction." *Journal of Performance of Constructed Facilities* 21(6): 472-80.
- Jäntti, Markus, Eva M Sierminska, and Philippe Van Kerm. 2015. *Modeling the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Johnston, Christopher D., and Benjamin J. Newman. 2016. "Economic Inequality and U.S. Public Policy Mood Across Space and Time." *American Politics Research* 44(1): 164-91.
- Kleinhans, Reinout, and Marja Elsinga. 2010. "'Buy Your Home and Feel in Control' Does Home Ownership Achieve the Empowerment of Former Tenants of Social Hou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Policy* 10(1): 41-61.
- La Grange, Adrienne, and Frederik Pretorius. 2000. "Ontology, Policy and the Market: Trends to Home-Ownership in Hong Kong." *Urban Studies* 37(9): 1561-82.
- Lu, Xiaomeng, Jiaojiao Guo, and Li Gan. 2020.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ousehold Asset Allocation: Micro-Evidence from Cross-Country Comparisons." *Emerging Markets Review* 43: 100691.
- McCabe, Brian J. 2013. "Are Homeowners Better Citizens? Homeownership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91(3): 929-54.
- Newman, Benjamin J., and Thomas J. Hayes. 2019. "Durable Democracy? Economic Inequality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the New Gilded Age." *Political Behavior* 41(1): 5-30.
- Newman, Benjamin J., Christopher D. Johnston, and Patrick L. Lown. 2015. "False Consciousness or Class Awareness? Local Income Inequality,

- Personal Economic Position, and Belief in American Merit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2): 326-40.
- Newman, Benjamin J., and John V. Kane. 2017. “Economic Inequality and Public Support for Organized Labor.”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0(4): 918-32.
- Newman, Benjamin J., Sono Shah, and Erinn Lauterbach. 2018. “Who Sees an Hourglass? Assessing Citizens’ Perception of Local Economic Inequality.” *Research & Politics* 5(3): 1-7
- Newman, Sandra J., and C. Scott Holupka. 2013.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in Homeownership Research.” *Cityscape* 15(2): 235-46.
- Piketty, T., and E. Saez. 2014. “Inequality in the Long Run.” *Science* 344(6186): 838-43.
-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lknap Press.
- Riley, Sarah F, HongYu Ru, and Qing Feng. “The User Cost of Low-Income Homeownership.” *The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43(2): 123-37.
- Rohe, William M., and Michael A. Stegman. 1994.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On the Self-Esteem, Perceived Control and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Peopl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0(2): 173-84.
- Rohe, William M, and Leslie S Stewart. 1996. “Homeownership and Neighborhood Stability.” *Housing policy debate* 7(1): 37-81.
- Rossi, Peter H, and Eleanor Weber. 1996. “The Social Benefits of Homeownership: Empirical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Housing policy debate* 7(1): 1-35.

- Saegert, Susan C. et al. 2003. "Healthy Housing: A Structured Review of Published Evaluations of US Interventions to Improve Health by Modifying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1990-2001."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1471-77.
- Skopek, Nora, Sandra Buchholz, and Hans-Peter Blossfeld. 2011. *Wealth Inequality in Europe and the Delusive Egalitarianism of Scandinavian Countries*. University of Bamberg.
- Veblen, Thorstein. 1992.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Routledge.
- Zheng, Xian, Zi-qing Yuan, and Xiaoling Zhang. 2020. "Does Happiness Dwell in an Owner-Occupied House? Homeowner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in Urban China." *Cities* 96: 102404.
- Zumbro, Tim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ownership and Life Satisfaction in Germany." *Housing Studies* 29(3): 319-38.

# Abstract

---



## A Study on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rowing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Chapter 1 of this research examines labor market inequality in Korea. It looks in particular at the division of labor by gender, employment type, and the size of firms. In addition, it analyzes recen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pter 2 deals with asset inequality in Korea, and carefully examines the impact of rising real estate price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households who rent and who own their dwellings.





**한국의 불평등 연구 :**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인 쇄** 2020년 12월 27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http://www.nafi.re.kr)  
**인 쇄 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

©2020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47-2 (93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